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2002 9·10 월호

www.kedi.re.kr

특별기획 소외계층의 교육

파워 인터뷰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이슈진단
-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 한국의 고등교육, 적극적 글로벌화만이 살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72년에 설립되어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02 • 3460 • 0114 www.kedi.re.kr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김 신 복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sbkim1@moe.go.kr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과거 의식주의 해결에 급급하던 생존 경쟁에서 문화적 가치의 추구가 삶의 중심 가치로 대두되는 이른바 삶의 질을 위한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아울러 지식과 정보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상황에서 개인간, 계층간 지식 · 정보격차에 따른 경제적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 · 정보격차의 해소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 · 기술의 습득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교육기회의 보장과 인적자원 개발은 모든 국가의 핵심적 사회통합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의 잠재력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곧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무라고 하겠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신장을 돕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프랑스나 영국의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정책은 "혜택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제공하자"는 적극적 교육복지 실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후반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난 50년간의 교육의 양적 팽창에 이은 질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할 만하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초능력을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복지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5만명)에 대한 컴퓨터 무상보급 및 교육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 등의 정책은 계층간 지식 ·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수립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확대, 중 · 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기회 확충 등 소외계층의 교육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영 · 유아 교육 및 보호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지역의 학교교육, 대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문제 등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국토개발계획, 주택정책, 문화정책 등 여타 분야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서 그들에 대한 적극적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

CONTENTS

교육개발 135호 2002년 9·10월호

06 Power Interview

이 종 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우리교육은 나만을 위한 경쟁의 구조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협력의 구조가 절실합니다"

14 월드컵이후의 한국교육

축구감독 히딩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

현 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7 특별기획

"소외계층의 교육"

18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정명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22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김찬호(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27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경숙(국립특수교육원 원장)

35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을 위해
라복기(양원주부학교 교무부장)

38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방향
정택희(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장)

44 소외계층의 교육: 미국을 중심으로
이정선(광주교육대학교 교수)

50 이슈진단

50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4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57 한국의 고등교육,
적극적 글로벌화만이 살길이다
이만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63 세계의 교육

64 미 국 | '자율적 학교 선택과 바우하우처 프로그램(voucher program)'
김영주(시카고 통신원)

70 독 일 | '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 그 이후'
권미연(베를린 통신원)

76 중 국 | '중국교육의 십년변혁'
강영민(북경사범대학 교수)

79 러시아 | '러시아 체제 전환과 대학 교육의 변화'
김계환(모스크바 통신원)

84 영 국 | '학교 입학연령(Starting-age)'
하태욱(런던 통신원)

88 일 본 | '새 교육과정의 실시와 불붙은 학력 저하 논쟁'
이정미(도쿄세이토쿠대학 교수)

93 창의성 계발교육 '창의성'에 대한 이해
서혜애(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100 지금 세계의 석학들은…

104 Research Findings '최근의 연구동향'
김은주(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106 신간안내 '이럴땐 이런 책'

110 독자의 소리

좋은생각

기다림

농부는 씨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며
뜰 앞에 꽃씨 심고 봄도 기다린다.

강태공들 낚시 드리우고
월척을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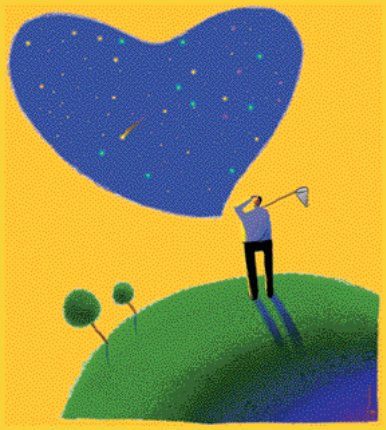
간이역 대합실 어린 소녀는
우산하나 달랑들고 엄마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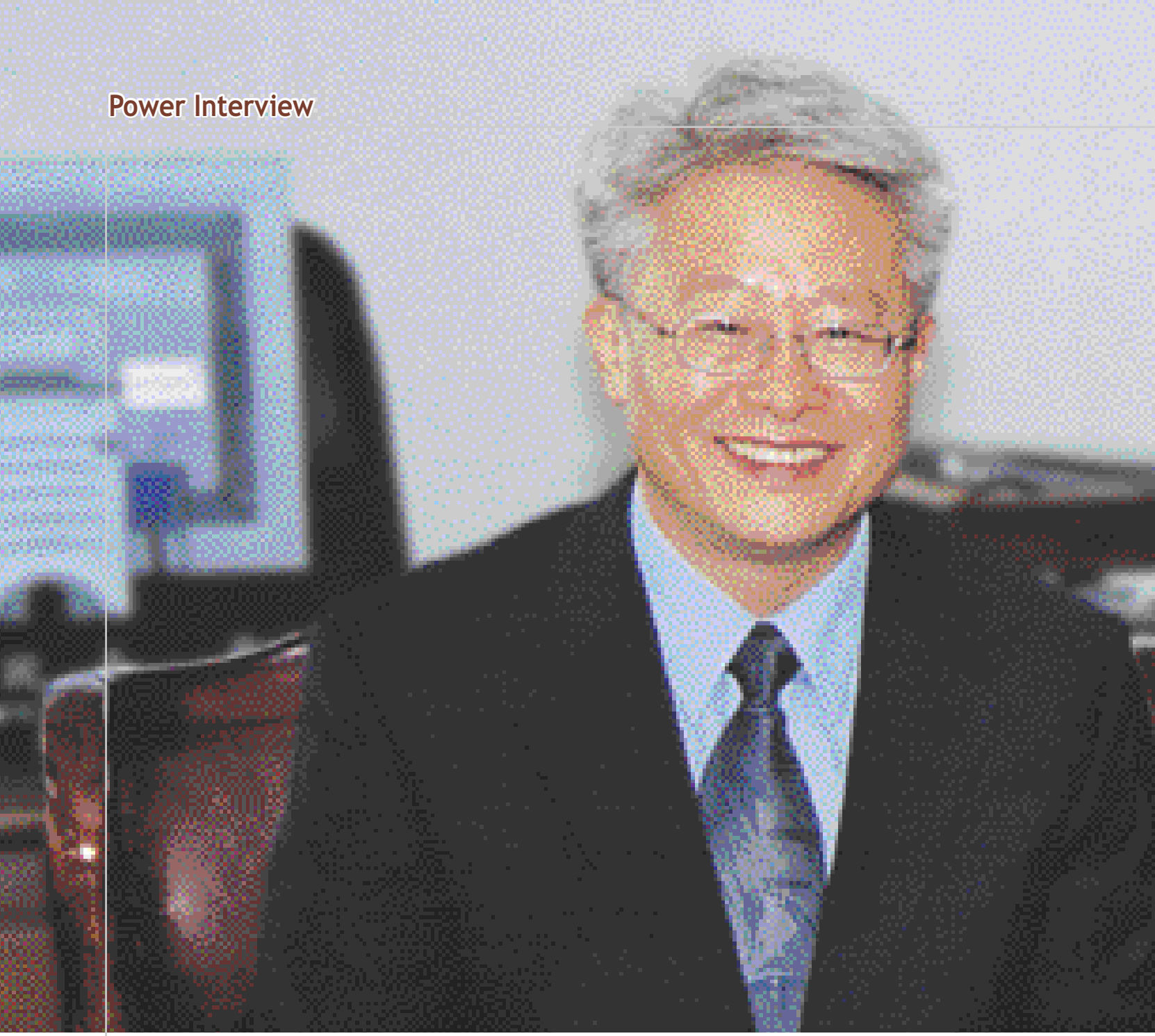
역앞 모퉁이 풀빵 장수도
손님 기다리며 손놀림 바쁘다.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서 꿈을 그리고
꿈이 있기에 오늘을 열심히 산다.

윤석구 '곤지암 동산에 꽃이 피네' 中





이 종 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우리교육은 나만을 위한 경쟁의 구조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협력의 구조가 절실합니다

대담 구 자 억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jogu@kedi.re.kr

Q 한국교육개발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지요.

A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육도 많이 발전했고 교육에 관련된 연구기능도 분화 ·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교육개발원도 종합교육연구기관에서부터 교육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립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확립하는 Mission Statement를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물론 존재하는 당위성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는 정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Mission Statement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활동에 역점을 두어 점검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Mission Statement에 입각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진해야 될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정립하고 여기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 기능을 확실히 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동안 쌓아온 공적의 토대 위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명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추어 새로운 방향으로 과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Q 초 · 중등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죽은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산 교육'을 한다면 큰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A 교육에 대한 요구는 크게 개인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요구는 한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개념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경제적인 맥락에서 경제적인 부의 창출과 관련된 인적기능만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을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성숙한 도덕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심성의 계발과 같은 "social capital"의 축적,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인 책무성과 예술적인 창조성, 그리고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교양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소는 총칭해서 한국사회의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간 능력의 계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적합한 지위획득을 위한 교육, 즉 지위경쟁을 결정하는 교육의 측면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것이 동시에 사회적인 발전으로 직결되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 사이의 갈등이나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지위확보를 위한 교육경쟁이라는 개인적인 요구 사이에서의 마찰과 긴장, 그리고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교육이 계발기능보다는 소위 경쟁과 선발기능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

●●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경쟁구조라고 하는 것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가 이 엄청난 압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전체가 'win or lose'와 같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다같이 사는 경쟁구조와 협조체제를 강행하여 학교교육이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 둘째, 학교 스스로 현재의 과열된 경쟁구조에서 어느 정도 합당한 교육적 경쟁구조로 순화시켜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것은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하나의 큰 구조적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경쟁구조라고 하는 것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스스로가 이 엄청난 압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전체가 'win or lose'와 같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다같이 사는 경쟁구조와 협조체제를 강행하여 학교교육이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학교 스스로는 현재의 과열된 경쟁구조에서 어느 정도 합당한 교육적 경쟁구조로 순화시켜나가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의 이해, 협조와 자제, 그리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지도(어려운 학생에 대한 각별한 배려 포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학교교육은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안고 있더라도 효율과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커다란 접근의 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먼저 교육 담당자들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절망감을 갖기보다는 낙관적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부모가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현 실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는 학생 자신에 대한 정보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일종의 'illusion factor'(잘못된 관념에 의한 비현실적인 기대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illusion factor'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대상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정도, 이 학생의 개성과 장점, 잠재가능성 그리고 그 학생의 심성을 포함한 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여기에 따른 지덕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는 정보란 고작 성적과 석차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 학교교육은 교사가 성적, 석차보다도 그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illusion factor'(비현실적인 기대감) 중 하나로 학원교육을 받아야만 학교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선행학습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지나치게 학원교육에 종속된 학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훼손을 받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개성의 개발과 발달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사회에서 수행할 역할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입니다.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은 자녀들이 판검사, 의사, 고시를 통해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의 창의적인 생각을 계발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경우 수많은 기여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님들은 비창의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인생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의 세계를 구체화시키는 일에 학생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일에서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해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50대 초반에 중역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어떤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의 가치를 높여 가는 성공적 이야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만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앞으로 도움을 받고 같이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절제하고 편협한 '나'만을 위한 경쟁의 구조가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잘 해볼 수 있는 협력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정보와 인식의 변화가 토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적절한 자제와 인내를 가질 때, 협력적으로 동참하는 교육공동체에서의 학부모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렇게 하려면 학교운영체제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A 학교운영체제에 대해 언급하기 앞서 좋은 학교의 몇 가지 전제적인 조건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학교가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가 이런 개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는 일을 시행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그때 그때 적합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항은 학교가 시행했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성있는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책임지는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학교운영체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통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체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학교에 대해서는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A 교직단체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질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본다면 교사의 질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교육의 5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사의 처우나 근무여건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90명이었으며, 교원의 처우나 근무 여건 면에서 지금에 비할 수 없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선생님들의 열성은 대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현재의 선생님들은 열성 면에서 좀더 분발해야 됩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열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자질 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교육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되지만 교직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는 옛날만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시와 규제입니다. 통제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학교운영의 틀 속에서 교사의 자율적인 책임의식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걸음 더 높일

●●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시와 규제입니다. 통제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학교운영의 틀 속에서 교사의 자율적인 책임의식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걸음 더 높일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 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A 우리가 분배 면에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 한 삶의 조건에서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사회든지 낙후된 계층이 있고 소외된 계층이 있고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계층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롤스의 정의의 이론이 1970년대 이후 사회정책을 이끌어 가는 철학적인 이론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롤스의 정의이론은 이념적으로 새로운 평등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철학적인 이론을 제시한 이론이 아닙니다. 롤스의 정의의 이론은 일종의 그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합당한 분배의 기준을 제시한 상당히 공리주의적인 정의의 이론입니다. 롤스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적인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이 제일 우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의 평등과정에서 전개되는 경쟁, 그 속에서 낙후되고 있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 낙후된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교육의 소외계층 문제는 공리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소외계층과 낙후계층에 대한 적절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의 복지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가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째, 기초학력 능력이 가정환경과 학업성취간에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출발점 상태부터 소위 학습소외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소외현상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기초적인 학습능력의 결손이라고 하면 특히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 이들에 대한 절대수준의 기초학습 능력의 계발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결손의 문제를 학교교육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의 훼손으로 인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4,700만 인구 중에 중학교 학력과 고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40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시대에 적합한 학력을 인정하는 졸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부적합하다는 낙인을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대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서 그 졸업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되는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특별사업으로 30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회 ·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도 소위 대학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이 학교교육의 어려움과 부실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이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공교육 내실화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과제가 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교육 부실화라고 하는 문제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 부실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school failure"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학교붕괴와 교실붕괴"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교육의 역사라고 하는 건 불과 250~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선택된 일부를 위한 학교교육이었기에 국민전체를 위한 공교육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공교육의 역사는 매우 현상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교육 위기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합한 교수학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교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수학습의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힘든 반면,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 공부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 위기의 내용입니다.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차원의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사, 학생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 관계의 수준이 사정없이 떨어졌기에 교수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우리의 제도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신자유주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기회의 균등,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보완이라는 틀 안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자립형사립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합당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한국교육의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나빠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등장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20년 전 교사는 교수학습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통제력이 현격히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안고 있던 부실구조가 그대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공교육 위기의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수준에 걸맞게 적합한 교육의 통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교육의 적합한 통제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교육 위기 혹은 공교육 부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적합한 통제시스템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가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학교교육의 조건 이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배우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수용자세가 업그레이드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A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질문 중에 신자유주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적합한 질문 하나가 교육의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의 평등 문제에 대해서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의 균등에 초점을 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둘 사이의 차이와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은 그 결과적인 결과의 불균등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입장으로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명백하게 기회의 균등에 주어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논쟁에서 좀 떨어져서 생각한다면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경제체제의 운영 원칙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효율 또는 효율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시장이 있을 수 없고 시장의 실패부분에 공공부분의 개입이라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부분의 개입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점차 그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헌법정신과 경제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의 틀 안에서 교육체제 운영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

다. 제도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신자유주의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기회의 균등,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보완이라는 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도 예상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일종의 합당한 과제로 판단됩니다.

Q 현정부가 교육복지차원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쟁을 조장하는 등 약간 상반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A 정책의 분열을 서로 상충되는 갈등적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교육정책 이면의 기본구조와 그리고 그 기본구조를 운영해 나갈 때 파생되는 문제점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원칙적인 노선이고 하나는 결과적 문제에 대한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연결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현정부는 많은 교육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해당사자들과 국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질서창조를 위한 갈등과 긴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소위 갈등의 통합적 조정이라고 하는 면이 약했고 이 과정에서 특히 교사의 어려운 입지를 배려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좋은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Q 6개월 정도 후면 차기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차기정부의 교육과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A 첫 번째로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사정과 애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적합성이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를 설정해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한국교육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갈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확대 재생산보다는 갈등에 대한 대승적 통합의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과 합의를 이뤄내는 교육공동체적인 접근을 존중하는 입장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이 국가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차분히 쌓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핵적인 정책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도 역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원점부터 점검해서 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로서는 연구에 토대를 두어 관련된 논의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차기정부가 의미있게 참고 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정책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Q 원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硏究報國"이라는 표현을 써 화제가 됐는데요. 연구보국의 진정한 의미와 이를 위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A 연구보국이라는 말이 국수주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연구기관이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가 발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보국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마다 하는 일이 개인차원의 일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일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길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는 일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21세기 세계적인 환경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일종의 양자구도에서 다자구도로 변해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다자구도의 이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경쟁력은 교육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적자원의 개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적자원 개발문제 역시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생각이 '연구보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교육

축구감독 히딩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

글 / **현 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hj@kedi.re.kr)

월드컵은 끝났지만 그때의 국민적 열광과 열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역사상 우리 국민의 48년간의 염원을 일시에 해소해 준,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영원히 기억될 사람으로 남은 한국대표팀의 외국인 축구감독 히딩크는 도대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 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는 화려한 신화를 창조한 것일까? 물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언제나 4강의 행운을 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6월 한달 내내 식지 않았던 국민적 환호와 열광 또한 한몫을 크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리더십으로서의 히딩크식 생각이나 전략에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분야는 기업경영 쪽이다. 국가 대표팀 운영에서의 히딩크 감독의 역할과 기업운영에 있어서의 CEO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렇다면 대표팀 운영에서의 히딩크식 전략과 생각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축구감독 히딩크가 추구하는 목표와 교사(교육)가 추구하는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 히딩크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대표팀의 16강 진출, 4강 진출 등의 극적이고 가시적인 결과이지만 교육은 이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또한 극적이지도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학생자신과 이 학생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학생 내면의 조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도 소중한 목표가 된다. 또 히딩크는 그라운드에서 뛸 **최종의 뛰어난 전사**들을 선발해야 하지만 교사는 뛰어난 아이들은 물론이고 뒤쳐지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모두 아우르고 함께 가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히딩크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줄 감동적 결과를 위해 대표팀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히딩크가 가졌던 생각, 태도와 이들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히딩크의 역할은 한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좋은 교육적 성과를 산출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교장과 한 학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에 터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사의 역할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교육의 최종 효과는 학생에게서 확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지도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히딩크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정함과 개인차 인정을 우선하는 교육

"히딩크 감독은 외국인이라 학맥, 인맥 등과 무관하고 **실력위주**로 선수를 선발하며 이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한다"는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코치의 말과 "난 항상 선수들을 먼저 본다. 이들이 어떤 종류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를 본 후에 가장 적합한 전술을 찾아 나선다."는 히딩크의 말은 교육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입시위주교육에 찌들은 우리의 교육상황은 공부가 바로 실력이고 공부를 웬만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받는 대접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에 비해 선생님 앞에서 더욱 주눅이 들게 되기도 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공부만 잘 하면서 성질 나쁜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일류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잘 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적어도 공부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

다. 즉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특기 적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속에서 개개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려 애쓰고 이를 인정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사,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교사,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최소한 한가지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교사들이 인정받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또한 히딩크의 "선수를 먼저 보고 전술을 짠다"는 말에서 교사는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이 정도는 누구나 알 것이다"라는 **막연한 전제**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현재의 학업능력이나 심리상태, 그리고 특기 등을 먼저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인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를 계획하는 일이 필요함을 시사 받는다.

2. 기초학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교육

히딩크가 한국대표팀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한국축구가 지향할 핵심역량을 축구에서의 기본인 체력과 스피드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하는 축구 즉, 틀에 박힌 포메이션 파괴, 멀티플레이어의 육성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이 일어나는 창의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교육에서의 기본은 무엇이며 우리 학생들이 극복해야 할 약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최근에 발표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나 『공교육진단 및 내실화 대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기초교육보장, 기초학력, 기본학력**이라고 부르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력, 또는 기본학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며 한 단계 높은 학습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학교교육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달성에 그다지 충실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학습부진아**라고 부르는 단순한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몇 안 되는 아이들보다도 해당 학년 교육과정의 최소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소위 기본학습부진학생)의 학력향상이다. 이 부류에 속하는 학생들은 약간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다음 단계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닌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기본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부족한 능력은 바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누가 얼마나 빨리 접하고 획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한번 배운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만큼 지식의 변화속도가 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식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그 만큼 따라잡아야 할 지식과 정보가 많아져 인생의 긴 과정에서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한다. 이렇게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하는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개인 각자 그리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어느 정도 지녔느냐와 그리고 사회가 이 능력을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대체로 '타인의 조력 여부와 상관없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해서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주도권을 갖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자의 자유의지와 학습자의 자율적 통제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이고 장래인 학생들에게 있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2000)에서 한국학생들은 조사대상국 32개국 중 성취도 면에서는 과학은 1위, 수학은 2위이지만 과목에 대한 흥미도,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최하위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말해 준다. 인간의 발달과정 또는 발달과업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을 지나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또는 "자기조절적 학습능력"을 지녀야 할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남이 시켜 마지못해 하는 학습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창

의적인 학습과 학습이 즐겁게 느껴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내가 선수들을 전술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있다. 기술이나 체력, 정신력도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물론 감독이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면 수많은 관중과 소음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선수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내가 선수들에게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라고 주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히딩크 감독의 이 말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3.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교육

"큰 소리로 말하라. 고함쳐라.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물어보라. 왜 한국선수들은 이렇게 숫기가 없나. 왜 감독의 말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가. 실전에서는 감독과 선수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게 축구다. 그래서 **훈련할 때 느낀 점을 바로 토론해야 효과가 가장 크다**".

"한국선수들은 의사표현을 분명히 안 한다. 나는 팀원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궁금하다."

"유럽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라고 배운다. 이런 훈련이 어린 선수들을 교육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야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팀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 지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은 히딩크가 대표팀을 훈련시키면서 느낀 것을 말한 것이다. 즉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사람들의 "무언"에 대한 답답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국과 달리 토론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은 우리의 교실은 주로 교사가 말을 하고(가르치고) 학생들은 묵묵히 듣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학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에 이미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막연하게나마 학습과 관련된 사전지식이나 정서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기억과 학습분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한 말은 학생들이 기존에 형성한 지식이나 정서에 의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기억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교수 · 학습에 있어서 빈번한 질문이나 의견 상호교환은 이해(앎)의 과정에서 상대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대화 없는 일방적인 전달은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지식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뿐이다.**

이러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비단 지적 학습상황뿐 아니라 학생의 정의적 측면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다. 교수 · 학습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교사 자신의 행동특성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학생을 고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결과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야기되는 반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학생을 좌절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학생에게도 나쁜 결과가 나타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또는 자기충족적 예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히딩크의 다음 말들은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이에 기초한 기대효과의 원리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난 선수들을 칭찬은 하지만 비난하지는 않는다.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 것은 우리 팀 내부에서만 한다. 그것이 나와 선수의 약속이고 신의다."

"실수는 경기과정의 일부이다. 나는 선수들을 끝까지 믿는다."

"어떤 팀이든 한계가 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열등의식을 가지면 이미 첫 게임은 진 거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현실적이어야 한다. 나는 물론 현실적이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것 역시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월드컵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이 왜곡된 교육열과 지나친 입시위주교육 풍토 그리고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본을 소홀히 한 것이다. 월드컵과 히딩크 감독을 통해 다시 한번 교육의 기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학교교육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기획

'소외계층의 교육'

>>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18

>>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22

>>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27

>>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을 위해 35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방향 38

>> 소외계층의 교육: 미국을 중심으로 44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글 / **정명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joungmc@krei.re.kr)

1. 농어촌 소외계층의 교육현황

우리나라 농어촌 학생들이 겪는 오늘의 문제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및 통폐합, 복식수업, 도 · 농간 학력격차 증대 등과 같은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의 기본적인 원인은 농어촌인구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농어촌 교육여건의 악화가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을 촉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 교육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다. 자녀 교육열은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표출시키는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화 되어있고 모든 고교 졸업생을 1, 2, 3, 4등과 같이 순위별로 줄 세우기 하는 식의 수능시험제도를 통해 대학진학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1위에서 000위까지는 1류 대학, 그 다음 순위 층은 2류 대학, 그 다음 순위 층은 3류 대학 등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더구나 이 제도는 대학별 선후배를 통한 취직과 출세 등으로 1류, 2류, 3류 학벌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기여하게 된다. 학교 평준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현행 학군 단위 교육제도 하에서 이러한 입시제도와 학벌 전통은 자녀의 취업이나 출세를 위한 '좋은 학군으로의 이동'을 촉발하게 되었다. 취업이나 출세 관행을 염두에 둔 부모들의 자녀교육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자녀를 위해서 도시로 이농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농어촌 교육을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질곡에 빠트려 놓고 이제 와서 편법적으로 농어촌에 엄청난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특례입학제도를 만들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고,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우대제도를 개발하는 등의 선심을 쓰고 있다. 그러나 머리가 좋고 학업능력이나 경제력이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도시로 떠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농어촌에 남아있어 이러한 특혜제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특례입학제도로 진학한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대다수가 농 · 어가의 자녀가 아니고 공무원, 군인 등과 같은 비 농어업인들의 자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선생님들도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농어촌의 생활 및 근무 여건은 도시에 비해 열악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 자신도 자녀교육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가족을 도시에 남겨둔 채 농어촌 학교에 출퇴근하거나 학교 인근의 중소도시에서 홀로 생활하는 상황이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를 위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농·어업의 불투명한 전망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취약한 자녀교육 여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화 되어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전학하거나 이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그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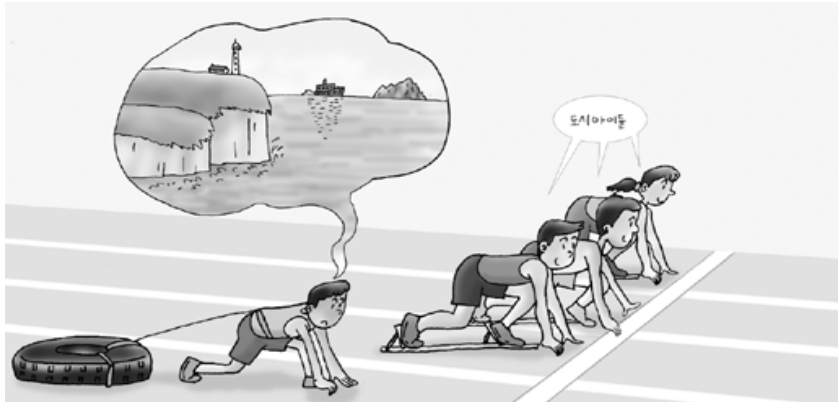
한 승진 가산점 제도, 특별수당, 해외연수 우대 등과 같은 특혜제도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농어촌에 애착을 가지고 평생을 몸바쳐 보겠다는 열의 있는 교사들마저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는 농어촌 학교를 도시의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임시정거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이러한 농어촌 임시정거장 학교에 가족을 모두 이사해 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교육여건 하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교사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학교에 누가 자신들의 자녀를 맡기고 싶겠는가?

2. 농어촌 교육문제를 보는 시각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농어촌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적되어왔던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종합하면서 교육이라는 범주를 넘는 폭 넓은 시각에서의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농·어업의 불투명한 전망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취약한 자녀교육 여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화 되어 복식수업이 이루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도시로 전학하거나 이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줄고, 그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의 쇠퇴화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의 쇠퇴화로 직결된다.

한편, 자녀들을 도시의 학교나 더 좋은 학군으로 옮겨야 한다는 부모들의 바람은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자기가 이루지 못한 신분상승의 욕구를 충족시켜보고자 하는 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농어촌 교육문제는 학군제나 대학입시제도, 학연·지연 등에 연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도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은 농어촌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개인별 능력에 맞는 직업기술습득과 사업경영능력 배양 등 생활능력을 가지게 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수정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목표의 교정은 우리사회가 기술노동을 우대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야만 하고 실제로 기술자들이 잘사는 사회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농어촌 교육문제는 교육당국의 소관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이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한 대책도 교육제도 개선의 범주를 넘어 지역사회 및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방안

농어촌 교육의 취약해진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강력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 교육문제는 이제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국가 사회질서의 문제이다. 학교가 무너지면 그 지역사회도 무너지고, 교육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의 질서도 잡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 교육문제는 그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교육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농어촌 학교를 그 지역사회의 활력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에서 유치원, 초 · 중등 학교는 물론 농업기술교육, 주부교실 등 주민의 평생교육까지 총괄하는 시설과 인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서실이나 박물관, 공공회의실, 컴퓨터 정보시설 등도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등이 함께 하도록 하여 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 종합센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은 교사 및 학교관리 인력의 부족, 경영비용의 부담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복식수업 등으로도 견디지 못해 결국 폐교 또는 통합하게 된다. 학교 통폐합을 막고 복식수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각종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유치하여 통합관리 · 공동활용 · 상호지원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부족한 교사 및 학교 관리인력을 보육원, 유치원, 초 · 중등학교, 농촌지도사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할 수 있으며 건물과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관련 기관이 종합유치가 가능토록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며 이들 기관이 통합관리될 때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독립적으로 조성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농어촌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중등학교의 상치교사제도는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 해결을 위한 교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식교사가 확충되기 어렵다면 종합교육센터를 통해 인근 교육기관이나 관련 지방기관의 특기자를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근무교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우수교사를 유치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나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성의 있는 가르침이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수교사보다는 열의 있는 교사, 지역사회에 참여하려는 교사가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학생지도에 열의를 가지는 교사가 양성되고 그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나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제도나 특별수당지급제도가 일정기간 이후에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관행화되는 폐단을 막고 열의와 지역애착을 가지는 교사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사가 가족을 모두 옮겨와 생활의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관사도 구비해주고, 교육자재도 우선 확충해주는 등의 특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농어촌에 근무를 희망하고 열의를 가지는 교사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특례입학제도를 활용하거나, 도서벽지교원 특별채용규정의 활용도 필요하다.

농어촌 교육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개선대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촌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며 학부모 및 교사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의 교육비 부담문제로는

원거리 통학비,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등을 들 수 있다. 농어촌은 대중교통의 쇠퇴화로 인해 통학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통학버스가 없는 곳에서는 대중교통의 쇠퇴가 지역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는 급식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자비부담으로 급식을 추진하는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특기적성교육은 농어촌의 교육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대부분 학교로부터의 일방적인 추진에 비용을 본인 부담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특수 여건의 학생에게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일반 농어촌 학부모들에게는 특기적성교육비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학교는 원거리의 통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행하거나 지역 정기노선을 병행으로 운행하는 것과 같은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군 · 면 단위 교육기관 공동의 특기적성교육인력 풀을 운영하면서 일부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사업들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별도의 독립된 예산으로 그 사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급식 시설도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용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에 우수하고 열의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특례입학제도를 개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학생 중 대학 졸업 후 자기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학생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어느 곳에서 졸업했든 농어촌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학생을 그 다음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에게 세 번째의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2 우선순위는 농어촌에 봉사가 가능한 사범 · 교육계열, 의약 · 간호계열, 농촌지도계열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선생님도 모자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의 관련 공문과 서류처리 업무가 과중하여 교육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며 교사들이 농어촌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최대한 잡무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인력을 보충해야 하겠다.

끝으로 농어촌에 우수하고 열의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특례입학제도를 개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학생 중 대학 졸업 후 자기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학생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어느 곳에서 졸업했든 농어촌을 위해 일해보겠다는 학생을 그 다음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에게 세 번째의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2 우선순위는 농어촌에 봉사가 가능한 사범 · 교육계열, 의약 · 간호계열, 농촌지도계열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 특례입학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농어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천자 우선순위 방식, 각 지방 기관단체들의 장학금 지원 등이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우리 농어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고 꾸며 나아가는 방법이다. 각 지역의 교육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청과 지방 자치단체들이 잘 알고 있고 그 해결방안도 적극 추진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그 지역의 교육 · 문화 · 복지 종합센터의 공동경영을 맡기고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의 시행도 주도하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해 준다. 이 방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관련 부처의 담당관들이 긴밀하게 협조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혁적 시도에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므로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을 몇 개 우선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그 결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교육의 판을 다시 디자인하는 대안교육

글 / **김찬호**(서울시대안교육센터 부센터장, chan-ho7@hanmail.net)

1. 학교 중퇴 청소년은 누구인가?

'탈학교', '학업 중단', '학교 밖' 등의 수식어가 붙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집에서 다뤄지는 다른 소외 계층 청소년에 비해 '중도 자퇴' 청소년들의 위상은 간단하게 범주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우선 그들을 통상적 의미에서 '소외 청소년'이라고 단정하는 것부터가 이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니면 정반대로 청소년 모두가 소외된 존재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성 세대가 '정상'이라고 규정한 경로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소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학업 중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그들을 위한 대안교육은 무엇을 담보해야 하는가?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청소년들이 지향하고 선망하는 정체성이 '노동자'에서 '학생'으로 바뀌고 경제 성장에 따라 실제로 대다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시기가 있었다. 이 때 학교 중퇴라는 것은 일부 '불우' 청소년 아니면 '불량' 청소년들에게 일어났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고도화되고 정보 사회 또는 소비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학업 중퇴는 갑자기 늘어났고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90년대 중반 무렵부터였는데,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는 상식이 깨지면서 학교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감하게 자퇴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 자퇴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은 완전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언제라도 학교를 떠날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퇴생들 역시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자퇴하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자기의 대안적인 학습 욕구가 매우 뚜렷하고 그것을 기존의 학교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는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도태'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학교 바깥에서 뭔가 자기 나름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공부에 적응하지 못해 튕겨져 나가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준비 없이' 떨어져 나온 아이들을 맞아야 하는 사회 역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은 궁극적으로 학교 바깥에 청소년들이 자기를 형성해갈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 사회 자체를 그러한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꼭 다녀야 한다'는 상식이 깨지면서 학교가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과감하게 자퇴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직 자퇴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은 완전히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언제라도 학교를 떠날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퇴생들 역시 10%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여기에서 가정 형편이란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말한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력과 학력(學力) 사이의 상관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은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바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 아이에게 투자되는 교육비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대학 진학은 당연한 선택이 될 정도로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 그에 따라 학습의 수준도 점점 높아져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중학교 3학년 쯤 배울 내용들을 이제 초등학생 때 과외를 통해 다 배워버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 같으면 알파벳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십대 초반에 인생의 실패자로 학업의 금치산자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중한 학습을 요하는 가파른 경쟁의 대열에 오르다 보니 1, 2년 아니 불과 몇 개월 공부를 놓치면 아예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제나 가족 관계의 파탄은 그러한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학교 공부 이외에 '문화 자본'이 또한 점점 부각되는 시대에 부모의 경제력이나 학력 그리고 가정의 화평 같은 것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가난을 무릅쓰고 아니 가난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공부하여 명문대에 입학하는 '고학'의 신화는 점점 재현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의미한 학교 생활에 염증을 느낀다. 그런데 부모가 든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억척스럽게 뒷바라지 / 닦달하여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버티도록 지원 / 강요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자퇴하지 않지만, 그러한 버팀목 / 회초리가 없는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고약해진 상황은 예전 같으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한 학급에 공존하여 스스럼없이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지리적으로 점점 구획화된다는 점이다. 고급 아파트 옆에 끼여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따돌림당하는 것은 그 단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넉넉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서 배우거나 간접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렇듯 고립되고 소외된 상황에서 가난한 아이들 사이에는 집단적인 열패감과 자괴감이 만연하게 된다.

2. 자아와 삶을 다시 읽는 언어

따라서 학교 자퇴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뿌리깊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동기 부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 내지는 입시 체제 또는 교육열이 학습 의욕을 꺾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이 특히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동기부여란 학습을 넘어서 삶 그 자체에 대한 의욕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의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여기에서는 교육의 전략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가장 첫째로 학습이나 삶에 대한 의욕은 자기를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그것은 내면적 깨달음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수련이 아니라면 (물론 그것도 대안교육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할 영역이다. '마음공부'라는 이름이 적절할 것이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너무 어렵다. 자기 긍정은 결국 인간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자기의 존재는 많은 부분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승인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맹목적 집단주의에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것 역시 친구를 사귈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한 고독감이 폭력을

학교 자퇴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뿌리깊은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동기 부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학교 교육 내지는 입시 체제 또는 교육열이 학습 의욕을 꺾어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이 특히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매개로 한 집단 에너지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그 견고한 결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감은 타자의 피해를 수반하고 그 자체 역시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음이 곧 확인된다. 따라서 학교 중퇴 청소년들에게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양식으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대안교육은 그러한 교류의 계기를 만드는데서 첫 단추를 꿰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상담'이라는 영역에서 마음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상투적인 위로와 격려의 수준을 넘어서 자아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기가 놓여 있는 삶의 현실과 경험을 읽어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은 그 한 가지 유용한 회로가 될 수 있다. 학교 중퇴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보통의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경험이 많다. 문제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보통 청소년들은 수많은 언어를 학습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경험과 언어 모두 자기의 것으로 체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학교 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면서 그 둘 사이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언어는 말과 글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소통의 도구들을 아우른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언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체득하여서 자기 표현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 그런데 대안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경험한 바에 비춰볼 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의외로 효과적이다. 음악이나 춤이나 연극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몸짓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판'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하면 매우 어색한 분위기로 꼬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비해 미디어는 강사가 특별한 재주가 없이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해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 대단히 비싼 고급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래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대단한 장비가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카메라 한 대 쥐어주고 10장 이내의 사진을 찍어 스토리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동영상이 더 재미있고 내용이 풍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지 화면이 더욱 효과적이다. 여백이 많아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가능하면 자기 일상의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포착해내도록 유도한다면 그 작업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 언어는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호기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문화적 환경이 빈곤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언어로 자기를 드러내본다는 것이 신선한 학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헝클어져 있는 경험들이 모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산될 수 있다. 그를 통해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림으로써 자기의 존재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기 길 찾기를 위한 사회의 학습 공간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동기 부여의

일차적 필요 조건이다. 동기 부여를 위해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학교 중퇴 청소년들이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장기적 목표는 물론 단기적인 목표도 분명하지 못한데서 상당 부분 비롯된다. 물론 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피상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에서 현장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희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중문화 쪽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미용사, 레크레이션 강사, 스타일리스트 등의 방면으로도 상당히 높은 분포를 이룬다. 요즘 아이들의 욕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런 쪽에 관심을 나타내는가?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나마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많지 않다. 위에 열거한 인기 직업들도 짐작컨대 그런 직업들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중 매체에서 그럴듯하게 묘사되어 그 모습에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으리라. 그러나 욕망이 곧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런 겉모습 이면에 있는 힘든 과정들을 견딜 수 있는 근성이 요구되는데 아이들은 그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인생의 항로를 탐구하는 학교 중퇴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은 이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직업의 세계가 존재하는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쪽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정보의 제공은 딱딱한 데이터의 형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사실 그런 현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학교 중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의 세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가 오로지 용돈 벌이의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을 뿐 학습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대안교육에서는 그러한 아르바이트의 경험을 통해 산업과 경제의 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아르바이트 등의 경로로 접하기 어려운 훨씬 더 광활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BS 프로그램에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이 훌륭하게 제작되어 방영되어 왔는데, 거기에는 각 방면의 장인들이 나와서 매우 생생하게 그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준다. 인터넷을 통해 모두 다시 볼 수 있으므로 잘 엮어내면 매우 효과적인 커리큘럼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매우 긴요하다. 정부에서 청소년의 직업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턴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어떤 분야를 확정하여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 이전에 현장을 탐색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일 직업체험과 참여 관찰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선진국의 대안교육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커리큘럼이다.

동기부여를 위한 세 번째 필요조건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막연하나마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떤 수순으로 해나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에서는 그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자기의 능력과 소질이 적합한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자 정했을 때 그를 위해 필요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본격적인 인턴십의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청소년들이 인턴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다. 여러 직업 현장에 많은 '프로'들이 있지만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교육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매우 박약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은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일의 세계가 학습의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과 현장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 쪽 방면으로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mentor)가 되어줄 어른들을 찾아내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적 의지를 지닌 직업인을 찾아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를 찾아 그러한 의지를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인턴십은 의지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그와 함께 갖춰져야 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학교 바깥에서 전혀 새로운 학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리들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안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요리사에게 배운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멘토를 찾아내 접촉하고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평가할 것인가, 학생과 담임교사와 멘토 사이에 이뤄지는 소통을 어떤 틀로 담아낼 것인가 등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멘토의 의무 또는 금기 사항은 무엇인가, 멘토의 수고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도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그렇듯 뭔가 질서정연하게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 학습을 해갈 때 청소년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학습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다.

4. 교육의 공공성과 대안교육

대안교육이 공교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존의 제도 교육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은 하나의 직업이나 직장에 머물지 않고 여러 일자리와 일거리를 유목민처럼 전전할 것이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정규 교육을 통해 체득하는 표준화된 지식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고 새롭게 주어지는 일들을 소화하여 자기의 생계로 만들어내는 다면적인 적응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수준 높은 기초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이해시킴으로써 사물의 여러 현상을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말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초 교육의 수준을 높일 때 사교육의 과중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학습 요구는 사회 학습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해결해가야 한다. 사회 전반에 학습의 공간을 확장해갈 때 학교는 청소년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 그 기능에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하고 조언하는 길잡이 역할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한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의 교육열, 그 정체는 무엇인가. 그 열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한국의 교육열은 부모들의 교육열이었다. 학생이나 교사의 교육열은 그다지 뜨겁지 않았고 사회나 정책 당국의 열기는 더욱 없었다. 대안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은 그러한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다. 자기 자녀에 대한 사적인 열기를 시민으로서의 교육적 관심과 의지로 바꿔내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가 성숙한 배움의 공간이 될 때 교육의 공공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경제력으로 인한 학력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의 부정적 결과들을 보완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판(패러다임)을 새롭게 짜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재건함으로써 학교 중퇴 청소년들에게 자기 형성의 공간이 널리 열릴 수 있다. 또는 그 청소년들의 존재는 교육의 공공성을 되묻고 바로 세우는 작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교육

대안교육은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일의 세계가 학습의 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과 현장을 발굴하고 개발해야 한다. 그 쪽 방면으로 자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mentor)가 되어줄 어른들을 찾아내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육적 의지를 지닌 직업인을 찾아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를 찾아 그러한 의지를 불어넣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특수교육의 현황과 과제

글 / **박경숙**(국립특수교육원 원장, parks@kise.go.kr)

1. 서론

교육은 이전에 유용성의 차원에서 추구되어 왔으나,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입장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존재로 존엄성을 인정받아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교육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잔존 능력의 개발과 그들의 권리 보장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표현이다. 만일 이 대목이 없다면 단순히 취학하는 것만으로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보장만으로 단순히 교육권이 실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개인이 모두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할 수 있을 때만 교육권을 완전히 보장받게 된다. 그러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현은 진정한 교육의 균등권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등한 균등이 아니라 적합한 균등이다. 적합한 균등이란 사람은 모두 천차만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능력의 최대 가능성을 찾아 보다 높은 삶의 가치수준으로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이 규정은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는 규정이 된다.

특수교육진흥법(법률 제30532호)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방법의 확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의 범주 및 출현율

장애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개념이다.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는 장애로 수용되는 부분도 다른 시대나 사회에서는 장애로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관점에서는 장애로 인정되나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의 개념이 개인적 문제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범주도 사회적 불리 내지 교육적 불리라는 관점의 추가를 위해서는 확장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도 있다. 이는 장애가 사회구성원의 인식 문제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장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보는 이의 입장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개념이며, 특정시대의 구성원들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체제에서 교육적 입장에서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장애범주를 구분한 규정은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1977년 제정 당시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언어장애·정서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 법의 개정을 통해 정서장애에 자폐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학습장애를 특정 장애범주의 하나로 추가하여 장애범주를 8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 규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범주 구분보다 제한되어 있다. 물론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제10조)는 규정을 보면 모든 장애인이 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장애범주도 제한되고, 그들의 수도 제한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이 개인적 문제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범주도 사회적 불리 내지 교육적 불리라는 관점의 추가를 위해서는 확장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장애범주를 특정학습장애·말/언어장애·정신지체·정서장애·중복장애·청각장애·정형외과적 장애·건강장애·시각장애·자폐증·농-맹·외상성 뇌손상의 13개로 구분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신체장애·언어장애·청각장애·농·시각장애·맹·정서/행동장애·중등도/중도 정신지체·중복장애·학습장애·특정학습장애·중등도언어장애·중등도행동장애 등 13개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의 장애범주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장애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정의하고 그 범주도 재분류해야 한다.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장애범주를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행동장애·자폐성 발달장애·언어장애·학습장애·중복장애·건강장애의 10개로 확대·구분할 필요가 있다. 2001년도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 10개 범주에 의해 장애학생 출현율 조사를 한 결과 장애학생 출현율은 2.71%로 밝혀졌다.

3. 특수교육 현황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항),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기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 교육기관이고, 특수학급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장애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이러한 특수학급은 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특수학교

2001년 4월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모두 134개교이며,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는 24,380명이다.

전국의 특수학교를 설립별 ·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국립 5개교, 공립42개교, 사립 87개교이고, 시각장애학교 12개교, 청각장애학교 16개교, 정신지체학교 80개교, 지체부자유학교 19개교, 정서장애학교가 7개교이다. 사립특수학교의 비율은 64.9%이다.

특수학교는 유치원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10개교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유 · 초 · 중 · 고등부과정 모두를 한 학교 내에 병설 · 운영하고 있다. 2001년 4월 현재 134개 특수학교의 2,712학급을 학교과정별로 구분하면 유치부 과정 267학급, 초등학교 과정 1,231학급, 중학교 과정 612학급, 고등학교 과정 602학급(전공과 68학급 포함)이 된다.

나. 특수학급

2001년도 4월 현재 특수학급의 수는 유치원 65학급, 초등학교 2,982학급, 중학교 680학급, 고등학교 119학급으로 모두 3,846학급이며,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6,815명이다.

전국의 특수학급을 운영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일제 98학급, 시간제 3,581학급, 순회학급 167학급이다.

4. 특수교육의 발전 과제

새 천년에 요구되는 특수교육의 틀은 통합교육이라는 틀이다. 이 틀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은 많다. 이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다가올 시대는 다양화, 다원화된 사회로 인간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새 천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 · 유아교육, 초 ·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겠다.

1) 영 · 유아 특수교육의 확대

최근 일반교육계에는 유아교육의 의무화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관심을 끌어 왔고, 최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초기환경이 아동의 지적, 정의적, 사회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유아교육이 개인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만큼 유아의 건전한 성장 · 발달은 초 · 중등교육 단계의 성취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 영 · 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 · 유아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만 발달의 가소성을 회복할 수 있고,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비장애유아들과 비교할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기관에서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의 수는 〈표 1〉과 같이 1,74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 동안 특수교육은 장애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 일반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등 여러 형태의 교육기관의 설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정책 추진에 공적 책임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모든 장애유아들이 실질적으로 공교육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2000년대 장애유아의 교육은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필요한 지원

[표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수

(단위: 명)

구 분	유치부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1,481	10,076	6,051	5,981	791	24,380
특수학급	268	20,871	4,488	1,188		26,815
합 계	1,749	30,947	10,539	7,169	791	51,19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은 다양한 형태의 장애 영·유아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되, 기존의 초·중등과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과 같이 분리교육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초·중등 연계교육의 강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30,947명이나 중학교 과정은 그 1/3 수준인 10,539명이며,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의 68% 정도인 7,169명이다(표 1 참조). 이런 현실이 장애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학급에 통합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바람직하나, 실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기술과 성적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여 학교생활을 포기하거나 특수학급 졸업생들이 더욱 분리된 형태의 교육인 특수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는 통합교육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제5조)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도 배치되는 결과이며,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초·중등교육의 연계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통합을 지원하는 특수학급의 설치 확대나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보장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장애학생 고등교육의 확대

지식 정보의 팽창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는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고등교육의 필요성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은 1995년부터 장애인 대학 입학 특별 전형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기회가 많이 확대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첫 해인 1995학년도에는 8개 대학에 113명, 1996학년도에는 18개 대학에 217명, 1997학년도에는 36개 대학에 276명, 1998학년도에는 45개 대학에 355명, 1999학년도에는 46개 대학에 396명, 2000학년도에는 57개 대학에 368명, 2001학년도에는 54개 대학에 421명이 입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 이후 대학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고, 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증대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여도 이들의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고학력 실업 장애인을 배출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들이 대학 입시의 준비를 위해 교과교육에만 치중함으로 인하여 장애학생들의 교육재활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교육 현장으로부터의 비판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학교(4년제)에 대한 경쟁입학제도의 회복이 필요하며, 기능 및 전문 직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4년제 미만)에 대해서는 현 특별전형제도를 확대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란 정규대학에 진학할 잠재적인 학습능력을 지닌 장애학생들은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문 도야와 연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대학교에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입학을 준비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특수학교가 중증 중복 장애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현재와 같이 특수학교 재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특수학교에서 전적으로 대학 입학만을 준비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하여 장애학생들의 직업재활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란 정규대학에 진학할 잠재적인 학습능력을 지닌 장애학생들은 정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하여 학문 도야와 연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대학교에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입학을 준비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특수학교가 중증 중복 장애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현재와 같이 특수학교 재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여 특수학교에서 전적으로 대학 입학만을 준비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입학 시험과정에 나타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학 입학 이후 장애학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원격학사운영제 등 또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성인 교육체제의 구축

성인교육은 학교교육 이후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체제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사회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장애성인도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나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특별한 계층이나 특정 연령에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급변하는 사회 구조 및 날로 확대 재생산되는 지식 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두되었다. 따라서 장애성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교교육 이후 평생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요청에 대응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정상화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및 노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평생에 걸쳐 학습활동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도록 평생교육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기능과 자원의 연계 협력에 의한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체제를 평생교육체제라고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망 등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촉진과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은 장애성인의 교육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지역사회 관련기관이나 관련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성인의 욕구와 선호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 여가 취미 활동 및 고용의 개발과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개혁

새 천년의 특수교육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특수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그 전달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를 주도해 온 선도기관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85년을 기점으로 특수학교의 그러한 지위는 특수학급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표 2〉와 같이 1985년을 기점으로 특수학급의 학생수가 특수학교의 학생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는 자료가 된다.

〈표 2〉에 나타난 또 하나의 유의미한 변화는 특수학급의 설치 이후 계속 증가하던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1987년을 고비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표 2] 연도별 특수학교(급) 재학생 수

(단위: 명)

연 도	'80	'82	'85	'87	'89	'91	'93	'95	'97	'99	'01
특수학교	8,094	10,679	14,315	17,373	19,111	20,214	20,985	21,262	22,789	24,091	24,380
특수학급	6,045	7,665	22,534	34,268	32,262	28,795	28,210	31,510	25,300	26,178	26,815
합 계	14,139	18,334	36,849	51,642	51,373	49,009	49,195	52,772	48,089	50,269	51,19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사실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수의 특수학급 교사들이 부모의 특수학급 입급 동의서의 폐지를 요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녀에게 장애라는 낙인을 붙이기 싫어 특수학급에의 배치를 기피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00년대 특수교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학교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특수교육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특수학교는 가장 분리된 교육형태이다. 이러한 약점의 보완을 위하여 특수학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기능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특수학교는 주변에 있는 일반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의 비장애학생들과의 최대한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류, 의미있는 지역사회 중심 교수의 최대 적용, 일반고용 및 지원고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 실시, 특수학교와 부속된 기숙시설을 활용한 통합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특수학급의 운영체제를 일반학급의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수학급은 공교육체계 하에서 특수교육적 욕구가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의 최적합한 교육실제를 제공하기 위한 경로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특수학교에 비해 부차적 지위에 있던 특수학급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교육의 제1의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수학급은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 공간으로 거듭나야 하며, 교내 통합교육을 조정 ·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현재와는 달리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어떤 유형의 장애학생도 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급의 교육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특수교육은 이제 어느 특정 교육집단의 몫이 아니라, 일반학급의 몫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학급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학급은 다양한 학생집단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유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교수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학급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조직과 학생조직을 구축하고, 그에 맞는 학습활동과 자료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개혁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특수교육 행 · 재정 지원체제를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 도 및 시 · 군 · 구 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이들 각각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특수교육 전담조직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수립 · 집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행정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시 · 도교육청이나 시 · 군 · 구교육청의 경우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특수교육 정책의 추진 및 현장에 대한 지원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전담조직은 최소한 1998년 직제 개편 이전의 수준인 과단위 조직을 회복하고, 시 · 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 전담 인력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시 · 도에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을 배치하고,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운영 지원센터의 확대설치 및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지원체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구의 하나이다. 이 기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 평가 · 지정 · 배치의 과정을 통괄하는 주체로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학생이 보다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이념에 따라 보다 덜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현재 전담인력 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있지 못하고 시 · 군 · 구 교육청까지 설치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전담인력 배치 및 확대설치의 과제를 안고 있다.

3) 특수교육 재정의 확보

특수교육은 독특한 교육적 욕구를 지닌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교육내용 및 방법과 교재 · 교구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수교육이 교육 복지 프로그램임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때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경제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언제나 투자의 차순위 대상이 되어 전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 3〉과 같이 1.5%에서 2.0%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약자인 장애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간접 효과까지를 추정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필요한 특수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라. 특수교육의 질 제고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은 그 동안 질의 제고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우쳐 온 면이 없지 않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를 위하여 질적 제고는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맡겨진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는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의 질적 평가를 시도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첫째, 특수교육의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수

(단위: 천원)

연도	교육부 예산	특수교육비	비 율
1995	12,495,810,267	224,006,328	1.8
1996	15,565,216,500	238,102,827	1.5
1997	18,287,608,665	298,596,440	1.6
1998	18,127,837,527	337,070,063	1.9
1999	17,456,265,000	315,782,768	1.8
2000	19,172,027,020	340,225,173	1.8
2001	20,049,279,000	406,310,075	2.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약자인 장애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간접 효과까지를 추정하면, 그 효과는 단순히 수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필요한 특수교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교육이 시작되고 100여 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특수교육 투자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본 적이 없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담당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그들의 장애특성만큼이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수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발은 전담기구 없이 개발되고 있어 사후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서 · 교사용 지도서 및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자료의 개발 · 보급 및 그 이후 질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전담기구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국립특수교육원에 이를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마. 특수교육의 여건 강화

통합교육은 일반교육의 협력 내지 변화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통합교육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및 일반학교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통합학급의 학생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 담당교사를 우대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교원들의 특수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 사회인들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5. 맺는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와 미래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면 특수교육은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함이 분명하다. 비록 현재 특수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많지만, 이런 우려에 못지 않게 그 길은 장애학생들의 인권의 존중과 삶의 질 제고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특수교육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시급히 해결이 요구되는 과제들과 그 해결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어떤 조건의 장애인이라도 원하는 경우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들의 분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개선하여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장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 못지 않게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섯째, 일반교사와 일반인들의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통합교육의 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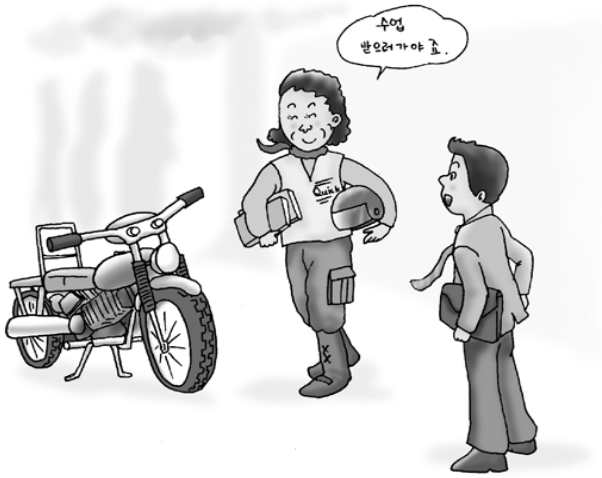
이상의 과제들은 모두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고, 사회에 완전 통합되어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면 21세기라는 새 천년에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현재의 우려를 모두 불식하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대부분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동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즐기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활을 주도해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특수교육의 목표인 사회통합에의 도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교육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을 위해

글 / **라복기**(양원주부학교 교무부장, yangwon7@yahoo.co.kr)

현대사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평생교육과 재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이다. 지식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야말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지출이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면서 투자의 효율성에서는 OECD 23개국 중에 19위에 머물러 교육투자에 비해 효과가 극히 저조한 나라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를 자원 없이 오로지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성장을 하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역, 즉 6.25 전후에 태어나 국가의 경제와 가정의 생계를 꾸려온 이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 되어있다. 사회적 통념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오빠와 남동생에게 밀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주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산업현장의 역군으로 애썼던 우리의 중 · 노년층의 주부들이 그들이다. 배움의 한을 품고 일을 했고 그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제때에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만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교육열은 대단했고 자신의 한을 풀 듯 가르쳤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고 안정을 찾고 보니, 이제는 즐거운 여유를 찾을 때가 되었건만, 지식의 정도차가 커 자녀와의 대화가 맞지 않아 관계도 멀어지고, 급변하는 시대의 지식과 정보에 눈이 어두워 답답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서울에서만 30~40만 명 정도 된다고 교육당국은 파악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신의 학력을 속인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82%수준의 "학생이 그렇다"로 조사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약 50%정도가 중졸이하의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주부들의 현 교육수준과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부문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의 예를 들어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2001년도 3월, 한 40대 여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며 교통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줄로 생각하고 "다른 대중교통보다 빠르시죠?" 하고 여쭤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나에게 서슴없이 "저는 퀵 서비스를 직업으로 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가서 업무를 봐야하거든요"라고 말을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을 불러 입학 동기를 물어보았다. 어릴 적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상 초등학교만 마치고 진학을 못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다가 결혼 후에 남편의 건강문제로 본인이 생계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자녀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래도 퀵 서비스 일이 수입원이 좋아 계속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배달이 있어 전화로 전달받아 배달장소에 갔으나 영어로 된 간판이라 그 장소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해 두 시간 이상을 헤매게 되었고 그날 일을 계기로 중등과정 공부를 위해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입학 후에 수입원이 줄어서 힘들겠다고 여쭤보니 한자씩 배우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일 처리 속도 또한 빨라졌으며,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 당당한 엄마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였다. 더불어 자신이 공부를 하다보니 그 모습을 본 중학생 자녀도 예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행복하다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학생처럼 중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서울에서만 30~40만 명 정도 된다고 교육당국은 파악 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신의 학력을 속인 경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82%수준의 학생이 "그렇다"로 조사가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중·노년층의 약 50%정도가 중졸이하의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

해마다 2회씩 실시되는 중학교졸업 인정 검정고시를 보면 서울에서만 약 6,000여명, 초등학교 졸업자격검정고시에는 1,000여명 정도가 응시하는데 해마다 같은 수준의 응시인원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정형편상 배움의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많은 저학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교육시설을 찾는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수많은 저학력자들이 시설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본다.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확충과 보통교육에 준하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3.5%인데 반해 저소득자층의 참여율은 15.0%로 극히 저조한 상태로 이들을 배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재지원 및 경비지원이 이루어져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신분과 동등하게 교통비 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그들을 배움의 장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다. 의무교육이 무엇인가. 즉 국민들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며, 국가는 의무적으로 중학교까지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무적으로 가르쳐야할 대상자가 학령자(청소년)만이 해당 되는 것일까?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학령자가 아니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을 찾아내 떳떳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몫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

이라 생각되며, 또한 저소득자들에 대한 생계지원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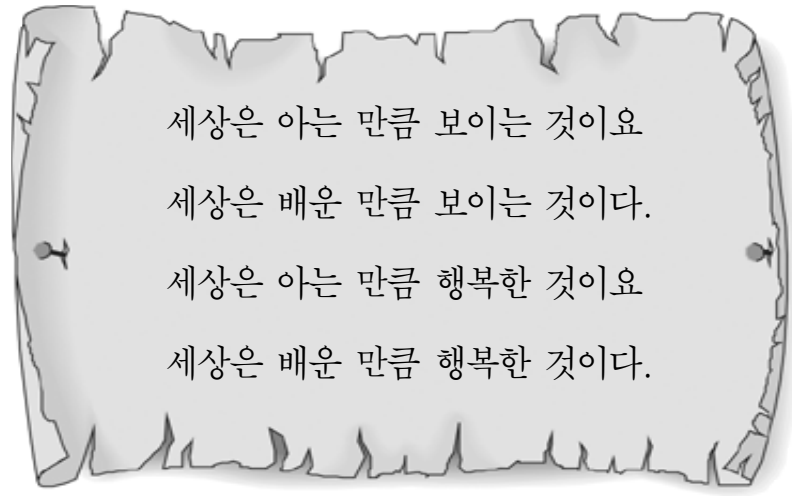
현재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이 되는 시설과 학교형태를 갖춘 학력은 인정되지 않는 시설, 일반평생교육시설로 분리가 되며 학력인정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중학교 같은 경우 등록금이 교육청의 연간 사업비에서 90%정도가 지원은 되나 일반학교처럼 전액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평생교육시설은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로 자체운영을 하다보니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 14위의 경제국가이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온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로 밝고 힘찬 삶을 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원인력(교사, 강사)에 관한 사항"이다.

학력인정시설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교사에 대한 급여가 일부 지원되나 일반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로 등록금에 의한 자체운영이다 보니 처우가 일선학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척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 및 강사의 이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사회교육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최우선이지만 보람을 느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을 주는 것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경력을 일선학교의 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교·강사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일선교원과 같은 사회적 처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연간 일정의 연수기회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식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홍보"이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이러한 시설을 몰라 못 배우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판단된다. 본교 같은 경우 연간 입학생 중 30~40%가 재학생에 의해 시설을 알고 오는 경우이며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시설에 대한 광고가 한계가 있기에 재학생들에 의한 입소문과 라디오 광고가 고작이다. 이처럼 배우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연간 학생모집기간을 규정하여 정부차원에서 각종 소식지나 반상회보, 일간지 그리고 지역별 통반장을 활용하여 홍보한다면 사회의 소외계층까지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듯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정부 담당자와 평생교육시설들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며, 저학력자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그들을 찾아 가르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로의 길이다. 교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방향

글 / 정택희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장, thchung@kedi.re.kr)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과 고등학교 학령기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에게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4년도부터 설치 · 운영되어오고 있는 학교이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 28년 동안 방송고등학교를 거쳐 간 졸업생이 약 18만 명에 이르고, 현재 39개의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약 14,6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인 고등학교로서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앞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간략히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1.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법적 위상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정규 고등학교인가 아니면 일종의 성인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방송통신고등학교만큼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법적 · 제도적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향후 진로와 깊게 관련된다.

우리나라에서 정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주로 성인)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 등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 · 운영되는 교육 시설로서 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볼 수 없다. 또한 검정고시도 학교는 아니다. 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을 지칭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는 달리 법적으로 정규 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학력인정 각종학교가 비록 초 · 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로서의 지위는 가지나, 고등학교로서의 지위는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보다 고등학교로서의 법적 위상과 지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 · 중등교육법 중 고등학교에 관한 조항의 하나로(제51조) 규정되어 있다. 초 · 중등교육법이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이다. 또한 고등학교의 설치권자는 공립의 경우 각 시 · 도 교육감이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도 교육감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시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법적으로는 정규 고등학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실제적 운영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고등학교에도, 심지어 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도 부과하지 않는 졸업학력 인정평가시험을 통과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위상을 평생교육시설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법적으로는 정규고등학교이면서도 실제로는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소외 성인교육 기여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재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은 80년대의 약 4만~5만여 명으로서 그 후 그 숫자가 점차 감소하여 2001년도 현재 39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생이 약 14,600여 명이다. 통계청의 2000년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400만 명이 고등학교학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참조).

이 400만 명 중 고등학교 학력을 얻기 위하여 교육시설에 등록되어 있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수를 보면, 방송통신고등학교 14,600명, 각종학교 3,465명,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3,662명, 산업체 특별학급 3,152명, 고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6,641명, 검정고시 합격자 16,359명으로서 총 58,000여명이다.

이는 잠재 수요자 400만 명의 약 3%에 불과한 것이다. 즉 각종 성인 대상 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잠재 수요자의 3%로서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참조).

한편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만을 비교해볼 때 그 중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 기여도가 가장 낮다. 타 교육기관에 비하여 학습의 양, 수학의 편의성, 경제적 부담, 교육시설과 교직원 질적 수준 등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실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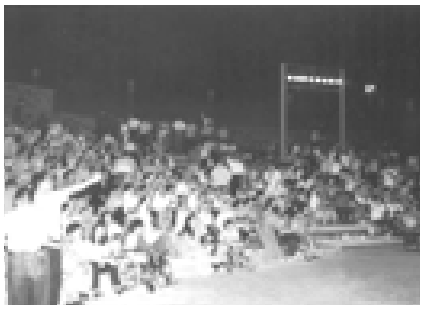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유인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학연한이 평생교육시설에 비하여 불리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학년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 3년의 수학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연한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다. 실제로 2년 6학기제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많은 성인들이 학력 콤플

[표 1] 방송통신고등학교 잠재 수요자 현황 분석(2000년도 현재)

	중 졸	고등학교 중퇴	계(a)	연령별인구(b)	비율(a/b×100)
15세 미만	4,079	46	4,125	9,638,756	0.043%
15~19세	29,521	28,397	57,918	3,691,584	1.569%
20~24세	46,999	35,690	82,689	3,848,186	2.149%
25~29세	89,543	27,007	116,550	4,096,978	2.845%
30~34세	178,909	28,911	207,820	4,093,228	5.077%
35~39세	454,886	32,354	487,240	4,186,953	11.637%
40~44세	754,199	37,208	791,407	3,996,336	19.803%
45~49세	688,551	28,935	717,486	2,952,023	24.305%
50~54세	543,994	23,903	567,897	2,350,250	24.163%
55~59세	389,044	19,431	408,475	1,968,472	20.751%
60~64세	259,691	14,638	274,329	1,788,849	15.336%
65세 이상	253,891	13,541	267,432	3,371,806	7.931%
계	3,693,307	290,061	3,983,368	45,983,421	8.663%

[표 2] 고등학교 교육기회 제공 현황 (기준 : 2001년도)

구 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방송통신고등학교		39	347	14,601
각종학교		11	114	3,465
산업체부설고등학교		19	119	333,662
산업체 특별학교	인문	7	15	461
	실업	38	121	2,69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6	374	16,641
고교학력인정검정고시				16,359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엘리트 또는 지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주고, 생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교육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때 3년으로 고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학연한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유인가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렉스에 걸려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을 얻기를 원하는 성인은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인생으로서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다. 누가 이들이 고등학교도 못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당사자로서는 이것을 가급적 숨기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가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1년은 매우 긴 기간인 것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엘리트 또는 지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소외계층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를 주고, 생애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교육 복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때 3년으로 고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학연한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유인가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유인가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중도 탈락률은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심각한 수준이다(표 3 참조).

매해년도 입학생과 3년 후 졸업생을 단순 비교할 때, 즉 졸업생 중 중간에 편입한 학생과 전학 온 학생의 수를 고려하지 아니할 때, 입학자의 상당수가 중도탈락을 하고 있다. 중간에 편입을 하거나 전학 온 학생들 중 상당수가 졸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도 탈락률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도탈락자를 많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인 것이다. 우리나라 어떠한 교육기관에도 요구하지 않는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을 유독 방송통신고등학교에만 부과하는 것은 교육적 불공평성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홍보 미흡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이 적은 원인 중의 하나이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는 그 기관 종사자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 운영은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보고 홍보에 적극성이 없고, 시 · 도교육청의 장학사 등 관계자는 학생 모집은 개개 학교의 문제라 하여 별 관심이 없으며, 학교는 학생이 많을수록 업무 부담만 늘고 처우는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오는 것을 실제로 그리 탐탁케 여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저런 상황적 · 맥락적 이유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홍보 또는 학생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이 적은 것이다. 그나마 현재 14,600명의 재학생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각 학교의 학생회장단 그리고 몇몇 방송고 교직원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눈물겨운 유치 노력 덕분이다.

[표 3]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중도 탈락률

연 도	입학생	3년후 졸업생	졸업률(%)	탈락률(%)
1977	12,091	2,680	22.6	77.9
1980	13,633	7,420	54.4	45.6
1985	20,314	11,261	55.4	44.6
1990	13,231	8,840	66.6	33.4
1995	5,386	3,764	69.9	30.1
1999	4,903	4,027	82.1	17.9

방송통신고등학교와 같이 좋은 제도가 홍보와 학생유치 노력 부족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외에 경쟁관계에 있는 교육기관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견제 전략도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유인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학생 유치를 위해 애쓰는 학생회장단과 교직원들이 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그렇다고 필자가 평생교육시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과 고등학교 학령기의 학생이 정규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들의 상황과 처지,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꼭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가 여러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와 교육방법의 실제를 널리 알리지 못하여 많은 성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획일화와 교육방법의 낙후성도 방송고 유인가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에 의해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그런데 현재는 라디오 방송 강의만 제공하고 있으며, 그나마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만 방송강의를 제공한다. 가르칠 과목은 많고 강의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방송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동일하며, 지역이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마다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이 선택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인데, 그 정신을 거의 살릴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과지도도 지식 제공형에서 탐구형으로 바뀌었고, 학생 주도적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음성 중심적인 라디오 방송강의로는 새로운 교과지도의 방향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전 방향

앞에서 분석해본 바와 같이 각종 성인교육 기관이나 시설이 고등학교 학력을 필요로 하는 잠재 수요자의 3%밖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책과 실제가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좋은 대안적 고등학교로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성인 고등학교 교육 기여도가 고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고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도 못 미치고 있음은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미래는 이러한 제도적 · 실제적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방송통신고등학교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의 유연화

무엇보다도 먼저 성인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업연한을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2년 6학기제를 두어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이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던가 단기의 중학교 과정과 2년 정도의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3년 과정의 중등학교 과정을 두어 중학교 학력을 가지지 못한 성인들에게도 고등학교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의 하나로 구상할 만하다.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도 그 취지를 살리되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이 시험의 부담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요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이 그 요구와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또 교과나 수업의 양도 일반 고등학교와 차별화하고 대폭 축소하며, 교육목표와 내용도 미성년자들로 구성된 일반 고등학교의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성인교육에 걸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수업방법도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라디오 방송강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도 방송강의로 개념화하여 사이버 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출석수업도 꼭 일요일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장인은 일요일에, 주부나 나이 어린 학생은 주중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절제나 분기별 출석수업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평생중등교육 체제 구축

21세기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평생 중등교육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방송중학교, 방송고등학교, 방송대학교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평생교육체제로서, 특히 중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체제일 것이다. 특히 정규 중등과정에서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 빠른 진학을 원하는 학생, 중퇴자 및 탈락자를 포함한 중등교육 이수 희망자들, 학령기에서 받아야 할 학습 기회를 놓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규 중등교육 과정의 학생에게는 질 높고 부담이 적은 교육시스템을 제공하여 신명나는 학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등교육의 기회를 놓친 일반인에게는 용이하게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단위이수 인정제도의 도입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명실공히 중등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습과 학습간에, 그리고 학습과 일의 세계간에 유연한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및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연계와 협력은 개인이 어디에서 어떠한 학습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개인이 소유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명실공히 중등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과 학습간에, 그리고 학습과 일의 세계간에 유연한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및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개인이 학습한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제 삼자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학점 부여나 자격인정 결과는 학습간 연계 및 학습과 일의 세계간의 유연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 준다.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인정 결과는 인정 결과의 교환이나 호환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평생학습과 학교교육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학습결과를 상호 인정해 주고 있다. 하나는 다양한 평생학습간의 평가인정이며 다른 하나는 평생학습과 학교교육간의 평가인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문부성에서 구축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는 위의 두 가지 방식에 기초하여 설계되고 있다. 일본 임시교육심의회는 평생학습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평가의 다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격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인 입학제도, 학교 간 단위호환, 단위누적가산제 등 학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교육수준의 열린 교육체제를 지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점은행제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제도화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이나 개인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폭넓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결과를 학점이나 학위 또는 자격과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중등수준의 평생교육체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경험, 자격증 또는 종사하는 사업과 직업을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평가인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인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생애 능력개발 지원 기능 강화

설립초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동에 따른 유능한 직업인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출발하였다. 학습을 통한 생애능력의 개발 및 그에 따른 고용기회는 개별 근로자의 현실적 고용의 성립 및 그 유지와 향상을 지향하는 근로권과 미래에의 발전을 지향하는 학습권을 통합하는 생애능력개발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생애능력개발 교육체제의 일환으로서 학교중도탈락자, 일반성인으로서 중등교육 학습결손자 등에게 단순히 졸업장을 제공하는 학력제공 수단으로서의 교육기능만이 아니라 허용된 교육기회를 실질적인 학습으로 연결짓고, 그들의 이질적인 학습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학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체제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유연성과 탄력성이 강화된 생애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 ·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 다양한 첨단 정보통신 매체 기반 학교 구축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그간 라디오 공중파방송, 격주 일요일의 출석수업, 그리고 통신학습지를 통한 첨삭지도의 3원 체제로 교육이 운영되어 왔으며, 수업의 보조역할로서 컴퓨터통신학습 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여 왔다.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은 종래의 교육방법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특히 컴퓨터통신학습시스템은 단순히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학생들에게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주변 동료학생들의 글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아가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통신학습시스템은 교육복지적 차원에서 교육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첨단 정보화 매체를 동원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컴퓨터통신학습시스템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방송수업과 출석수업의 보조기능만 수행함으로써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원격대학이 설립 · 운영되어 전문학사과정과 4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인터넷 등 첨단 원격교육 매체를 정규 교육수단으로 채택 ·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교육기회 확대, 시간적 · 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의 절감효과의 제고, 개별화된 자기학습 방식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가능성 제고, 그리고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 일반 고등학교 교육보완기능 수행체제 확립

교육제도적 자원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완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등학생들 중 출석수업이 불가능한 학생, 장기해외 체류 학생, 학습부진아, 특정교과에 대한 학습속도가 특히 느린 학생 등과 본교에 개설되지 아니한 선택교과를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이적하여 공부한 후 본교로 돌아가 졸업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본교에 적을 둔 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특정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완기능을 수행토록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완기능은 부수적인 정책 효과도 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규교과학습을 따라가기 힘든, 그래서 대부분의 수업시간을 학습 없이 허비하고 있는 학습부진학생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와서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습속도와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은 학습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제로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어 좋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습능력의 동질화와 학급규모의 축소 결과를 얻어 학습과 교육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외계층의 교육: 미국을 중심으로

글 / **이정선**(광주교육대학교 교수, jslee@gnue.ac.kr)

1. 들어가며

공교육의 이념을 수월성의 추구와 평등의 실현으로 구분한다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은 후자에 해당한다.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과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체제는 공개적으로 특정 학생을 차별대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학교는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대중교육의 담당자로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평등재생산론자들의 주장처럼 학교는 제도로서(접근기회의 차별, 트랙제도 등),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의 차별을 통하여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기대되는 규범, 가치의 차별을 통하여 의도적이든, 암묵적이든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문화적 결핍과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학 당시부터 뒤쳐진 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다양한 경험과 지적자극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결과가 뒤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러한 결과는 사회의 직업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 다시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도적인 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의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실태는 어떠하며 이들을 위한 보상교육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해답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양한 제약으로 인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학생(하층 학생, 위기에 처한 학생, 집 없는 학생, 소수민족)의 교육실태와 보상교육의 실제에 대한 소개로 대신한다.

2. 하층 학생을 위한 교육

하층 학생(low-status students)은 사회계층 구조상 최하위에 처한 빈곤학생으로 대부분 집이 없고 인종상으로는 소수민족이다. 미국은 서구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빈곤학생 비율이 높으며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한다. 전체 미국 인구의 40% 정도가 공식적인 가난 수준에 처해있으며 1,260만 명의 학생(18세 이하 아동의 20%에 해당)이 저소득 가정 출신이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에 거주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매우 유해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즉 부모

학교는 제도로서(접근기회의 차별, 트랙제도 등), 교사와 학생간 상호작용의 차별을 통하여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기대되는 규범, 가치의 차별을 통하여 의도적이든, 암묵적이든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문화적 결핍과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학 당시부터 뒤쳐진 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다양한 경험과 지적자극 속에서 성장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결과가 뒤떨어지게 마련이고 그러한 결과는 사회의 직업구조로 이어지면서 결국 다시 빈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의 에이즈감염이나 약물중독, 출생 시 낮은 몸무게, 열악한 영양상태, 납중독 그리고 개인적 사고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교육적으로도 낮은 학업성취와 이로 인한 학교중퇴가 빈번히 발생한다.

미국사회에서 하층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교육은 먼저 그들의 학습결과가 저조한 이유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교육을 논의하고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들의 학업실패 원인을 ① 부적절한 교육과정과 교수법, ② 학교규범과 학습경험에 대한 부모와 동료의 강화부족, ③ 학교에서의 기대와 학생행동 및 학습형태와 불일치, ④ 선수학습 성공 경험의 결여, ⑤ 교사의 적절한 준비 부족 및 교수조건의 어려움, ⑥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 ⑦ 하층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 ⑧ 학급에서 비효율적 서비스, ⑨ 과대한 교실 규모, ⑩ 낮은 성취기대, ⑪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영향력 부족, ⑫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돌린다.

보상교육 역시 이러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되었다. 대표적인 보상교육으로는 취학전 교육을 위하여 고안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는 불리한 환경에 처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수학, 읽기, 쓰기 보상교육프로그램이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 1,100만 명의 아동(하층 전체 가정의 1/5)이 참가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년 450만 명의 아동이 참가하도록 약 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평가연구들은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대체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즉 빈곤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 성적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가 보다 증진되었다는 것이다.

초·중학교 재학 하층 학생을 위한 보상교육으로는 '추후프로젝트'(Follow Through on Head Start)가 고안되었다. 재정적 지원을 통한 구제책으로 1965년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됨으로서 400억 달러가 초·중등 하층 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투자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을 위한 보상교육 방안으로는 '상급학교 진학프로그램'(Upward Bound Program)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층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 부여와 대학준비를 돕자는 것이다. 1970년부터 하층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대학입학 수능 성적이나 내신성적이 입학기준에 다소 미달한 하층 학생들에게도 입학 기회를 허용하는 개방입학제(소수민족 특례입학)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와서 학교나 교육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빈곤아동의 학습결과는 가정의 교육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보상교육도 부모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를 통하여 경제적 불리함 때문에 초래되는 학업성취의 역효과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층 아동이나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뛰어난 리더십, 적절한 재정적 지원, 헌신적인 교직원의 노력이 통합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레빈 등은 이를 '종합적 생태적 개입'(comprehensive ecological intervention)이라고 불렀다. 유해한 환경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와 종합적인 가정의 지원이 있을 때 보상교육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은 가정과 학교의 통합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으로 학업 실패의 원인을 가정에서 찾는 사람들이 강조했던 여러 방안들, 즉 사회적으로 불우한 아동의 취학전 교육의 확대, 학부모와 같이 하는 학교교육, 다양한 지원체제의 구축과 같은 주장과 학교요인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학교변화를 추구하고 하층민을 위한 교

수방법을 고안하며 학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자는 양자의 주장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교육

위기에 처한 아동(children at-risk)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가령, 빈곤 가정의 아동,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소수민족), 제한적 영어사용 가정 출신 아동, 가난, 문화적 장애,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전통적 학교교육 실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정, 지역사회의 자원이 결핍된 아동, 문화적으로 결핍되었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아동, 교육적으로 결핍된 아동, 교육문제 지표에 따른 위기에 처한 아동, 전체 집단으로서 위기에 처한 아동(편부모, 청소년 범죄활동, 약물남용, 빈곤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도 다양하게 경주되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학생에 대한 훈육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개혁안으로 '속성학교'(accelerated school)가 대두되었다. 보상교육과 교정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제도화하여(institutionalize) 오히려 학습지진아로 낙인을 찍고 그로 인하여 교사의 기대를 낮아지게 한다. 필요한 지적자극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학습속도를 늦춤으로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점점 더 뒤쳐지게 된다. 따라서 촉진 교육프로젝트는 이러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전제가 그것이다 : ①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② 위기에 처한 학생의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경계설정, ③ 개념, 분석, 문제해결, 적용을 포함한 속성교육과정 마련, ④ 학부모의 개입,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지원인사의 활용.

그 외에도 위기에 처한 학생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가령, 학업실패와 자아감 상실로부터 고통을 받는 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과정 및 수업 마련, 지역사회에 기초한 학습, 졸업을 위한 융통성 있는 옵션 제공이 그것이다. 또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일도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 교육에 대한 교사와 행정가의 책임감, 공정하게 존중되는 통제실제의 확립 그리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학교업무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결국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 지원과 개입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아동이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도 다양하게 경주되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학생에 대한 훈육적인 지원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학생을 위한 개혁안으로 '속성학교'(accelerated school)가 대두되었다.

4. 집 없는 학생을 위한 교육

집 없는 아동(homeless children)이란 고정적이고 규칙적인 그리고 적절한 야간 주거지가 없는 아동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집 없는 사람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들이다. 집 없는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건강문

제, 낮은 재학율(집 없는 취학 아동의 43%가 미취학), 저조한 학업성장, 낮은 자아정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 사회에서 집 없는 아동이나 학생문제에 대하여 가장 종합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것은 1987년에 통과된 맥킨니법(Stewart B. McKinney Homeless Assistance Act)이다. 이는 집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보증해 주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즉 집 없는 학생들에게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초 · 중등교육기관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것, 거주지 증명이나 보호자 증명, 이전 학교에서의 학적부, 예방접종 확인서 등과 같이 집 없는 아동의 입학을 제한했던 기준철폐 그리고 집 없는 특정 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는 조정관 임명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특수서비스, 특수교육 프로그램, 영재아 프로그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집 없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식사 프로그램의 마련 등 다양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동 법에서는 학교가 집 없는 아동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무질서한 행동, 신체적 이상, 열악한 건강, 발달 장애나 배움의 시기를 놓침으로 인한 인지적 기능 결핍 등 그들의 학습능력을 저해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은 기관간(학교, 보건소, 정신건강 센터,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과 교정교육, 기초기본 교육, 방과후 교육, 개인 공간 제공, 자아정체성 발달 지원 그리고 우호적 주변 환경을 설정함으로서 집 없는 학생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5. 소수민족을 위한 교육

미국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교육정책은 거시적으로 동화정책(melting pot theory)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변화되었다. 그 후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이다. 유색인종, 특수아, 여성, 저소득층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후 성인사회에 효과적으로 준비를 시키기 위해 미국사회가 요구하는 인지적 기능, 개념, 정보, 언어, 가치 등 다양한 문화내용을 교육함으로서 소수민족이 사회제도와 전체 문화 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게 한다.

둘째, 인간관계를 통한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의 교정이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인종,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조화로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긍정적 정서, 집단 정체성 및 긍지를 고취시키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제거하도록 도와준다.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협동학습, 역할놀이, 체험학습을 통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태도교정을 유도한다.

셋째, 특정인종에 대한 연구이다. 특정 인종에 대한 인식, 존중 그리고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류문화를 확대하고 사회평등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특정 인종의 문학, 역사 및 다양한 문화적 형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넷째, 다문화 교육이다. 이는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을 없애고 모든 집단에 대한 사회정의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문화집단간 권력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허용 그리고 확인을 위해 재조정된다.

다섯째, 다문화 교육과 사회재건을 위한 교육이다. 이는 학생들을 사회계층구조와 삶의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회적 행동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교육과정은 다양한 집단의 관심사로 설계된다. 인종, 계층, 성, 소외된 사람들간 보다 더 큰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재건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의 활성화,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한 분석방법 교육, 정치 · 경제 ·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지식, 태도, 가치, 기능의 학습,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인종간의 화합을 강조한다.

소수민족(특히 흑인)을 위한 보상교육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보상교육은 미국의 공립학교 제도는 모든 학생이 인종, 문화적 배경, 성별, 능력에 상관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50년 중반 이후부터 시행된 인종통합정책(desegregation)이 대표적인 예이다. 1954년 미 대법원은 Brown et al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et al 사건을 통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는 학교내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학교의 분위기 쇄신, 지역사회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는 소수민족의 보상교육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학교가 조기에 이들의 교육에 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해 인종차별교육정책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기하도록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흑인 거주지 인근학교를 폐교하고 백인 학교로 학생들을 통학하게 함으로서 인종통합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백인 지역사회가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고 백인 학생만을 위한 사립학교를 세움으로서, 그리고 학교 내에서 코스의 할당이나 능력별 반편성, 트랙제도를 통하여 흑인 학생들을 재차별하는 현상(resegregation)이 나타나게 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소수민족이라는 부정적 지위, 인종통합으로 인한 흑인 학교의 폐교로 흑인 교육자의 대량 해고 및 실직, 흑인들의 성적 부진을 조장하는 학교변인에 대한 관심 부족, 백인의 규범에 대한 흑인 학생들의 거부감 등이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은 흑인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실제에 대한 비판적 반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는 학교내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학교의 분위기 쇄신, 지역사회의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구조가 변화되지 않고는 소수민족의 보상교육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학교가 조기에 이들의 교육에 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학습시간을 보다 많이 늘리고, 교육적 기대를 고조시켜 학교 중퇴율을 줄이고, 10대 미혼모 학생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체제를 제공하며, 학급 규모를 줄여 소수민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6.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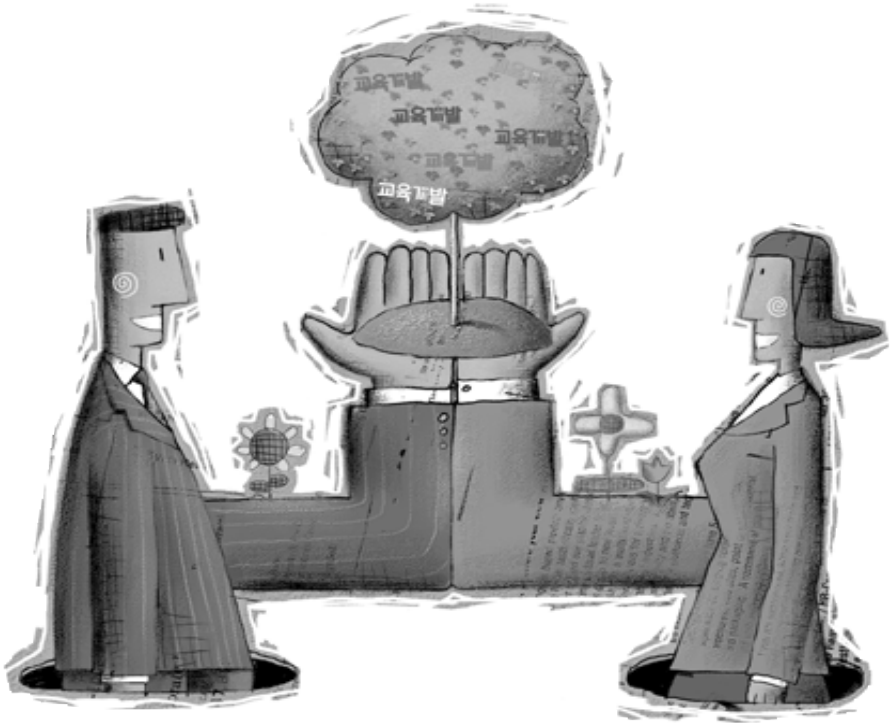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된 사회일수록 결과는 투자에 비례한다는 원리가 대부분의 사회영역에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결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취학 전 어떠한 교육경험과 문화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학습결과는 달라진다. 학교에서의 교육경험 역시 비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문화적 결핍과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취학 당시부터 기초 학습능력이 결여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있지 않고는 보다 우수한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결과가 뒤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환경을 학생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단지 출생지가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일생을 낙후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고 열악한 학교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회지위체계의 속성상 낮은 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악순환 된다는 사실은 결과의 평등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못된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하층 학생, 위기에 처한 학생, 집 없는 학생, 소수민족, 여성, 장애아, 특수아, 도서벽지 거주자)을 위한 인위적인 조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빈약한 교육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보상교육이 그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취학 전부터 시작하여 취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그리고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그러한 노력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정책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보상교육을 위한 관계자들의 다각적인 노력이다. 특히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종합적, 생태적 접근이 오늘날 보상교육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거주 아동이나 결식아동, 저소득 빈곤층 아동 등 사회 ·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적 관심과 보상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교육개발'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보냅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자녀들의 담임교사,
외진 곳 조그마한 학교에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발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이름으로 기증됩니다.
- 1구좌 이상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1구좌(1년 정기구독료)는 2만 5천원입니다.
- 서점에서 낱권 구입 가격은 4,500원입니다.
- 외진 곳이나 모교에 '교육개발'을 기증하시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회비납부처(예금주:한국교육개발원)
  - 농협 369-01-010147
  - 외환은행 296-22-00296-3

- **문의처**

137-791 서울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교육개발' 편집실
TEL : 02-3460-0235, 0411
FAX : 02-3460-0151, 0116
E-mail : keditor@ns.kedi.re.kr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 가입신청서'는 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입 후 팩스나 우편, 통신으로 우송 요망)

■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은 부수

강숙희(3)	권수경(1)	김동석(5)	김무철(1)	김우종(3)	김은지(1)	김정래(5)	김정원(1)	김정자(1)
박영숙(7)	박용훈(2)	서혜성(2)	손용택(2)	윤종혁(4)	이경희(5)	이규향(4)	이순희(5)	이정규(1)
이준목(1)	이현목(1)	이현주(6)	임소현(3)	장인식(4)	정수현(2)	정영순(13)	정재기(5)	채경은(5)
하혜영(3)	허원빈(1)	황연수(2)						

아직도 공간을 채우고 키워야하는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 슈 | 진 | 단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글 /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yhs@kedi.re.kr)

Ⅰ.

일반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교육자치제가 부활된지도 10년이 넘었다. 교육자치의 의의를 학문적으로 논한다면 교육행정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고, 주민통제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고, 교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자치의 의의가 현재 그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도 지방교육행정은 완전히 중앙으로부터 독립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주민통제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은 많으나 현행 교육자치제 하에서의 핵심기구는 그래도 교육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현재 기초 자치단체까지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시 · 도의 광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 · 도 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 기금의 설치 ·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법력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기타 법령과 시 · 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시 · 도의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 부과금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채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시 · 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고, 사실상 지역교육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을 감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교육위원들은 교육감 못지 않게 지역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위원의 선출은 매우 신중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현행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 · 도별로 7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고,
사실상 지역교육을 위한 주요 교육정책을 감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다.

~15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별 교육위원의 수는 서울 15명, 경기도 13명, 부산 11명 그리고 기타 지역은 7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위원의 자격기준을 보면 교육위원 정수의 반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4년의 임기로 되어 있다. 대학교원을 제외한 초·중등교원과 사립학교 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임원은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육위원의 선출 권역은 총 5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권역수는 서울이 7개 권역, 부산이 5개 권역, 경기도가 6개 권역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지역은 2~4개 권역으로 나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57개 선거구에서 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선출되었다. 현재 교육위원은 일종의 명예직으로서 위원활동을 위하여 실비만을 지원 받을 뿐이다. 제4기 교육위원 선출이 끝난 현 시점에서도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차제에 교육위원 선출방식 자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란 선거의 과정에 혈연, 지연, 학연 등이 동원되는 등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단위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선출된 교육위원이 과연 제대로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육자치제 재출범 당시인 1991년과 제2기 위원 선출 시점인 1995년에는 교육위원이 지방의회의 이중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인 배경을 갖는 인사가 선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제3기 교육위원은 1996년에 출범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한 명과 교원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선거인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인단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제4기 교육위원의 선출은 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역시 많은 문제

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 교육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위원선출이 문제라는 점과, 위원선출 과정의 폐쇄성 및 비합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이외에도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한 선출이 갖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번 제4기 교육위원 선출은 최초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투표율이 90%를 상회하였다는 점은 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강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한 선출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는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사회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이 아직도 단위학교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의 중등교육단계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 사립학교의 교원위원은 교원들의 의지 보다 학교장과 학교의 의지가 선출과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교육위원의 선출은 일반 주민과 학부모들이 보기에는 자신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잔치"로 보이기 십상이다. 지역주민의 대표성 미흡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자체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들이 다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 결여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단위학교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 표방했던 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정신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부여하면서부터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최근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부터가 이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의 전초전 양상을 띠어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가 일부 선거구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정치화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교육위원선출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교육위원으로 입후보한 자들이 유권자와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공보발송과 2차례에 걸친 소견 별표와 언론사 등의 토론회 참여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는 교육위원 입후보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교육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자신의 의견과 교육비전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이번 제4대 교육위원 선출과정에도 유권자라고 볼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였음은 물론, 학교운영위원들을 대표로 내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사 등을 통한 토론회도 거의 없어 후보들이 자신의 교육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어떠한 후보가 나왔는지를 투표장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의 경우 7개 지역선거구에서 후보 토론회는 한차례에 그쳤다. 학부모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

단위학교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에 대한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 표방했던 이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정신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부여하면서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부터 이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의 전초전 양상을 띠어가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협의체가 일부 선거구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정치화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문제점과 아울러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가 선거관리상의 편의와 정수 조정의 편의상 탁상공론식으로 구획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인단 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에 의한 선거구 확정은 선거인단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의 출마자가 당선될 확률을 높이고 있고, 특히 농어촌이나 산간지역의 주민들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출된 교육위원에게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지역의 교육을 위해 솔선수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Ⅲ.

교육의 민주화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그것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교육자치제라는 하드웨어는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미흡함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우리가 주력해야 할 과제다(이를 위해 교육자치제의 수준, 자치기구의 수, 교육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글머리에 언급하였듯이 주민통제에 의한 행정, 중앙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난 행정, 교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평범한 학문적 논의로 다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의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체는 그 원형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중선택론에 의한 교육자치를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교육위원 선출로 인한 비용과 선거과열 등의 문제가 염려되는 것은 아니나, 비용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동시에 투표하게 되면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선거 과열의 문제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직이 마치 무슨 이권과 관련이 있는 지위로 생각되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직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

선행학습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글 / **김양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vitamine@kedi.re.kr)

최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1~2년 전부터 선행학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행학습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하겠다는 가족주의적 성취 욕구와 그에 따른 경쟁 의식이 밑바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리 배우고 학교에서 다시 반복 학습하게 되면 학교 공부나 시험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면 남보다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의 마케팅 전략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학원들의 생존 전략이 무분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에 더 매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행학습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학습으로 인해서 학생에게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선행학습은 학원 등을 통해서 학교 교과 진도보다 미리 배우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배우는 반복학습이며,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우선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미리 배우고 온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 없어 한다고 지적한다. 교사 경력 17년째의 S중학교 여자 수학선생님은 "과거에 학원을 안 다녔을 때의 아이하고 지금하고 가르칠 때, 과거가 가르치는 맛이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비하여 학원에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알기 쉽게(또는 핵심만) 배울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배운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 교사는 학원 선생님이 진짜 수학 전공자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학생들에게 먼저 주입이 된 오개념은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선행 학습을 받은 경우 학원식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오는 폐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대려고 한다는 것이다. Y고등학교 수학 교사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교직 경력 6년 차의 S중학교 3학년 국어 담당 여교사 역시 선행학습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거나 떠들고 잠을 자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패턴도 학원 교사들과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과거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서 보여지던 존경이나 위계보다는 교사를 무시하거나 교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학원교사들이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어 반응을 하고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가급적이면 수용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문화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더욱 집중을 안하게 된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그나마 알고 있는 부분일지라도 듣는 학생들이 있지만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물어보면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진도를 미리 나감으로써 학생들에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선행학습은 지나간 걸 차근차근 정리하지 않고 미리 앞선 단원만 빨리 나가기 때문에 예습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학원에서는 알 것 같은데 기초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와서 해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많을지 모르지만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전환시킬 시간이 없어 별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Y고등학교 김진희 교사의 말이다.

학원에서 원리나 개념을 단계별로 가르치지 않고 문제풀이에만 치중하다 보니 학생들은 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응용 문제에는 거의 손을 안

* 이 글은 이종재, 김양분 외(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2002-5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학교 1학년 수학담당 교사는 학원 수강생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개념이나 원리를 미리 가르쳐 주고 학교수업을 받을 때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또 학교수업 시간에는 "저거 다 알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을 우습게 보고 수업 시간에 진지하지 못하고 딴 짓을 많이 하게 된다. 심지어 학원에서 12시까지 공부해서 피곤하다고 자버리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또 요즈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과정의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3월말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1학년 1학기 과정을 다 마치지만, 이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중간고사 때는 "빤짝했다가" 기말고사 때는 성적이 아주 쳐진다는 것이다. 중학교 들어와서 첫 시험이고 선행학습으로 배운 것이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만, 기말고사에서는 그 "약발"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자세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학습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채근이나 간섭에 의존하여 공부하는가는 그 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과외나 선행학습은 이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원에 오래 다닌 학생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며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병호라는 학생의 어머니는 '학원 중독'이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다. 누군가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으면 거의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강북에 있는 한 학원 강사와의 면담 역시 이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안가고 학원만 나오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대해서 학교 교사들의 대처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학원에서 배운 것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거나, 선행학습을 해도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수업을 교과 진도대로 하지 않고 바꾸어서 진행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업 준비를 충실히 하여 가르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많은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인근 학원에서 시험 준비를 할 것을 전제하고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경우가 오히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편안한 교사로 인식되는 것이다. 곧 학교는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학부모들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시 교육에 유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학습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학습효과 그리고 학습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고 학교 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

한국의 고등교육, '적극적' 글로벌화만이 살길이다

글 / **이만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mhlee@kedi.re.kr)

1. 교육시장의 글로벌화

오늘날의 세계는 여러 국가간, 사회간, 또는 국가와 사회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특히 지식 정보 기술의 발달은 통신, 운송, 그리고 생산과정을 보다 쉽게, 보다 값싸게,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세계를 글로벌화하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시장에서도 글로벌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1995년 1월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발효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교육 서비스 부문을 무역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글로벌화를 예고하였다. 2001년 11월 WTO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는 서비스 부문이 포괄적 의제에 포함됨과 동시에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이 양허 요구 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 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한 후, 협상을 거쳐 2005년 1월 1일까지 완결한다는 일정이 합의되었다. 이로써 교육 서비스 시장은 구체적인 글로벌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 ABC University에 진학해서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는다"는 꿈만 같은 현실이 일상적으로 펼쳐질 날이 머지 않았다. 한국의 교육시장은 시기와 정도의 선택만을 남기고 있을 뿐, 글로벌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교육시장의 글로벌화를 지배하는 규칙은 GATS이다. GATS는 교육시장의 글로벌화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질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여 교육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또는 자국이나 해외에 있는 학생들(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한(limitations)을 제거하거나 낮춤으로써 교육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GATS는 교육시장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은 이 중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교육을 글로벌화의 직접적 공략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공급은 대부분 정부의 고유 몫일 뿐만 아니라 GATS가 공교육체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시장은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두 가지 유형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 국내 시장

을 개방하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고려할 때,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은 통상압력에 대응하여 교육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대외의존형 성장구조를 갖추고 있어 시장보호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육시장에서 성인교육, 기타 교육 부문은 제도적으로 이미 글로벌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시장은 여전히 보호주의적 제한 속에 가로막혀 있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관은 전혀 없다. 그 반면 2002년 현재 GATS의 적용을 받게될 교육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사립 고등교육(전문대학+대학교)은 수업료만을 기준으로 약 75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영리성을 추구하는 외국 기관에게는 투자유망지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IMD(스위스 경영개발대학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등교육의 경쟁력(2000년)이 47위(49개국 중)로 낙후되어 있어 국내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은 GATS가 지향하는 글로벌화의 압력 속에서 이를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GATS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약속 내용의 수정 등과 같은 보완 조치와 점진적 자유화 원칙, 정부의 규제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등교

한국의 교육시장에서 성인교육, 기타 교육 부문은 제도적으로 이미 글로벌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가 국내 소비자에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시장은 여전히 보호주의적 제한 속에 가로막혀 있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기관은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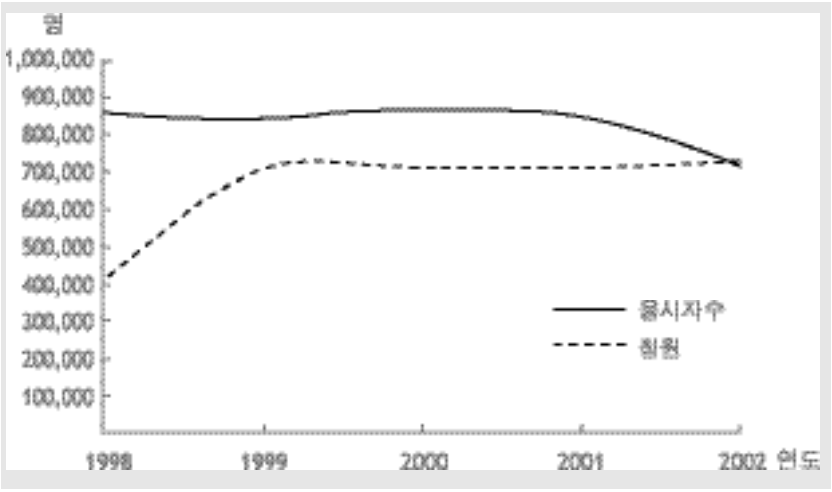
육시장은 일시적으로 글로벌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GATS의 지배 속에서 그 전후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GATS 전후의 고등교육체제의 전망

구분 \ GATS 체제	이전(~2005)	과도기(2005~2007)	정착(2008~)
가치	공공성	공공성≥영리성	영리성
수단	시장보호	시장보호≥글로벌화	글로벌화
주요 행위자	정부	정부≥시장	시장
정부의 주요 역할	공급 · 규제	공급 · 규제≥조정 · 감독	조정 · 감독

2. 국내 고등교육시장의 위기와 해외 진출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은 해방 이후 초과수요에 편승하여 급팽창해 왔으나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1997년을 정점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대입응시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것이 역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는 고등교육의 입학정원이 응시자수를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신규 고등교육기관의 시장 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GATS 하에서 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초과공급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들의 퇴출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1】 대입응시자 수와 입학정원의 변화 추이(1998~2002)

또 다른 하나는 IMF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학위의 명목적 가치(학위의 근원)가 저하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위는 명목적 가치 기준으로 소위 일류 대 비일류로 구분되어 일류 학위는 교환가치(능력)에 상관없이 스크린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학위의 교환가치가 우선시되는 관행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활발해지면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이 확산되어 학위의 교환가치는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시장에서 명목적 가치보다는 교환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교), 또는 전공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시장의 정서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률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경향 속에서 GATS를 전환점으로 미충원률은 더욱 확대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표 2〉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률(2002)

미충원률	전문대학				대학교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0%↓	3	7	48	47	5	21	51	22
0~5%		1		13	3	11	5	25
5~10%	1	1		6		3	3	7
10~15%				4		1	2	6
15~20%				4				4
20~25%				6				4
25~30%	1	2		4	1		1	1
30~35%		1		2				2
35%↑				9		1	2	1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Database
※ 10% 이상의 미충원률은 학교경영의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됨.

〈표 2〉에서 지방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미충원률이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등교육기관의 소재지, 등록금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무엇보다도 고등교육기관이 생산하는 상품(학위)의 교환가치가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즉 교육의 질이 낮기 때문에 진학자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호(信號)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이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한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02년 현재 국내의 10여 개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이 많은 기관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 시장에서 적지 않은 제한(limitations)에 직면하고 있어 계획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등교육기관들에게는 GATS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한국 정부도 GATS에 의거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해당국에 제한을 낮추거나 제거해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3. 국내 고등교육시장의 자유화와 해외기관의 유치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GATS를 계기로 해외 고등교육기관은 영리를 추구

〈표 3〉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계획

대학명	진출 국가	진출 분야	진출형태	비 고
-	필리핀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외국어 연구과정	복수학위제 공동 운영	복수학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비 유학의 형태로 운영 계획
-	중국	한약자원학	분교 합작 설립	한국 내의 규제 때문에 진출 못함
		한국학	사이버 합작 설립	
-	중국 등 구공산권	신학	어떤 형태든 가능	
-	미국	한의학	합작 설립	한의학이 의학의 분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 진출 못함.
	호주	골프경영학		
-	미국	디자인, 한국학	합작 설립	
-	미국	법학	합작 설립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중국, 일본 외 10개국	정보통신, 컴퓨터, 한국학 등	합작 설립	
-	필리핀	어학	공동프로그램 운영	
-	미국	신학	합작 설립	
-	중국	사회교육/한국학	합작 설립	
-	미국 중국	에니메이션, 웹디자인(미) 중의학부(중)	단독분교 설립(미) 합작 설립(중)	중의학부는 합작으로 수원에 설립 계획
-	중국	IT 계열	현지 사무소 개설	한국으로의 학생 유치
-	중국	경영, IT 계열	공동학위과정	상하이 TV 대학에서 개설, 학위수여

하고자 국내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국내의 고등교육시장은 보호주의적 특징을 띠고 있어 해외 기관들은 GATS를 앞세워 이러한 제한들을 낮추거나 제거해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 한국 고등교육의 위기는 국내외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해소될 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은 고등교육시장의 글로벌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아이러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제한들은 매우 많다. 그 중 민감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제한은 크게 ① 비영리법인만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설립 주체가 제약되고 있는 점, ②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점, ③ 수도권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설립이 어려운 점, ④ 정리해고가 어려운 점 등으로 집약된다. 외국 기관은 이러한 제한들을 철폐하고자 GATS를 계기로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에 충격을 가해올 것이다.

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주체

현행 제도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원격대학은 지자체도 가능) 필요한 자산을 출연해야 한다. 법인 임원의 경우 이사 정수의 1/2 이상은 내국인으로 하되, 외국인이 학교법인 기본 재산액의 1/2 이상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은 직 · 간접적 영리를 추구하고자 국내 시장에 접근하려 한다. 따라서 이들이 영리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내의 시장이 전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공성과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고등교육시장의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것은 역효과를 무릅쓰고 경쟁을 촉진하여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에 자극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점에서 외국 기관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설립 주체를 다양화하여 영리법인도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일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세제, 금융,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 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글로벌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경계하기 위하여 엄격한 설립 인가 기준을 통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경우만을 인허가하고, 나아가서는 3~5년간의 엄격한 질 관리 평가를 통하여 영리 법인의 활동을 인허가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한편 학교법인 이사회의 국적 요건을 외국인 투자 지분과 비례하여 신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기관의 국내 진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법인이 전액을 투자하여 단독 또는 분교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할 경우, 내국인의 비중이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외국인의 투자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100%까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 재정운영

현행 제도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기

본재산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학교법인을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 지자체, 기타 학교법인 등으로 귀속된다.

이 제한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및 교비회계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으로서는 재산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회계 관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고등교육 체제에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과 교비는 학교경영의 공공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보험금으로 인정되어 그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비수익성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유동성(流動性)을 제약하는 것으로 그 설립자로서는 자선사업이 아닌 한, 자기자본의 회수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만큼 투자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투자 의욕을 근원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영리성을 추구하는 외국 법인의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함으로써 과실송금을 근원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투자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게 될 국내외 고등교육기관간의 구조조정(예: 통폐합, 스와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GATS의 기본 이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외국 기관으로서는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을 투자위험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글로벌화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에 기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적, 점진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으로부터 고등교육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경계하기 위하여 정부의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수도권에서의 설립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은 학생 수 기준으로 2001년 현재 37.5%(방송통신대 제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등교육시장에서의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격(등록금)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외국기관으로서는 수도권에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수만 있다면 그 만큼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교육 서비스 공급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은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종류로 분류되어 설립이 매우 어렵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차원에서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대학(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은 100명 이내)은 엄격한 조건(예: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하에서만 신설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기관의 수도권 진입, 나아가서는 국내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신설보다는 수도권대학과의 합작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또한 수익성을 고려할 때 50~100명의 학생정원으로는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른 학교경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도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상당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한국이 고등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려는 것은 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넓히는 한편, 국내 기관과의 경쟁 효과를 촉진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그 수단의 요체일 것이다.

라. 정리해고

현행 제도에 의하면 특정의 경우(예: 형사처벌)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교직원은 휴직, 강등,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없는 한편,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는 면직의 사유가 되고 있다. 시장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서구에서는 정리해고(laid-off)가 당연한 경영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자(後者)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 교육시장에서는 경쟁원리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원리의 도입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리해고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경영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할

GATS는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진적 자유화, 국내의 규제 주권, 예외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고등교육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연 혹은 유예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일 수 있으나 공공성과 영리성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의미밖에 없다.
국제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시장보호는 불가능할 것이다.

경우,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GATS와 기회

GATS의 출범으로 교육 서비스는 국제 무역의 상품이 되었다. GATS는 시장 잠식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낙후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고등교육시장의 초과공급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세적 시각, 즉 '보호주의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외국기관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기관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부(國富)가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시장을 적극적으로 글로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 자극을 가하는 공세적 시각, 즉 '자유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기관은 질 높은 교육 서비스 공급을 통하여 외화를 추구하나, 한국의 시장은 이를 통하여 질 높은 인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자원이 다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다면 글로벌화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후생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지향하여 고등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시장을 보호하기보다는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도록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의 영리활동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외국기관의 국내 진입을 유인하기가 어렵다. 점진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유인책은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선택에서 전통적 공공성과 GATS의 영리성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GATS는 교육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진적 자유화, 국내의 규제 주권, 예외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고등교육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연 혹은 유예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일 수 있으나 공공성과 영리성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의 의미밖에 없다. 국제 무역의 자유화 추세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궁극적으로 시장보호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내 수준에서는 고등교육시장을 재편하는 데 요구되는 제도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 퇴출과 진입, 그리고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경영상의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시장 보호적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저항이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저항을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남는다. 교육

세계의 교육

미국: 자율적 학교 선택과 바우하우처 프로그램(voucher program)

64

독일: 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 그 이후

70

중국: 중국교육의 십년변혁

76

러시아: 러시아 체제 전환과 대학 교육의 변화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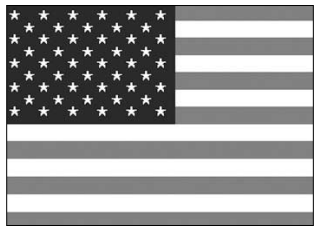
영국: 학교 입학연령(Starting-age)

84

일본: 새 교육과정의 실시와 불붙은 학력 저하 논쟁

88

자율적 학교 선택과 바우하우처 프로그램(voucher program)



글 / 김영주(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최근 자율적 학교 선택에 대한 찬 · 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7일 오하이오 주(Ohio State) 클리브랜드(Cleveland)의 바우처 프로그램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하는 문제를 가리는 재판에서 미국 최고 법원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바우처 프로그램이란 일종의 자율적 학교 선택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바우처(Voucher)라는 공적인 지불 증서를 특정 학생들에게 발급하고 사립학교 수업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바우처는 지역에 따라 발급되는 액수가 각기 다르며 사립학교 수업료에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는 바우처의 금액과 개인이 선택한 사립학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그 시작부터 저소득층에게 학교 선택의 폭과 교육의 기회 균등을 넓혀준다는 옹호자들과 공교육 자금의 사립 교육기관에의 유출로 공립학교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자녀 대다수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져온다는 반대자들의 거센 논쟁을 일으켰다. 또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카톨릭 학교이거나 기타 교구학교인데 이는 학교 선택의 자유는 허울 좋은 명목이며 결국 공교육 자금이 특정 종파의 종교 교육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 사건으로 이어졌다.

>> 자율적 학교 선택

자율적 학교 선택이란 말 그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본인이나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먼저, 자율적 학교 선택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로의 진학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의 교육제도 속에서 사립학교의 선택은 개인이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정부 교육 재정의 뒷받침 하에 이루어지는 학교 선택이 있다. 공립 학교 내에서 전학을 허용하거나 특정 목적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한 학구 전체 혹은 다른 학구 학동에게까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형태다. 공립학교 내에서의 학교 선택은 주로 챠터 스쿨(Charter School)과 마그넷 스쿨(Magnet School)의 등장으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챠터 스쿨은 학교가 독자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승인과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보통의 공립학교에 주어지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학교 운영 목표나 학교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학교 문을 닫게 된다. 마그넷 스쿨은 예를 들어 '연극' 혹은 '고전' 등 어떤 한 주제나 영역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보통 입학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챠터와 마그넷 스쿨은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정의 범위와 기회의 폭을 넓혀주자는 바람과 함께 일찍이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목적 공립학교 내에서의 학교 선택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수한 학생을 지역 학교로부터 유출시킨다는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빠져나갈 경우 학교 전체 성적의 하락은 물

론 학교 전체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습 결과에 의해 판단받는 오늘날의 학교제도 때문에 학교나 교사는 교육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에 대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가들은 말한다.

끝으로 최근 몇 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에게 재정적 보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사립재단들이 지원하는 것과 주(State)나 지역 교육청의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이다. 공립 학교 교육 재정을 사립 교육 기관으로 유출시킴으로써 결국 공립 학교 교육의 질을 해친다는 것이다. 요즘, 자율적 학교 선택을 논의할 때 보통 공교육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바우처 정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학교 교육의 난제가 되고 있는 도시학교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에게 재정적 보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사립재단들이 지원하는 것과 주(State)나 지역 교육청의 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후자의 경우이다. 공립 학교 교육 재정을 사립 교육 기관으로 유출시킴으로써 결국 공립 학교 교육의 질을 해친다는 것이다.

>> 미국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학교 문제

미국을 두고 흔히들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말한다. 국민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하나로 어우러져 사는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미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멜팅 팟'이란 말은 썩 어울리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어우러짐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흑인, 백인, 황인종이 섞여 살기보다는 백인은 같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들끼리,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대로 끼리 모여 산다. 더 나아가 부유층과 중산층, 저소득 노동자층, 무직의 빈민층 등 소득이나 사회 계층에 따른 주거지 구분 역시 비교적 명확하다. 대체로 가정 수입이 좋은 중 · 상류층은 도시를 둘러싸고 발달한 서버브에 사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의 집 값이 싼 동네, 아니면 정부에서 무주택 저소득 빈민을 대상으로 지은 프라젝트(Project)라는 아파트 단지에 밀집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가난한 정부 보조 대상자의 상당 부분을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차지한다. 물론 도시 중심에 살아가는 고소득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아주 젊거나 학령기 자녀가 없는 전문직업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고 보면, '멜팅 팟'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종류가 다른 곡물이 심어진 터와 터 사이의 경계가 뚜렷한 밭이라고 함이 옳을 듯 싶다.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인종과 경제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학교 교육을 특징 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서버브 학교는 비교적 좋은 학교 시설과 풍부한 학습 자료를 잘 갖추

고 있는 반면, 도시 빈민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의 물리적 환경 역시 그 빈곤의 정도를 더해간다. 이는 지방 자치제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교육은 그 재원의 많은 부분을 지역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경제 수준은 곧 학교의 경제력과 직결되어 있다.

또 하나는 학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누구냐는 곧 그 지역 학교 학생 구성원의 특성을 말해준다는 점이다. 미국 초 · 중등학교 학생의 학교 배정은 기본적으로 학구제에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버브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반면, 도시 학교에는 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저소득 혹은 빈민 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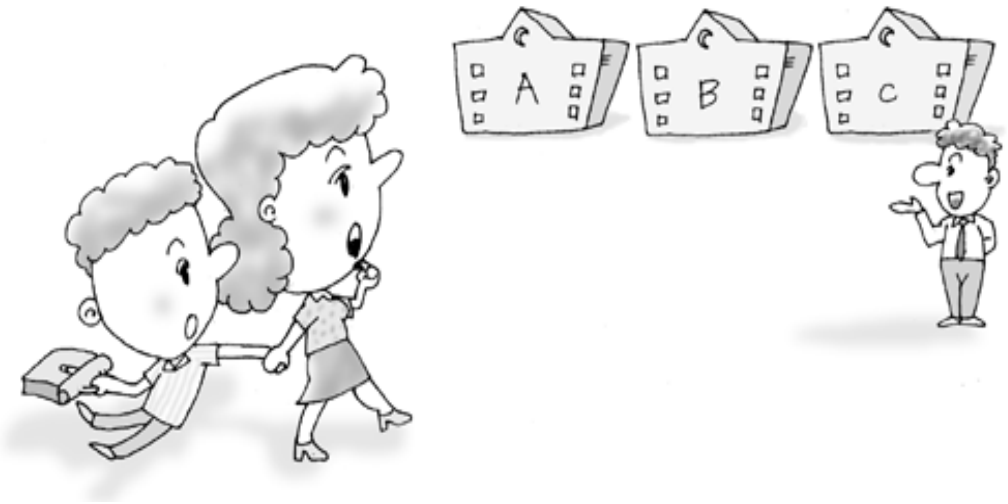
경제성과 인종이 갈라놓은 주거 영역은 자연스레 지역에 따른 학교의 비평준화 현상을 초래한다. 서버브의 학교는 대체로 넉넉한 학교 재정, 비교적 윤택한 가정의 학생,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 임금, 쾌적한 학교 시설과 풍부한 교육 자원, 안전한 주변 환경으로 특징지워진다. 반면,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도시, 특히 대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도시 내에서도 빈민지역으로 갈수록 부족한 학교 재정, 무직에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아이들, 서버브와 큰 격차를 보이는 낮은 교사 급료, 적지 않은 수의 무자격증 교사, 학교 주변의 마약 거래와 청소년 폭력 조직간의 총격전 등 학교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해진다.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하는 이런 엄청난 차이는 서버브와 도시 빈민 학교를 전혀 다른 환경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도시 학교의 학생 인구 대다수를 구성하는 가난한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들에게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 주류 문화 자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도시학교는 거듭되는 낮은 학업 성취도와 학생들의 태만과 중퇴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서버브의 학교는 대체로 넉넉한 학교 재정, 비교적 윤택한 가정의 학생,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 임금, 쾌적한 학교 시설과 풍부한 교육 자원, 안전한 주변 환경으로 특징지워진다. 반면, 대도시 내의 빈민지역은 부족한 학교 재정, 무직에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 부모를 둔 아이들, 서버브와 큰 격차를 보이는 낮은 교사 급료, 적지 않은 수의 무자격증 교사, 학교 주변의 마약 거래와 청소년 폭력 조직간의 총격전 등 학교의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해진다.

>> 바우처 프로그램과 그 찬 · 반론

도시 학교 문제 해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은 도시학교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만성적 도시 빈민 학교 문제가 사회, 경제, 문화의 불평등에 뿌리 박혀 있다고 보는 사회 경제 구조적 관점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교사 재교육, 연방 정부의 특별 재정 지원,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학습 부진아들을 위한 무상 과외 지도 등 교육 여건의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 하나는, 경제적 원리에 입각한 접근으로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육적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에 다니게 하



자율적 학교 선택은 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을 보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교육 독과점' 현상을 막고 선택의 폭을 사립학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시 학생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학교 환경으로부터 탈출하여 여건이 더 좋은 도시 사립학교나 서버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는 것은 부당하다,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 이면에는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고 교육 소비자 확보를 놓고 학교간 경쟁을 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을 유인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는 자연 도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시 빈민 학교의 교육 기능 저조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 강조를 두는 입장과 경제적 관점에 초점을 두는 입장 모두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유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기본 생각은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에서 근본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자율적 학교 선택은 주로 경제 논리에 의해 교육을 보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교육 독과점' 현상을 막고 선택의 폭을 사립학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1995년에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위스컨신 주(Wisconsin State)의 밀워키(Milwaukee), 오하이오 주(Ohio State)의 클리브랜드(Cleveland), 플로리다 주(Florida State)에서 실시되어 왔다. 저소득층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학생이 속한 학구에서 지출하는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립학교 교육을 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다. 클리브랜드에서는 2,250 달러를 사립학교 학비로 상환해 주는데 이 액수는 그 지역 사립학교 수업료의 약 90퍼센트에 달한다. 비록 상위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아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플로리다는 1999년 6월 바우처 프로그램을 주(State) 전체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했다. 플로리다 플랜은 학교가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다른 수행 평가에서 'F', 즉

낙제점을 두 번 받게 되면 학구의 학생 일인당 교육 경비에 해당하는 액수인 3,389 달러를 사립학교 교육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시 학생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학교 환경으로부터 탈출하여 여건이 더 좋은 도시 사립학교나 서버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0년 폴 피터슨(Paul E. Peterson) 하버드대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사립 재단의 도움으로 뉴욕, 워싱턴, 오하이오 이 세 개의 도시에서 실시해 온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뉴욕의 흑인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은 바우처를 이용한 사립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다른 한 집단은 공립학교에 그대로 머물게 한 후 2년 뒤 실시한 표준학력고사에서 사립학교에 다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우처를 사용한 사립학교 교육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아직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피터슨 교수의 연구에 참여했던 매스매티카 정책 연구소의 데이비드 마이어스(David Myers) 박사는 피터슨 교수와는 달리 집단간의 평균차가 확신을 갖기에는 그리 크지 않으며 바우처 프로그램이 흑인 학생들의 학업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두 집단간의 평균차를 바우처 프로그램의 성과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교 · 학급의 소규모화, 교사 재교육, 학교 시설 · 설비 개선, 교육 자원 보강 등이 도시 학교에 가져오는 학업 향상 정도만큼 크지 않다고 말한다.

또, 겉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공립 학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빈민 가정 아동의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는 금액은 사립학교 교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며, 부족한 사립학교 학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가정은 공립학교에 남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공립학교의 교육 예산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반에 학생수가 한두 명 빠져나갈 경우 학급 자체의 교육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몇 천 달러에 달하는 많은 교육비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같은 원리로, 사립학교가 바우처를 이용하는 학생을 학급에 한두 명 정도 받아들일 경우 학급 활동을 하는데는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게 되어 넉넉한 학교 운영이 가능해진다. 결국 감축된 예산으로 더 빠듯해진 학교 살림 때문에 고통을 받게되는 학생들은 공립학교에 남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고, 바우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사립학교로 옮겨 간 소수의 학생과 기존의 사립학교 학생들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립학교 재정을 축내가며 일부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 하더라도 학생이 원하는 사립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런 현상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입학을 원하는 학생 누구에게나 그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에게만 입학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버브의 환경 좋은 사립학교들은 가난한 바우처 학생 자체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 빈민 학생들에게 풍요로운 학교 환경을 제공하자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다.

무엇보다 가장 가시화된 문제는 바우처 프로그램은 정부의 돈을 종교로 흘러들어 가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립학교의 상당수가 종교학교이며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역시 대부분 종교학교이기 때문이다. 그 수치를 보면 종교학교는 미국 전체 사립학교의 77

퍼센트,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의 약 85퍼센트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것은 해가 갈수록 바우처 학생들의 종교사립학교 등록이 늘어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미 최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클리브랜드의 경우 프로그램 시작 첫 학년도인 1996~1997년 사이에 종교학교로 옮겨간 바우처 학생은 전체의 약 76.8퍼센트였던 것이 재판 소송 당시인 1999년에는 92퍼센트로 껑충 뛰어 올랐으며 올해에는 99.4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일반 사립학교의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1998~1999년 바우처 학생을 받아들인 일반 사립학교 11개교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3개교로 그 수에 있어 대폭 감소를 보였다.

이쯤 되면 바우처 학생은 거의 모두 종교학교로 간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데, 바로 이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의 감소가 종교학교 학생의 증가로 직결되며, 바우처 프로그램은 결국 정부 교육 예산으로 종교학교의 성장을 돕는 꼴이라는 것이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에 정부의 공공 재정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보칙 1조에 어긋난다며 합헌 여부를 가리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미국 최고 법원은 정부의 돈은 부모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종교학교를 선택한 사람은 학부모였다는 점을 들어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최고 법원의 판결로 바우처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은 명백해졌으나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측은 공공 교육 예산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통한 세력 확장을 돕는다는 비난을 일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바우처 학생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의 확산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에 정부의 공공 재정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보칙 1조에 어긋난다며 합헌 여부를 가리는 법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미국 최고 법원은 정부의 돈은 부모에게 지급되었다는 점, 그리고 종교학교를 선택한 사람은 학부모였다는 점을 들어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부와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있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 그 이후

-독일 각 주들의 성적 공개와 독일 사회의 대응

글 / 권미연(베를린 통신원, miyun65@hanmail.net)

2001년 12월 초에 피사(국제학생수학능력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국가 간 비교 결과가 발표되고,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참여한 32개 국가 중 독일이 과목당 21위를 기록하여 독일 사회가 어느 정도 충격에 휩싸인 이후, 올해 6월 27일에는 피사 테스트의 독일 주들 사이의 성적 비교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독해 능력의 비교에서 남부 바이에른 주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는 남서부의 바덴-뷔템베르크 주, 3위는 중동부의 작센 주이며, 4위가 중남서부의 라인란트-팔츠 주이다. "브레멘의 음악대"라는 동화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도 한 중북부 브레멘 주가 꼴찌이며 브레멘과 접하고 있는 중북부 작센-안할트 주가 꼴찌에서 두 번째,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부 브란덴부르크 주가 꼴찌에서 세 번째, 북부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 주가 꼴찌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다.

이 각 주들의 성적 결과를 비교 통계에 오른 다른 23개국과 비교해보면, 독일 내 1위의 바이에른이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일본, 스웨덴(이번 도표에는 빠져 있지만, 이전의 발표에서 한국은 총 32개국 중 핀란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순서로 상위에 포함되었으며, 2위의 바덴-뷔템베르크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다음으로 중상위를 기록하였으며 3위 작센은 덴마크, 스위스, 체코 다음으로 중위에 머물렀고, 독일의 꼴찌 브레멘보다도 성적이 떨어지는 나라는 멕시코와 룩셈부르크뿐이다.

상위 집단의 비교에서도 바이에른, 바덴-뷔템베르크 주의 상위 그룹만이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중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텍스트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위 학생의 비율은 산업국가 평균보다 적은 9%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적과 이해도가 부진한 소위 위험 학생(Risikoschuer)의 비율이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다. 더군다나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하며, 그들은 9학년 이후에도 단순한 문장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의 나쁜 성적은 모든 주에 공통된 문제이며, 문제 학생의 비율이 다른 산업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주는 바이에른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에 바탕을 둔 독일 내부의 비교 결과 발표는 독일 내 학교 체계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부 주들이 빈곤한 북부 주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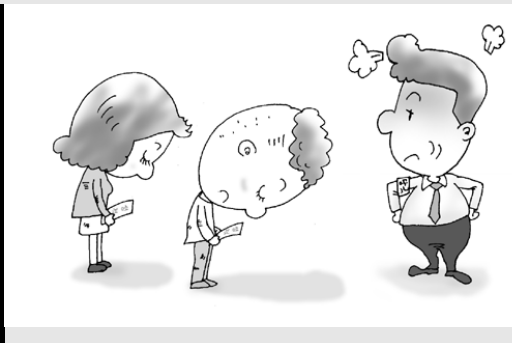
각 주들 사이의 격차는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부의 바이에른과 바덴-뷔템베르크의 학생들은 10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상위 그룹에 포함되는데, 이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라인란트-팔츠는 OECD 평균 정도의 상위 학생을 배출한다. 반면에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에서는 상위 학생의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4%에 불과하다.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이들 주에서는 독해 능력에서 위험 집단이 상위 집단보다 일곱 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다.

텍스트를 읽기 싫어하는 학생 비율은 하위 그룹의 주에서는 2분의 1 가량이며, 바이에른에서는 3분의 1 정도이다.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당연히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나쁘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적 격차는 시간으로 환산해 볼 때 적게는 한 학년, 많게는 두 학년에 이른다고 한다.

기독교민주주의연합(CDU)과 그 자매당 기독교사회주의연합(CSU) 통합 연방 수상 후보인 현 바이에른 주 수상 에드문트 스토이버(Edmund Stoiber, CSU)는 주간시사지 「포커스(Focus)」와 나눈 대담에서 "나는 기민련 · 기사련이 오랫동안 교육 정책에 책임을 져 온 곳이 사회민주당(SPD)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받아 온 주들에서보다 분명히 질적으로 더 높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피사는 기민련 · 기사련이 더 좋은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장관 에델가르트 불만(Edelgart Buhlman, SPD)은 주간지 「디벨트(Die Welt)」와 나눈 대담에서 손가락으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피사는 독일의 교육체계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독일교원노조는 아이들을 정쟁과 선거전의 볼모로 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성적과 이해도가 부진한 소위 위험 학생(Risikoschuer)의 비율이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해 볼 때 높다. 더군다나 브레멘,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이 집단에 속하며, 그들은 9학년 이후에도 단순한 문장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 궁극적인 문제는 사회적 후원의 부족이다

독일 내 피사 비교에서 1, 2위를 차지한 바이에른과 바덴-뷔템베르크는 기민련 · 기사련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이므로 기민련 · 기사련 정치인들은 그 결과를 자신들이 이루어 낸 좋은 교육정책의 표식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라인란트-팔츠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으므로 이들의 주장은 그다지 큰 설득력이 없다.

바이에른의 학교 체계는 엄격한 '사회적 도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바이에른에는 전통적으로 중앙 아비투어(Zentralabitur)가 있고, 많은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계속 걸러낸다. 아비투어(Abitur, 김나지움 졸업시험, 대학입학자격시험)까지 이르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평균 27%인데 비해 바이에른에서는 그 비율이 겨우 20%에 지나지 않는다. 이 비율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채우기에 너무 낮아서, 바이에른은 많은 대학 졸업자들을 독일 국내외의 다른 곳에서 수입해야 한다. 따라서 바이에

른의 높은 성적의 이면에는 좌절당하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한편 바이에른 주의 학생들은 9학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과 비교하면 약 한 학년 정도의 수업 시간의 차이가 되며, 베를린과 비교하면 약 1,200 시간의 차이가 된다. 따라서 바이에른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사회적 도태 체계와 다른 주보다 많은 수업 시간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전체에서 외국이주민 가정 출신의 어린이가 평균 이하의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비해 바이에른에서는 이들 어린이들도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바이에른에서 사회적 약자 출신이나 외국이주민 가정출신의 어린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이 있다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생활보호자 통계에 눈을 돌려보면 당리당략적인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꼴찌를 기록한 브레멘은 생활보호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이며, 반대로 수위를 차지한 바이에른은 그 비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가장 적은 곳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좋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개별 학생들의 재능에 상응하는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후원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또는 가족 관계에서 불우한 가정이 많은 주들에서는 학교나 사회가 이러한 가정 출신의 학생들에 대해서 더 많은 후원을 하지 않는 한 나쁜 성적 결과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사의 결과가 자의적 해석을 위한 계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꼴찌를 기록한 브레멘은 생활보호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이며, 반대로 수위를 차지한 바이에른은 그 비율이 가장 낮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가장 적은 곳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좋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개별 학생들의 재능에 상응하는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후원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 거론되는 대안들의 이념적 의미

6월 13일 독일 연방의회는 올 4월의 튀링엔 주 에어푸르트 시 구텐베르크 김나지움에서 발생한 살인 난동과 피사 테스트 결과 발표 후 처음으로 교육을 주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다. 모든 정당의 발언자들은 정당의 색깔에 관계없이 부진아 후원과 영재 후원의 병행, 지식 전달과 가치 전달의 조화, 모든 계층에 교육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원리 및 규정 학기 내에서는 수업료를 내지 않는 대학 공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방 수상 슈뢰더는 정부 성명에서 교육이 가치, 규준, 바른 행실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것이 사회의 총체적이고 철저한 경제화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신분상승의 기회 제공, 사회문제의 해결, 가족정책의 실질적 효력과 연관지어 역설하였다.

한편 바덴-뷔템베르크 주 교육장관 안네테 샤반(Annette Schavan, CDU)은 "우리는 행동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민당이 시험에 대한 저항심과 학교가 아이들에 대해 비윤리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비참한 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대개 우파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과 지식인 사이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은 70년대 본(Bonn) 공화국 시절에 진보적인 주들의 교육 관료들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징벌과제, 점수, 입학시험 등 모든 성적 경쟁을 폐지한 데에서 현재 드러나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며 시험과 성적 비교가 현재 독일 교육의 비참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사민당, 녹색당, 민주사회당(PDS-통일전의 동독공산당) 출신 좌파 성향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피사 결과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학생들을 성적 경쟁으로 내몰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그들에게 여전히 60, 70년대의 사회민주주의식 교육 개혁은 더 많은 정의를 위한 결정적 사회 개혁이었으며, 그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들은 이 가치가 성적 향상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며, 따라서 성적 향상과 교육 체계에서 넓은 범위의 후원이 상반되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서 외무부 장관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 Grue)는 교육 문제에서 대안은 바이에른 모델이 아니라 핀란드 모델이라고 본다. 그는 피사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생이 같이 다니는 '종합학교(Gesamtschule)' 체계에 의해 넓은 범위의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핀란드는 교사 양성, 적은 인원의 학급, 개별 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는 학교 개혁 또는 학교 개선 논의를 이념적 바탕에서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1970년대의 전선(前線) 대립이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쟁의 강화를 통한 성적 향상이라는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우파적 입장과 삶과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좌파적 입장이 현실에서 서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복지, 분배, 정의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적 특성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지향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와 맞부딪쳐 현실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논의되는 학교 개혁 또는 학교 개선 논의를 이념적 바탕에서 살펴보면, 교육에서는 70년대의 전선(前線) 대립이 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쟁의 강화를 통한 성적 향상이라는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우파적 입장과 삶과 교육에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는 좌파적 입장이 현실에서 서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가는 개선안

이러한 점에서 현재 독일 사회에서는 정당, 학계, 학교 현장에서 이념적 성향을 초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거의 합의되어 가고 있다.

〔1. 유치원 교육의 강화와 조기 입학〕

현재 모든 정당은 지금의 만 6세보다 빠른 조기 입학과 더 많은 온종일 보육원 설립과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유치원에서 독일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

〔2. 온종일 학교(Ganztagsschule, 全日制學校)의 설립〕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온종일 학교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전체적으로 30,700 일반 학교 가운데 1,650 학교만이 온종일 수업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학생들의 6%만이 오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다른 나라 학생들의 수업 시간보다 더 적다.

온종일 학교를 더 많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설 및 설비 이외에도 수업 외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와 오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양성된 교사들이 필요하다. 사민당은 재집권하게 된다면 40억 유로의 연방 재원으로 10,000 개의 온종일 학교의 설립을 후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네 학교 가운데 한 학교에서 온종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용적으로 온종일 학교의 오후 시간에는 부진아와 영재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나아가 일반인을 위한 독일어 수업, 외국인 출신 부모들의 독일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의무 교육 기간이 끝난 청소년에 대한 후원도 포함된다.

〔3. 중앙관리시험제도의 도입과 아비투어까지의 시간 단축〕

피사 독일 내 비교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한 바이에른과 바덴-뷔템베르크는 오랜 "중앙아비투어(Zentralabitur)"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관리시험의 도입에는 아직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각 학교들의 개별적 중점 분야가 약화되고, 학교의 질이 중앙화에 의해 하락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베를린 스테글리츠 김나지움 교장 볼프강 하르니쉬페거(Wolfgang Harnischfeger)는 "더 많은 지식이 테스트되면서 배운 것의 적용은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 뿐 아니라 그는 피사 테스트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사 테스트의 결과가 아비투어의 질을 나타내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재의 학제에서 11학년부터는 그 이전보다 요구되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중급 단계와 고급 단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하르니쉬페거는 중앙관리시험제도가 눈에 띄는 장점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한다. 즉 그것은 아비투어 단계의 가속화이다. 지금까지의 수업과 평가 방식에서는 교사가 과제를 내고 평가하는데 드는 시간이 평균 4주인데, 이것이 사라지면 교사의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업 양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비투어까지 13년이 걸리는 기간을 12년 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 현재 중앙관리시험에 대해서는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민당은 졸업 시험까지 수업연한을 12년 반으로 줄이는 것과 월반 규정의 완화를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독일교원노조 의장 울리히 퇴네(Ulrich Thoene)는 중앙관리시험 계획을 비판한다. 그는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도태될 것이고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아비투어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문제는 입학전의 어린이들의 언어 상태에서부터 드러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국가적인 교육기준〕

연방정부의 교육 제도 개선안에는 중앙교육평가장치와 정기적인 학교간 비교작업을 포함하는 국가차원의 교육기준의 확립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불만(Buhlman)은 모든 주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교육기준을 마련해야 할 근거는 교육 기회가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렇게 할 때만이 독일의 교육 자치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교육 기준에는 성적 평가 방식, 일반 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과목과 졸업 규정에서 통일적인 제도 수립, 한 학교 형태에서 다른 학교 형태로 넘어가는 이행 규칙 수립, 교사 양성 제도의 개선과 학교의 자립성 제고 방안, 수업 계획의 확충이 포함된다.

독일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국가 경쟁력 강화 문제를 개인간·학교간 경쟁의 유도와 아울러 그보다 적지 않은 비중으로 약소 계층에 대한 사회적 후원이라는 복지·분배의 정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독일 사회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진 사회이며 따라서 독일 사회의 미래도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 맺음말

피사 테스트의 위임자는 OECD이고 그 주된 목적은 국가간의 잠재적인 경쟁 능력 테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이 총 32개 경쟁국 중 21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독일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또한 독일 각 주 사이에서 드러난 심각한 격차는 독일의 교육 체계와 독일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만하다. 독일이 받은 비참한 성적표는 독일이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독일 사회가 받은 충격은 커 보인다. 즉 독일이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 수준과 높은 국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보장 제도는 교육 현장에서 저소득층과 사회 약자층 가정 그리고 그 어린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후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맹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한 미래 세대의 낮은 성적과 교육 수준은 미래 독일의 모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서 독일은 철저하게 공교육을 강화시켜 사회의 통합 능력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국가 경쟁력 강화 문제를 개인간 · 학교간 경쟁의 유도와 아울러 그보다 적지 않은 비중으로 약소 계층에 대한 사회적 후원이라는 복지 · 분배의 정의 문제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독일 사회는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진 사회이며 따라서 독일 사회의 미래도 어둡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

중국교육의 십년변혁

글 / 강영민(북경사범대학 교수, j_ym@263.net)

해마다 7월7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행되는 대학입학시험이 지난 7월에 막을 내렸다. 527만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학입시는 275만이란 거의 50%에 가까운 입학율을 학생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십 년 전인 1992년에는 400만 수험생 중 대학입학 통지서를 받은 학생들이 75만 명밖에 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십 년 전 중국대학의 재학생수가 218만 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719만 명에 달해 십 년 동안 2.3배의 성장률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교육발전상황을 설명해주었다. 이외 1992년에 재학생 9.4만 명밖에 되지 않던 대학원생이 2001년에는 39만 명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교육성장이 양적 팽창에서 질적 양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교육성장은 고등교육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초 · 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혁을 거듭해왔다. 1992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는 '교육발전은 근대화 달성의 근본 대책이다.' 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여 중국정부의 교육개혁 동향을 표시하였다. 이듬해 교육부는 〈교육개혁발전요강〉을 통해 중국 교육개혁의 십 년 발전 목표를 제정하였다. 본 개혁은 중국의 향후 십여 년의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이후로 이어지는 일련의 교육개혁의 서막으로도 일컬어진다. 이후 십 년 동안의 중국교육의 변화는 그간 나타난 새로운 교육명사들을 보아도 알 수 있겠다.

〈〈21세기 교육실시계획〉〉

교육부에서 제정하고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21세기 교육발전 실시계획〉〉은 21세기 중국의 교육 발전상이며 중국 교육의 기본 발전 지침이기도 하다. 〈교육법〉과 〈중국 교육개혁발전요강〉을 기초로 제정한 본 계획은 21세기 중국 교육발전의 목표와 임무, 실시방법 등에 대해 규명함과 동시에 초 · 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방대한 교육목표를 제출하였다. 1999년 1월에 발표된 본 〈계획〉은 21세기 자질교육계획, 21세기 교사연수계획, 211공정, 장강학자장려계획, 고수준 창조적 인재양성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양기(兩基)

양기는 두 가지 기본목표를 뜻한다. 그 출처는 〈중국 교육개혁 발전요강〉에서 제출한 초 · 중등교육 발전목표인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청장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소멸하자는 슬로건이다. 구체적 목표로는 20세기말까지 중국의 85%에 달하는 지역에서 기초교육을 보급

하고 90% 이상의 비문맹률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교육경비 투입을 증가하여 2001년 말까지 중국의 85% 인구의 지역에서 양기목표를 달성하였고 중학교 입학율은 88.6%에 달하였다.

>> 자질교육

중국의 자질교육은 전 국민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제기한 교육이념으로 그 기본내용에는 교육소비자와 사회의 수요에 부합되는 교육 모든 학생들을 향한 교육, 학생개인들의 잠재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이 포괄된다. 즉 학생들의 품성, 지능, 체능 등 방면에 전면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자질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교과서 개발제도 개혁, 대학입시개혁 등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교육부는 1998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 제정에 착수하여 2001년에 새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2001년 9월 실험단계에 들어서 2005년부터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인 본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확연히 다른 개발방식을 취하였고 교육과정의 기본목표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개정 중 인민교육출판사 한 기관에 교육과정개발과 교과서 편집을 위탁하던 전통을 타파하고 전국의 각 대학과 교육연구기관 및 중소학교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 교육과정 제정을 의뢰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지방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교과서 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인민교육출판사 한 기관만이 편집을 담당하던 국정교과서 시대를 마감하였다. 이 개혁이 실시된 후 각 지방에서는 이미 17종류의 중소학교 교과서를 편집 · 출판하였다.

자질교육 개혁 중 다른 한 관건은 대학입시개혁이다. 중국은 입시의 주요 참고 성적으로 되는 전국통일고시를 개혁하여 3X로 불리는 즉 수학, 국어, 외국어 이외의 과목들을 통합하여 종합평가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시험내용에 있어서도 될수록 암기식 평가방법을 피하고 학생들의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능력평가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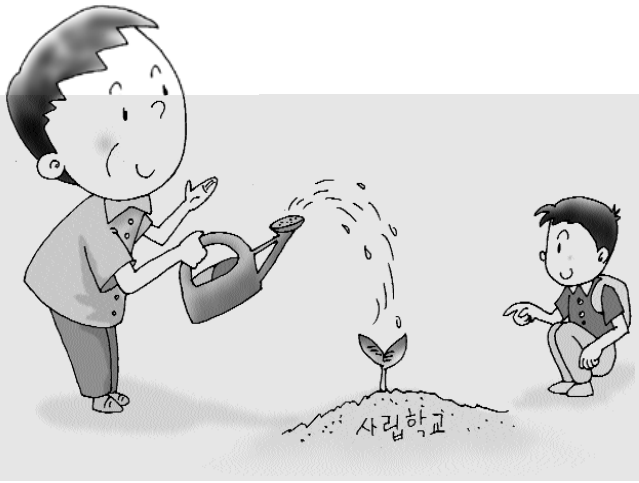
중국정부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교육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개혁을 거듭해왔다. 1992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4차 대표대회에서는 '교육발전은 근대화 달성의 근본 대책이다.' 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여 중국정부의 교육개혁 동향을 표시하였다. 이듬해 교육부는 〈교육개혁발전요강〉을 통해 중국 교육개혁의 십 년 발전 목표를 제정하였다.

>> 사립교육

일명 민간교육으로도 일컬어지는 사립교육은 지난 세기말에 중국에 나타난 새로운 교육현상으로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중국은 모든 사립학교를 국유로 몰수하여 국공립위주의 학교체계를 설립

하였다.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사립학교는 지난 세기말까지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들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신규교체가 빈번한 사립학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쉬운 일이 아니나 2001년 말까지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각종 사립학교가 56,274개교였다. 재학생 923만 명, 교사 42만 명이나 되는 사립학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학위 수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치원 및 중 · 고등학교이다. 이런 학교들은 중국의 귀족학교로도 불리는데 대부분 거액의 학비를 요구하는 대신 공립학교보다 훨씬 월등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그리고 우수한 교사를 보장해준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대학들은 그 발전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립학교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나타난 사립학교는 지난 세기말까지 놀랄만한 성장을 보였다. 사립학교들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신규교체가 빈번한 사립학교에 대한 구체적 통계는 쉬운 일이 아니나 2001년 말까지 교육부에 정식으로 등록한 각종 사립학교가 56,274개교였다.

1202개 사립 고등교육기관 중 교육부의 학위수여권을 인정받은 대학은 불과 89개, 이외 대다수 사립학교들은 학위수여권이 없다. 졸업장 하나만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느낀 많은 사립학교들은 될수록 사회에서 시급히 필요한 전공들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 분교의 형식으로 국립대학들과 공동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런 생존책은 사립학교의 대량 발전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은 대우이기도 하다. 사립학교가 중국에서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음을 감지한 중국정부는 사립교육 정책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2년 6월 24일, 중국 인민 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간교육 촉진법〉을 통과하여 중국에서의 사립학교의 지위를 규정하였고 사립교육의 운영권리와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교육발전이 거대한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나 중국 현재의 교육상황은 여전히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0년 말까지 중국은 12.7억이란 방대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었으나 이들의 평균교육수준은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은 4억에 달하는 청소년들을 사회에 배출하게 된다. 이런 청소년들의 인력수준이 중국 향후의 발전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교육발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러시아 체제 전환과 대학 교육의 변화

글 / 김계환(모스크바 통신원, kevinmoscou@hanmail.net)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붕괴 이후, 혹은 8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 전환은 그 변화의 규모와 속도 및 깊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안정된 개혁 주체의 부재, 장기적 개혁 프로그램의 부재, 개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를 이유로 개혁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발생적 대전환(transformation)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지만, 러시아의 대부분의 언론과 연구서들은 '개혁'(reform) 또는 '이행'(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교육제도도 다른 정치 경제제도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역시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 제도의 급속한 변화에 동반되기 마련인 고등전문인력의 수요구조 변화는 고등전문교육(대학교육; 고등전문교육기관은 대학, 아카데미, 연구소를 포괄하는 대학보다는 넓은 개념임)과 관련된 각종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소련)의 고등전문교육기관은 산업,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의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졸업 후 국가에 의한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이는 16~17세에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물론 교육도중 전공을 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를 위해선 대학입학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었던 셈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제 전환은 그 변화의 규모와 속도 및 깊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언론과 연구서들은 '개혁'(reform) 또는 '이행'(transi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에 도입된 새 제도에 따르면 '대학' 입학생은 우선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대신 보다 넓은 범위의 연관된 지식분야를 묶은 '계열'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의 교육은 세 단계, 수준으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교양교육과정에 해당하는 2년, 한국의 학사과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2년의 제

2단계, 최소 2년 제3단계인 마지스트라(석사과정) 과정이 그것이다. 제1단계 2년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게 되며, 제2단계로 진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새 제도하에서 달라진 점은 제2단계로 넘어갈 때 '대학' 이나 전공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제3단계는 교수요원이나 연구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계열' 별 구분과 나란히 러시아의 현재 '대학' 교육에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 등 특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비에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5년의 교육과정이 공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고등전문교육기관은 대학, 아카데미, 연구소로 구분된다. 고등전문교육의 핵심기관은 다양한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대학으로 러시아에는 현재 100여 개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법학 아카데미, 경제경영 아카데미, 스포츠 아카데미 등 한 분야에 특화된 고등교육기관이다.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겸비한 연구소는 대학이나 아카데미에 부속되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 대학과 학생수의 급증

1990년대 러시아 대학 교육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학생 수와 대학 수의 급속한 증대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기존 국 · 공립대학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일 정도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표에서 보듯이 1995~2000년 사이 학생 수는 2백 7십만에서 4백 2십만으로 가히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대학 수도 90년대 초반 5백여 개이던 것이 현재 900여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학 수의 증가를 주도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설립이 허용된 사립대학의 폭증이다. 대학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사립대학의 급속한 증가, 국립대학 분교의 증설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90년대 초반까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던 사립대학들이 94년도에 100여 개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350여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물론 신설 사립대학들은 기존 국립대학에 비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한 작은 규모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국공립	학생수 (단위: 천명)	비국공립	학생수 (단위: 천명)	인구만명당 학생*
92/93	535	2,638			178
93/94	548	2,543			171
94/95	553	2,534	157	111	172
95/96	569	2,655	193	136	179
96/97	573	2,802	244	163	190
97/98	578	3,046	302	202	207
98/99	580	3,347	334	250	247
99/00	590	3,728	349	345	280
00/01	607	4,271	358	471	327

*97/98년도까지는 국 · 공립, 이후는 사립대학 포함.

모스크바에 30여 개를 비롯하여, 쌍트 페체르부르그 등 주로 대도시에 설립된 사립대학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초 · 중반 국립대학의 경우 전체 학생의 27%가 법, 경제 경영, 인문 사회과학을, 나머지는 기술, 자연과학, 의학을 전공하고 있어 후자가 35%정도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불균형' 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

립 대학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법률전문가, 경제 경영 전문가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50~1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야기하는 전문인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기존 대학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법 경제 전문인력의 82%가 이들 사립대학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외에도 마케팅, PR, 물류, IT 전문 인력의 공급이 사립 대학의 주요 교육내용이다.

이러한 대학 수의 양적 증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의 대학이 교수요원의 자격이나 학교시설 면에서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제도적 혼란 속에 설립된 사립대학, 아카데미의 상당수와 몇몇 국립대학의 분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나온 정부 보고서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있었던 대학 총장 회의(대규모 대학의 총장들이 실세인)에서도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전문인력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반영으로 대학 인허가 기준의 강화,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금년 교육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품질검사 경찰'(quality police)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경찰'이 대학을 조사하여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의 창설은 대학의 급속한 증설과정에 동반된 질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반영으로 대학 인허가 기준의 강화,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금년 교육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품질검사 경찰'(quality police)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경찰'이 대학을 조사하여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의 창설은 대학의 급속한 증설과정에 동반된 질의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수준의 평가 기준과 통제 방법을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 사립대학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 또한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선 현재 대학 교육의 수준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분야별로 세분되어 상호 연관성이 없는, 교육부 산하 각 부처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서 통일된 엄격한 평가와 통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국립 모스크바 대학의 한 학장은 현재 러시아에는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행정적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기까지 한다. 그는 현재 대학 설립의 인허가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청소'가 엄격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학 설립 신청 시 규정된 숫자의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후보자를 갖추었는지, 교육용 도서를 구비하고 있는지, 정부가 정한 필수 전공 세트를 갖추고 있는지 등등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형

식적 조건의 충족이 곧 요구되는 교육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많은 대학들이 박사, 박사후보자의 숫자를 이런 저런 방식으로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대학의 학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논문 주제가 부적합해 학위취득이 불가능했던 다른 대학의 한 교수가 나중에 대학의 학장으로 돼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도서관의 도서 숫자도 역시 도서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는 올바른 평가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 예견되는 위기와 대응

대학 당국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대학 수의 급증이 머지 않은 장래에 대학의 위기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정부조달'도 이에 대한 대응의 하나라는 측면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정된 분야의 일정 수의 학생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주문하고 이 학생 수에 비례해 정부의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학생에 대한 취업이 입학 때부터 보장되고 그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주의 시대의 부활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정부로서는 대학간의 경쟁, 즉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학생 유치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보조금 지원 매카니즘의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연령별 인구구성을 볼 때 현재의 입학생 정원이 유지된다면 2010년 경 입학 정원이 해당연령의 입학지원자 수를 초과하게 된다. 즉 평균 경쟁률이 1대1에 미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현재는 1.8:1 - 2:1정도).

이러한 상황은 머지않아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몰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학 청소'도 선언된 목적과 더불어 대학간의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표현이란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청소'의 표적이 되고 있는 사립대학은 이를 국립대학의 로비의 결과로까지 보고 있다. 한 사립대학 학장은 "교육시장에서 햇볕 잘 드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의 부재는, 러시아의 몇몇 유명 대학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러시아 대학의 학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대학교육이 보이고 혼란은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국, 특히 유럽 다른 나라와의 고등전문인력 교류에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행정적 방식에 의한 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고급 전문인력 시장에서의 졸업생에 대한 수요, 그들의 급여수준이야말로 참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교육부를 포함해 각종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평가순위(rating)가 존재하는 마당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은 행정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및 제재는 수많은 소송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의 부재는, 러시아의 몇몇 유명 대학을 제외하고, 외국에서 러시아 대학의 학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999년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은 유럽차원의 통일된 고등교육공간의 창설을 선언한 바 있다. 범유럽차원에서 고등전문인력 시장의 형성을 위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통의 비교 평가 기준과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 가였다. 즉 교육 분야에서 상이한 제도적 전통을 유지해 온 나라들이 어떻게 공통의 제도로 나아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의 대학교육이 보이고 혼란은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국, 특히 유럽 다른 나라와의 고등전문인력 교류에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 두뇌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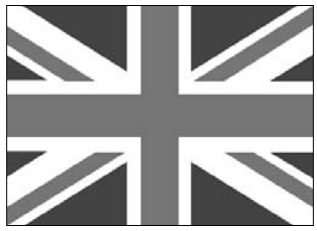
러시아의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두뇌 유출'이다. 소련의 기초과학은 세계최고의 수준임을 자타가 공인해왔다.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으로 인정받아왔다.

많은 교육 당사자들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장래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 재정의 파탄은 그 동안 고급 두뇌에 일자리를 제공해왔던 산업과 연구소가 더 이상 투자와 인력충원을 못하는 사태를 낳았고 연구소 연구원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보다 낳은 연구조건을 찾아 외국으로 대거 떠나갔다.

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 간 50여 만 명에 이르는 '두뇌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스크바 국립대의 경우 90년대 초반 졸업생의 약 25%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연구설비의 부재 때문에, 혹은 자기실현을 위한 보다 낳은 조건을 찾아, 연구소에 따라서는 실험실 인력 전체가 외국의 한 실험실로 옮겨간 경우도 있었다. 모스크바 물리-기술 연구소의 경우, 90년대 초반 15~20%의 졸업생이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학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국내 사정이 호전되면서 사이버네틱스, ＩＴ 등 전공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머물고 있지만 물리학의 경우 아직 실험 연구 장비 부족으로 졸업생의 상당수가 외국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혼란스런 체제 전환과정은 그 전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부하던 교육제도에까지도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다. 특히 정치 사회적 전환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고등전문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초 중등 교육은 손상을 입지 않고 건재한 것으로 러시아 교육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교육문제 관련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영국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학교에 심리학자가 있지요. 영국엔 없습니다. 러시아의 언어교육은 영국에 비해서 월등히 강합니다. 당신들에겐 수학, 물리 교사가 충분하고도 남지만, 영국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의 수학 물리학자들이 영국에 오긴 하지만요. 러시아엔 금빛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지식의 생산이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21세기에, 러시아가 어떻게 체제전환의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들이 자랑하는 교육시스템의 진가를 발휘할지 눈여겨볼 일이다. 교육

학교 입학연령(Starting-age)



글 / 하태욱(런던 통신원, taewookha@hotmail.com)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구조화된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명확한 합의점이 없는 이슈이다. 교육학자들, 특히 아동교육학자들은 학교 시작 연령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토론해왔지만, 아직까지도 합의된 사항은 없다. 학교 입학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의 경우, 입학연령을 늦추자는 주장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영국(잉글랜드)의 초등학교는 만 5세에 시작된다. 그러나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담당한다는 명목아래 리셉션 학급(Reception Class)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 입학연령은 4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초등학교들이 다 이 리셉션 학급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입학시험 준비과정인 A-level까지 모두 한 학교에 있기도 하고, 각각의 부분이 독립적인 학교로 존재하기도, 혹은 이 중 일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개개 학교별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학교들이 이 리셉션 학급을 두는 데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 외에도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 수를 일찌감치 확보해 두려는 속셈이 숨어있다.

영국이 5세 입학을 법률로 정한 것은 1870년 교육법에 의해서였는데, 이 법안이 정해지기 까지 1860년대에 있었던 의견은 3세 입학에서부터 7세 입학까지 다양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깊이 있는 토론이 수행되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다양한 의견들의 가장 중간 나이인 5세가 결정되었던 바 있다.

물론 가급적 어린 나이에 정규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부 교육사회학자들과 교육정책가들은 공교육의 시작연령을 낮춤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평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조기교육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 계급에서는 아이들을 집안에 내팽개쳐 두거나 무자격 외국인 보모에게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교육 입학을 가급적 어릴 때 실시해야만 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주장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어차피 계층간의 격차는 유아기의 가정교육에서부터 날 수밖에 없으며 단지 아이들을 일찍 학교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선적인 사고라는 비판이다.

비판론자들은 불확실한 이득에 비해 아동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보자. 아론(Aron)은 즐겁게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였다. 네 살이 되자 아론은 리셉션에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기에는 그 아이에겐 무리였다.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론은 저녁에 집에 와서는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또래보다도 작았던 아론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학교에서 폭력적으로 변했고 매일같이 싸움을 하곤 했다.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 다른 아이를 놀리고 도망가는 행동을 반복했다. 아론의 착한 심성을 사랑했던 그의 부모는 아론이 1학년에 올라가면서 행동이 계속 악화되자 아이를 자퇴시키고 집에서 가정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학교를 가지 않게 되면서 아론은 예전의 사랑스럽고 활기찬 아이로 돌아왔다. 영국인이 아닌 그의 엄마는 왜 영국이 그토록 일찍부터 아이들을 학교로 몰아넣고 놀 시간을 빼앗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3개 국어에 능통한 그녀이지만 그녀의 정규교육은 6살이 넘어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딱딱한 수업을 받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영국의 신학년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8월에 만 4살이 되는 아이들까지가 리셉션반의 취학대상이 된다. 샘은 지난해 8월 30일로 만 4살이 되었다. 샘의 부모는 몇 년 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그 학교에 설치된 유치원으로 보내야만 아들의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샘은 3살이 되던 해에 그 학교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리셉션에 다녔다. 처음 몇 개월 동안 샘은 부모에게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 애를 먹어야 했었다. 또한 선생님이 일어나 손뼉을 치며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에요' 하고 말하자 세 살 짜리 아이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장면도 목격했다. 하지만 26명의 아이들에 두 명의 교사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다. 30명에 교사 한 명이 붙는 네 살 짜리들의 리셉션 교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도였다. 샘의 부모는 올해 초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학교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잠시 집에 있다가 올 해 9월 다섯 살이 되면 아이가 다시 리셉션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오는 9월에 리셉션이나 1학년 어느 쪽도 자리를 줄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샘의 부모는 근처의 학교들을 돌아봤지만 모두 비슷한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근방의 학교들을 다 뒤진 끝에 샘의 부모는 유치원이 없는 한 학교에서 샘을 5살에 리셉션 반으로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약 그 학교에 유치원이 있었더라면 샘을 5살에 리셉션에 선뜻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제 신학년도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샘의 부모는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일년전의 샘은 낯선 아이들 틈에서 생활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매우 자신감에 차 있고 새 생활을 탐구할 기대감에 벅

영국(잉글랜드)의 초등학교는 만 5세에 시작된다. 그러나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담당한다는 명목아래 리셉션 학급(Reception Class)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 입학연령은 4세라고 할 수 있다.

차하는 아이가 되어있다. 더구나 아이는 이전과 달리 글자나 숫자 같은 것에 흥미를 보이면서 스스로 학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손 근육과 뼈는 6세가 되어야 제대로 발달되기 때문에 6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게하고 정확한 글자나 숫자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 아동심리학자들은 3~4세는 아이들이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일하는 부모의 경우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보모나, 아이와 교사간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언제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자들 간에 전혀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논란이지만 조기교육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현격하게 적은 교사-학생간 비율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영국의 경우 4세 아동의 80% 정도가 리셉션에 등록하고 있으며 리셉션은 교사 1명당 30명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에 있어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이 중요시되면서, 학교에 잘 적응시키기 위한 단계로 설정된 리셉션이 2학년에 있을 전국학력평가시험의 준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블레어 정부의 집권이래 각급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들을 쥐어짠 끝에 문해력과 수리력의 전국 평균은 상승했지만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학교에 배정되는 지원금이 시험성적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목표는 시험준비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리셉션 학급을 설치하고 아이들을 자기 학교의 유치원-리셉션-초등학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 - 혹은 강제 - 하는 이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시험 때까지 아이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기 입학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연구들에 따르면 아이들의 손 근육과 뼈는 6세가 되어야 제대로 발달되기 때문에 6세 이전에 아이들에게 연필을 쥐게 하고 정확한 글자나 숫자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 아동심리학자들은 3~4세는 아이들이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일하는 부모의 경우 지속적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보모나, 아이와 교사간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셉션 학급은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셈이다.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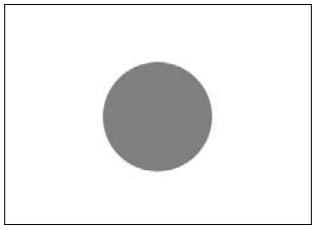
같은 영국의 일부(Great Britain)에 속해있으면서도 독립된 의회를 통해 다른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있는 웨일즈가 최근에 실시한 개혁은 조기교육을 강조하는 모든 사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웨일즈의 교육부 장관인 제인 데이비슨 (Jane Davidson)은 웨일즈의 유아교육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닌 바 있다. 그 결과 그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아교육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학습' 보다는 아이들의 '발달' 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정규교육은 한참 후에야 시작한다는 공통점이었다. 이 나라들은 시험에 대한 특별한 강조 없이도 문해력과 수리력에 모두 높은 점

수를 거두고 있었고, 고등교육의 진학률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조기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화된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남의 말에 귀기울이고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며 얼마나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른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결국 그 악기를 집어치우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조기교육이 자칫하면 학습에 대해 '신경을 꺼버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웨일즈로 돌아온 그녀는 덜 구조화되고 아동중심이 되는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웨일즈 의회가 분리되기 이전에 영국 교육당국에 의해 도입된 2학년 전국학력평가 시험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아이들의 발달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정책으로, 지난 몇 십 년간 교사들과 아이들을 들볶아 일정정도의 성적향상을 가져온 영국의 교육정책과는 정 반대의 철학에 서있는 것이다. 대신에 데이비슨 교육부 장관은 유아 사회복지기관들과 교육행정부서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전국의 아동교육기관이 모든 3세 이상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했다. 그녀에 따르면 아동의 조기교육에는 '학습에 대한 관심과 아동복지에 관한 관심'이 적절하게 융합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 커리큘럼 그룹 (Early Years Curriculum Group : EYCG)가 5세미만 아동교육기관을 장학감사한 후 펴낸 제안서는 '아동들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감각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책상에 붙들어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교사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장학사들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장학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기 커리큘럼 그룹 (Early Years Curriculum Group : EYCG)가 5세미만 아동교육기관을 장학감사한 후 펴낸 제안서는 '아동들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감각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책상에 붙들어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교사의 강의를 듣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장학사들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키기 위해 노력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장학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히고 있다. 조기교육의 열풍이 불고있는 한국의 학부모들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교육

새 교육과정의 실시와 불붙은 학력 저하 논쟁



글 / 이정미(도쿄세이토쿠대학 교수, leejm@pop06.odn.ne.jp)

>> 교육내용의 3할 삭감의 체감 온도

지난 10월 쯤에 있었던 일이다. 소학교 3학년인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려고 책상앞에 같이 앉았다. 요즘 산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물어보니 '시각과 시간'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 단원은 한 달 전부터 배우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곳을 하는가 하여 의아해 했더니 아이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눗셈, 분수, 소수는 4학년 때 배운데요.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나 봐요.' '아니 교과서에 버젓히 들어 있는데 4학년때 배우니까 안 한다구!' 결국 3학년 2, 3학기는 특히 산수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갔다.

일본에서는 2002년 4월부터 그 동안 격주로 실시되었던 주5일제 수업이 매주 실시되는 '완전주5일제'가 실시되었고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함)이 실시되면서, 항간에서는 교육내용의 3할이 삭감된다고 이야기되는 학교교육의 대변환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발표된 이후 여러 시각에서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으나, 일본 문부성에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학력'의 신장에 역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결국 지난 한 해는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측과 문부성이 계속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어 왔다.

위의 사례는 교육내용이 삭감되어 일부 교육내용이 한 학년 위로 배정되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시간 때우기 식의 조치였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단원에 비중을 두고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3학년 교과서에 처음 나오는 분수, 소수는 결국 전혀 공부하지 않은 채 4학년이 되었다. 이것은 소학교 아이를 둔 부모로서 학력저하의 우려가 쓸데없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었고, 그 후 계속해서 교과서의 변화와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4학년이 되어서도 3학년 때 학습한 원이나 삼각형 등의 단원이 반복되었고 복습을 중심으로 한 산수 학습이 실시되었다. 이는 일부 학년이 아닌 의무교육단계인 소학교, 중학교 전반에 걸쳐 요근래 1년 동안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 대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직접 참가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결과를 분석하는 체험학습의 비중은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의 신설로 인해 더욱 비중이 커졌다. 일본의 소학교 교육은 전 과목에 걸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리하고 발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교육 방법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적 기간 중에 나타난 혼란은 이대로 두면 일본의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와 학생의 '학력저하'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교육에 맡겼다가는 아이의 교육을 망친다는 불안감에서 사설학원에 보내 아이들에게 보충학습을 시키는 경

우가 늘고 있으며 올 여름은 그 어떤 해보다도 학원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었다. 학원들 또한 제때를 만난듯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 학력저하 논쟁의 발단

이러한 학력저하 논쟁과 불안감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대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학력저하 논쟁의 발단과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견인적 역할을 한 것이 '일본 수학회'의 워킹 그룹이었다. 대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미1980년대 후반부터 나돌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일본수학회는 1996년에 '대학 수학 기초교육 워킹 그룹'을 조직하여 100명의 수학전공 교수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수학전공 학생의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79%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그룹은 또한 대학생의 학력저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력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분수를 못하는 대학생"(강부항치, 호뢰신지, 서촌화웅, 1999, 동양경제신보사)이나 "산수경시가 학력을 붕괴시킨다"(화전수수, 서촌, 1999년, 강담사), '소수를 못하는 대학생"(2000년, 동양경제신보사)등의 저서가 출판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립대학의 특히 경제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 · 중학교의 초보적인 계산 문제를 테스트한 결과 대학입시에서 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득점이 낮아 6할 정도의 성적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대학 입시에서 사립대의 일부 과목만의 입시(대개 국어, 영어, 사회 세 과목) 로 인해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학경시 현상은 일본의 대학입시가 전국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공통1차시험'(1979~1989)과 '대학입시센터시험'(1990~ 현재)이 실시되면서부터라는 지적이 있다. 어쨌든 대학생의 학력저하 문제는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소학교 교육은 전 과목에 걸쳐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라기보다는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리하고 발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교육 방법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적 기간 중에 나타난 혼란은 이대로 두면 일본의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와 학생의 '학력저하'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였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학력저하 문제가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의 실시로 초 · 중등교육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일부에서 새학습지도요령과 새 검정교과서를 받아들이지 않을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또한 지난 8월 3일자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오랫동안 중 · 고교의 과학 교육을 담당해 온 한 대학 교수가 어정쩡하게 학습내용을 삭감한 문부성의 검정 교과서에 대항하여, 앞으로의 고도지식사회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학 교과의 학습내용을 엄선하고 문부성의 검정을 받지 않는 교과서, 즉 '검정외 교과서'를 교사들이 직접 만드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

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편 초 · 중학생의 학력저하에 관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면으로 부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서 IEA(국제도달도평가학회)의 학력비교를 제시하며 일본의 초 · 중학생의 계산력은 톱클래스라고 반론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 문부성 교육백서에서도 '공통으로 배우는 지식의 양은 줄지만 여유를 가지고 반복해서 배움으로써 기초 · 기본의 확실한 정착을 도모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 새 학습지도 요령의 변화

그러면 도대체 새 학습지도요령은 어느 정도의 교육내용이 삭감된 것일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별로 학습지도요령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수업시간의 변화를 보면 예를 들어 소학교 6학년의 총 수업시간이 1,015시간에서 945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각 교과에 배정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줄어들었다.

국어 210 → 175 사회 105 → 100 산수175 → 150 이과 105 → 95
음악 70 → 50 미술 70 → 50 가정 70 → 55 체육 105 → 90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신설 110시간
※단 1시간은 45분이다

문부과학성은 기초 · 기본을 반복 지도하여 확실한 정착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나 교육내용을 윗학년으로 이행 · 통합하면서 수업시간도 크게 줄여 반복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조건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을 새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인 수업의 진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더욱 바빠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이 줄어든 것은 우선 주5일제를 완전히 실시하면서 토요일분의 수업시간이 줄어든 것과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을 실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의 수업시간이 줄어든 때문이다. 이 줄어든 수업시간에 맞추어 교육내용도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삭감할 수 밖에 없었고 삭감된 내용이 윗학년으로 배당되면서 교육내용은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되었다. 즉 절대적 시간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교육내용의 삭감이라는 악순환의 사슬이 반복되게 된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학습내용의 경감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기초 · 기본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다고 하나 실제 각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줄어든 교과시간 내에 학습내용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과내용의 경감과 함께 수업시간도 줄어들어 문부성의 논리대로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보다는 이전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한 채 교육내용만이 줄어든 셈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과 다른 점으로서 일본 소학교의 국어 교과에서는 한자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자가 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읽지 못하면 책이나 신문 심지어는 만화도 읽을 수 없으므로 소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 때부터 일본의 문자인 히라가나, 가타가나의 100문자와 함께 한자학습이 바로 시작된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때까지 상용한자1,945자중에서 1,006자를 익히고 자유롭게 구사해야 된다. 그런데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수업시간 수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교육내용의 엄선이 불가피하다면 익혀야 할 한자수도 삭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자의 읽기 · 쓰기의 분리라는 응급처방식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새로운 한자가 배당된 해당 학년에서는 읽을 수 있으면 되고 그 윗학년에서 쓰기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습득해야 할 한자 수는 그대로이고 쓰기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이며, 어떻게든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한자 습득율이 낮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수업시간 삭감 이전에도 4학년의 한자습득율이 50%로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으나 이런 상황이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내용의 3할 삭감과 함께 교과서의 페이지 수도 삭감되어 교과서는 더욱 무미건조, 난해한 것이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기초 · 기본을 반복 지도하여 확실한 정착을 꾀하겠다고 주장하나 교육내용을 윗학년으로 이행 · 통합하면서 수업시간도 크게 줄여 반복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조건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새로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와 구체적인 수업의 진행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더욱 바빠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 일본 교육 실험대 위에 놓였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바로 직전인 2002년 1월 17일 도야마 문부과학대신은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한 2002 어필'로서 '배움을 장려한다'를 발표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세심한 지도로 기초 · 기본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 소인수 수업 · 능력별 지도 등의 개별적인 세심한 지도의 실시를 추진하고 기초 · 기본의 확실한 정착이나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육성을 꾀한다.
2. 발전적 학습으로 각각의 개성에 맞게 아이들의 능력을 더욱 신장시킨다. 학습지도요령은 최저기준이며, 이해가 빠른 아이들은 발전적인 학습으로 능력을 더욱 신장시킨다.
3. 배움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고 학습 의욕을 고양시킨다.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등을 통해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장래 아이들이 새로운 과제에 창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힘과 의욕을 가지게 한다.
4. 학습의 기회를 충실하게 하고 학습 습관이 몸에 배게 한다.
   방과 후의 시간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이나 아침독서 등을 권장, 지원하고 적절한 숙제나 과제 등 가정에서의 학습이 충실하도록 꾀하며 아이들에게 학습 습관이 몸에 배게 한다.
5.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
   학력향상 프런티어 사업 등을 통해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한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적절히 평가한다.

이 어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어필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작년 12월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생의 학습도달도 조사(PISA)'에서 일본의 초 · 중학생의 학력은 지식의 양이나 과제해결능력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상위 수준에 있지만, 학생들의 '숙제 혹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참가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고 일본에서 가장 독해력이 높은 학생들이 OECD전체의 중간 정도의 수준에 위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초 · 중학교의 학력저하가 실제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것이 국가가 정한 한계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지도해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지금까지의 학습지도요령이 정한 교육내용은 꽤 과포화 상태였고 사실상 그 내용만을 다 지도하는 것도 무리였던 부분도 있었다. 그러데 이번에는 반대로 새 학습지도요령은 최저 기준이니 삭감된 부분은 학교에 실정에 맞추어 가르칠 수 있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발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이 어필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학습지도요령이 국가가 정한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명문화하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그것이 국가가 정한 한계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지도해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또한 실제로 지금까지의 학습지도요령이 정한 교육내용은 꽤 과포화 상태였고 사실상 그 내용만을 다 지도하는 것도 무리였던 부분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새 학습지도요령은 최저 기준이니 삭감된 부분은 학교에 실정에 맞추어 가르칠 수 있고 교사의 판단에 따라 발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교과용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교과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라는 검토보고에서 '발전적 학습내용'의 기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유로운 학교생활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포기한 것일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문부과학성은 여전히 이러한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글로벌한 국가경쟁시대에서 경제적 논리와 교육적 논리의 밸런스를 맞춘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최대의 논점이 될 것이다.

일본은 학력저하 논의의 돌풍 속에서 예정대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지난 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당분간의 개정은 어려울 것 같다. 이 결과가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형태로 드러날 것인지 나라 전체가 참가하는 대대적인 교육실험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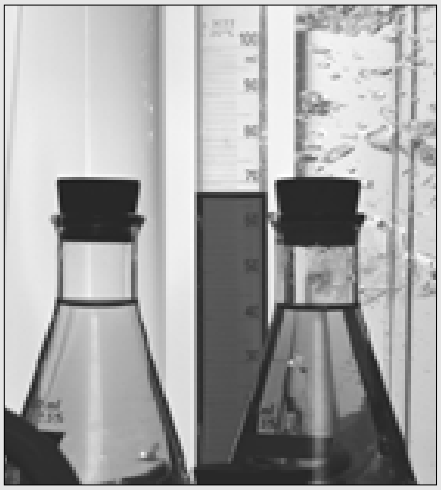
'창의성'에 대한 이해 >>

글 / **서혜애**(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haseo@kedi.re.kr)

1. 창의성이란?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창의성을 주로 확산적 사고력을 포함하는 지적 능력으로 보거나, 개인적 특성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문제 해결력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는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시초를 거슬러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거론할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창의성을 신이 내린 선물로 믿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창의적 사고와 산물을 창출하는 것은 신을 즐겁게 하는 일로 간주하였다. 이 시기는 창의성의 황금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이다. 중세시대는 종교의 압도적 지배로 인하여, 신의 권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억압하고, 개인의 사고와 산물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창의적 사고나 산물을 개인의 업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시대였다. 이 시대를 문화의 암흑기라 부르기도 한다. 즉, 개인의 창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로서,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고찰된다.

1300년대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기는 인본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신이 아닌 인간이 정신적 사고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창의성이 초자연적 · 신적 산물이라는 전제를 배제하고 인간이 지닌 요소로서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인간의 창의성은 유전적 산물로서 간주되었던 시기로도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은 유전적 산물일 뿐만 아니라 성장단계에서 얻어지는 획득 산물로서 함양될 수 있다는 점을 첨가하게 되었다.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은, 유전적 산물보다는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이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얻어지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설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창의성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신비적 접근, 정신 역학적 접근, 인지적 접근, 심리측정적 접근, 사회성격적 접근방법을 거쳐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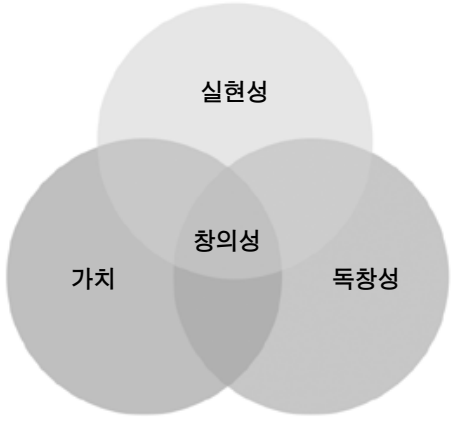
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에 대한 정의 중에서 칙센미하이와 울프(Csikszentmihalyi & Wolfe, 2000)의 '독창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산출물' 이라는 정의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정의로서, '연관성이 있고 효과적인 새로운 사고의 생산' 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기 대부분의 연구에서 창의성은 사고 또는 산출물의 독창성, 새로움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었으나, 핵심 요소와 연관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는 정의들이 후속 연구로 이어지면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움 하나만으로 창의성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연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창의성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고 공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정의는 창의성과 사회 · 문화적 요소간의 관계가 독창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사고 또는 산출물로서 창의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비교 기준으로 적용하여 독창성, 가치, 실현성을 평가한 결과이다. 기존의 문화, 사회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창의성의 유무와 탁월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즉, 창의성의 독창성은 특정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고 독창적이기만 해서는 더 이상 창의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 · 문화적 맥락에서 가치롭게 인정되며 실현될 때 창의적이라고 인정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성은 사회 · 문화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독창성, 가치, 실현성의 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창의성 모형



자료 : M. Csikszentmihalyi & R. Wolfe (2000)

>> 창의성의 독창성은 특정 아이디어나 산출물이 사회 · 문화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성은 사회 · 문화적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3. 창의성의 구성요소

창의성의 구성요소는 생물학적 요소, 개인적 성향, 인지적 요소, 미시 사회적 환경, 거시 사회적 환경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생물학적 요소는 뉴런, 호르몬, 조절유전자, 뇌 성장 등으로 설명된다. 개인적 성향은 모호성에 대한 인내, 위험부담이 높은 일에 대한 도전 정신, 희열 · 만족에 대한 기쁨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며, 인지적 요소는 일반지식, 영역 지식, 확산적 사고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시 사회적 환경은 가족, 친지 및 주거환경과 관련되며, 거시 사회적 환경으로는 이웃, 직장, 교육, 종교, 종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이에 포함된다. 여기서는 생물학적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요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개인적 성향과 인지적 요소

우반(Urban, 1995)은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창의성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우반은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크게 개인적 성향과 인지적 요소로 분류하였고, 요소별 하위요소를 포함한다(〈표 1〉 참조). 개인적 성향에는 과제 집착력과 집중력, 동기유발,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가 포함되며, 인지적 요소는 확산적 사고력, 일반 지식과 사고력, 특수영역의 지식과 기능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여섯 가지의 요소들은 창의성 계발의 핵심요소로서 서로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개인적 성향과 인지적 요소를 중심으로 창의성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은 특정 영역 지식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여 창의성을 발현하게 된다. 영역 지식의 변화를 창출하는 개인은 먼저, 영역의 기존 내용을 알고 영역의 규칙을 따라 학습해야 한다. 이 때 개인은 영역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은 특정 영역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 이 영역 지식의 규칙을 깨려는 개인적 성향을 발휘해야 한다. 셋째, 개인이 특정 영역 지식의 규칙을 거슬러 새로운 사고와 산물을 창출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사고와 산물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 1〉 우반(Urban)의 창의성 구성요소

구 분	요 소	하위요소
인지적 요소	확산적 사고력	독창성, 정교성, 유창성, 융통성, 연결시키는 능력, 재구성력, 재조직력, 문제 민감성 등
	일반지식과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 종합력, 기억 연결망, 포괄적 견해 등
	특정 영역 지식과 기능	영역별 지식과 기능, 전문성 등
개인적 성향	과제 집착력과 집중력	주제, 대상, 상황, 산출물에 집중하는 능력, 지구력, 집착력, 선택하는 능력, 열정 등
	동기유발	호기심, 지식과 탐구에 대한 욕구, 의사소통, 자기실현화, 헌신, 책무감 등
	개방성과 모호성에 대한 인내	실험하는 것, 즐기는 것, 위험감수에 대한 적극성, 비추종성, 자율성, 유머, 역행하거나 여유를 가지는 것 등

자료 : K. Urban. (1995)

1) 개인적 성향

창의성이 높은 개인의 특징적 성향으로서, 자율성, 습관 여론 등을 추종하지 않는 성향, 자극에 대한 개방성, 유연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내적 집착력, 자기중심적 성향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 성향

>> 창의성이 높은 개인은 때로는 자율성과, 자신감, 거친 남성적 성향과 민감성, 직관, 책임감, 섬세한 여성적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양면적인 개인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극도로 치우친 양면적 성별 성향과 함께 균형있게 조화된 성향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라고도 본다.

을 일관적으로 창의성이 높은 개인의 특징적 성향으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포괄적인 견해에서 창의성이 높은 개인은 양면성을 띤 역설적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창의성의 개인적 성향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민감성과 조잡성을 통합하거나, 고도의 지성을 순수성과 통합하는 것 등의 행동은 복합성으로 해석된다. 때로는 자율성과, 자신감, 거친 남성적 성향과 민감성, 직관, 책임감, 섬세한 여성적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양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극도로 치우친 양면적 성별 성향과 함께 균형있게 조화된 성향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라고도 본다. 즉 창의성이 높은 개인적 성향은 극도로 상반된 상황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 도전성, 자율성, 자기중심적 성향, 긍정적 자기 평가, 자부심, 자신감의 모든 측면을 수락하는 성향, 복잡성을 추구하는 성향, 애매모호한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성향 등을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지적 요소

창의성이 발휘되는데 요구되는 인지적 요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영역 및 특정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기반으로, 이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여 수정 · 발전시키는 사고력이다. 이에 따라 창의성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로서 문제 해결력, 일반 지식, 영역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창의성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요구되거나 발휘된다. 문제 해결과정은 '문제발견'과 '해결하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창의성에서의 '문제 발견'은 한 개인이 적극적, 조직적 태도를 보이면서 논쟁거리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문제발견'은 민감성을 발휘하여 문제에 민감하게 접근할 때 우수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해결하기'는 '난점이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과 '기존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문제(해결책)를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할 때, 최소한 일부분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크로플리와 우반(Cropley & Urban, 2000)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을 7단계의 창의적 단계 모형으로 제안하고 단계별 요소와 개인적 성향의 특징을 제시하였다(〈표 2〉 참조).

〈표 2〉와 같이 학습자들은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사고하게 된다. 창의성과 관련된 사고력은 수렴적 사고력과 확산적 사고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렴적 사고력은 가장 적합한 해답을 찾는 사고력을 말하고, 확산적 사고력은 대안적 가능성을 창출하는 사고력을 말한다. 여기서 사고력이란 기존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의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창의적 사고력은 기존의 정보를 토대로 그 다음 단계의 정보를 창출할 때, 이 정보가 새롭고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창의적 사고력의 과정은 특정 문제를 분석하고, 광범한 정보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정보에 연결하고, 기존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와 통합하여, 통합한 상태를 평가하고, 성공적 통합상태를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다.

일반 지식은 대체적으로 무의식중에 학교 밖의 광범한 경험에서 얻어진다. 일반 지식은 사고의 자원으로서

〈표 Ⅱ-2〉 창의성 단계 모형과 단계별 특징

단 계	과 정	결 과	동 기	개인적 성향
준 비 단 계	· 문제를 확인 · 목적을 확립 · 확산적 사고력	· 활동을 주도적으로 제시 · 일반 지식 · 영역 지식	· 문제해결(내적동기) · 성공에 대한 기대(외적동기) · 호기심	· 비판적 태도 · 긍정적 사고
정 보 수 집 단 계	· 인식하기 · 학습하기 · 기억하기 · 수렴적으로 사고하기	· 영역 지식 · 풍부한 인지요소	· 선호선 · 복잡성 · 열심히 노력하려는 적극성 · 성공에 대한 기대	· 풍부한 지식 ·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적극성
부 화 단 계	· 발산적 사고 · 연결을 만들기 · 두 개영역을 연결하기 · 연결망을 만들기	· 배열	· 저해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 모호성에 대한 인내	· 안정감 · 환상에 대한 허용 · 비추종성 · 도전성
조 명 단 계	· 새로운 구도를 인식하기	· 새로운 배열	· 직관 · 긴장을 완화	· 민감성 · 개방성 · 유연성
검 증 단 계	· 새로운 구도의 연관성, 효율성 검증하기	· 적절한 해결책 · 연관성 효율성 제시	· 결론에 도달하려는 욕구 · 질 높은 성취를 이루려는 욕구	· 현실성에 대한 민감성 · 자기 비판력
전 달 단 계	· 결론에 도달하기 · 피드백을 구하기	· 작동가능한 산출물 · 실현가능한 산출물 · 사람들에게 알리기	· 내적으로 만족스러운 산물에 대한 욕구 · 외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	· 자신감 · 자율성 · 확신을 가지는 용기
실현화 단 계	· 연관성, 효율성을 판단하기	· 교사에게서 판단받은 산출물	· 칭찬 받으려는 욕구 · 완벽함에 대한 욕구	· 강인성 · 유연성

자료원 : Cropley, A., & Urban, K. (2000)

새로움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학교 밖 학습을 학교 학습과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계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창의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영역 지식과 기능이 강조된다. 영역 지식은 창의성 사고와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창의성은 포괄적인 일반 지식과 영역 지식의 존재 하에 이를 다루는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역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사고는 기존에 이미 인정된 사고와 비교하여 독창성, 가치, 실현성이 인정될 때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고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되는 영역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나. 사회적 환경

역사적으로 창의성을 지닌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영웅으로 간주된다. 즉,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는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창의성이 단순히 개인의 독창적인 사고와 행위위주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정의 또는 평가될 수 없음을 부연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미시 사회적 환경으로서 가정 환경과 가족의 역할을, 그리고 거시 사회적 환경으로서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시적 사회 환경 : 가정 환경과 가족의 역할

창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자극을 주는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에 따라 성장시기 어린이의 잠재적 능력이 얼마나 계발될 것인가 결정된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56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람을 키워낸 가정 환경이 보통 사람들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특징들을 살펴보면, ① 자녀 가운데 막내들이 창의성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② 독립적 사고를 수락하고 창의적 과정을 독려하는 가정환경에서 창의성이 발현된다; ③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율적일 경우 창의성이 높은 자녀들이 많이 나타난다; ④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 한 두 개 있는 가정에서 창의성이 높은 자녀가 성장한다; ⑤ 창의성 계발의 결정적 시기에 교사나 부모의 긍정적인 격려로 자녀들이 창의성을 더욱 계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⑥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별명을 부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유머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농담, 장난하기를 즐겨한다.

이 밖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자신감이 많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어머니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며, 자녀는 보다 자유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게 된다.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어머니와 얽매이는 관계는 자녀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창의성이 높은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매우 상호협력적이며, 사랑을 잘 표현하고 서로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발표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가족의 역할과 가정환경으로서의 사회적 환경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살펴본 연구문헌들을 토대로 특정요소들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예시들은 서양사회의 문화권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로서 단편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마빌(Amabile, 1996)은 가정 환경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녀의 창의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자유를 허락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적당한 수준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규칙보다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며, 성적보다는 성취를 강조하고, 창의성을 격려하고, 부모가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녀에게 인식시키고,

>> 미첼과 두덱(Michel & Dudek, 1991)은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자신감이 많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어머니가 이러한 경향을 보이며, 자녀는 보다 자유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이상을 가지며, 유머가 있는 가정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2) 거시적 사회 환경 : 사회 분위기

가정 환경이나 가족의 역할의 영향 못지 않게, 사회 분위기가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아리에티(Arieti, 1976)에 따르면, 창의성을 격려하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창의성을 지닌 사람이 인정받고 독창적 능력을 발현하도록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회, ② 새로운 자극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③ 바로 눈앞의 만족이나, 쾌락 등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④ 문화적 매체가 사회 계층의 차별없이 제공되는 사회, ⑤ 심한 압제나 억압과 같은 시기를 겪고 난 후 자유가 제공된 사회, ⑥ 다양한, 특히 극적으로 상반되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거나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 ⑦ 비정상적인 사고나 견해를 인내하는 사회, ⑧ 다른 문화와 사고를 가진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⑨ 창의성에 대한 보상이나 진급이 제공되는 사회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을 조장하는 사회의 예로서, 이스라엘은 1901부터 1970년사이에 노벨상 수상자가 다른 민족에 비해 8배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낸 유대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rieti, 1976). 첫째, 교육을 사랑하는 사회이다. 둘째, 여성에 대한 편견이 가장 낮은 사회이다. 창의성이 높은 여성들 가운데 유대인의 수는 매우 높다. 셋째, 수세기에 걸쳐 억압을 받은 사회 체제의 경험으로 인하여 사회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망이 매우 높다. 넷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매우 민
구한
서 탈
한 배
용으
가지

윌리엄 슈버트

인터뷰 / 김영주(시카고 통신원, ykim30@uic.edu)

윌리엄 슈버트(william H. schubert) 박사는 교육과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학교 내·외 교육과정 이론, 교육사, 교육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 연구를 한다. 교육과정사 연구회 회장, 듀이(John Dewey) 협회의 회장, 북미 교육 연구 협회(AERA: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부회장이자 교육과정 분과 회장(1999~2001)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학 교수회의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활발한 저술과 학회 활동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컨설턴트로도 활약하고 있는 슈버트 박사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슈버트 박사는 미국 교육학 교수들 사이에서 최고의 교육학서로 뽑힌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지난 1992년 번역 출판되기도 했던 「Curriculum : Perspective, Paradigm, and Possibility」와 「Turning Points in Curriculum : A Con-temporary Curriculum Memoir」외 다수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Teacher Lore: Learning from our own Experience」와 미국 교육학 협회의 비평가가 주는 상을 받은 「Reflections from the Heart of Educational Inquiry : Understanding curriculum and teaching through the arts」외에 다수를 편저서가 있으며, 지금까지 150편이 넘는 논문과 200회 이상의 학회 발표를 하는 등 왕성한 학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Q 교수님, 한국과는 벌써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A 네, 지난 1995년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초등 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열린교육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Q 교수님의 한국 경험은 어떠하셨는지 궁금한데, 가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A 한국인들이 참 친절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 역사가 인상에 남습니다.

Q 지난 2001년 시애틀에서 있었던 북미 교육 연구 협회(AERA)에서 교수님의 교육과정 분과 회장 연설이 끝난 후 한 교육학자가 슈버트 교수님을 미국 교육계의 스승이요 지도자라고 극찬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 교육 사상과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교수님은 과연 어떤 동기에서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교육자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할머님, 고모 할머님 네 분이 교사로 일하셨죠. 오히려 이런 환경이 한때는 교직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청소년기의 반항심에서 나온 생각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스포츠 기자, 건축가, 심리학자, 생물학자 이런 직업에 대해 더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대학 초기에 이와 관련된 공부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건축이나 심리학, 종교학 기타 등등 무엇이나 결국은 삶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결국 삶의 질 향상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자연스럽게 삶이라는 것에 관심이 가더군요. 그리고는 사람으로서 한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철학적 연구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다른 이들이 삶의 방향을 찾고 목적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과정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Q 교수님의 저서들을 보면 교육과정, 교육이론, 교육사, 교육연구, 교육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영역이 광범위한데요, 특히 「Teacher Lore(티쳐 로어)」라는 책은 그 제목부터 저의 관심을 끕니다. 교수님께서 「Teacher Lore」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 Lore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세상과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 역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Teacher Lore」를 통해서 교사들에게 스스로의 경험에 대한 반성과 다른 교사들을 통해 교사로서 동시에 학습자로서 배우고 성장할 것을 장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자나 연구가들 역시 교사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쌓은 통찰력과 지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 「Reflections from the Heart of Educational Inquiry」는 교육에 대한 심미적 접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예술이 가르치는 것과 교육 연구에 있어 가져오는 장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대리 경험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과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상력과 인식력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술적 · 심미적 접근은 교육활동과 연구를 하는데 시각을 넓혀주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교수님은 교육과정 학자로서 그 누구보다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교육과정을 무엇으로 정의하십니까?

A 교육과정은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삶과 자신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의 크고 작은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또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삶이 계속되는 한 인간의 교육과정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Q 교육과정이 '삶' 그 자체라는 말씀이신가요?

A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교육과정을 '삶의 여정' 혹은 '삶'이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요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교훈을 준다는 점이고 우리는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학교만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보는데, 이는 교육의 범위와 이에 따른 교육적 논의의 범위를 협소화하는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정, 매스 미디어, 보이스카웃, 걸스카웃과 같은 여러 집단 활동, 교회, 지역 사회 활동, 여러 취미 활동 등등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학생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험(학교 외 교육과정)은 학교가 주는 영향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교육이라는 것 역시 삶을 이루는 일부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교육과정을 풍요롭게 하는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물질과 권력 탐욕적인 사회에서 교육은 그 행로를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남용이 불러온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가 사람보다 물질을 중요시하고 물질 소유에 온통 정신을 쏟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물질에 그 중심을 두게 되고 이에 대한 탐닉에 빠지게 되면 인간 존재에 대한 참 의미를 물적 소유와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그 사람이 가진 물질적 권력적 배경으로 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 해방이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질 획득에 가치를 두는 사회 속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더 이상 인간 존재로서의 의미와 삶의 방향을 찾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회는 교육을 사회의 물리적, 기술적 발달을 가져올 노동력 생산의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고, 개인은 교육을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과 사회 속에서 계층 상승의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력 공급을 원하는 사회와 값어치 높은 노동력이 되어 사회적 계층 이동을 꿈꾸는 개인의 욕구가 맞물려 인간적 성장과 인간성 해방이라는 교육 본래의 의미가 '졸업장 따기', '자격증 따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인간 공공의 이익,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민주 시민 교육을 키우는 공간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사유를 위한 전쟁을 치르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사 의식 있는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의 삶과 인간 존재의 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천하고자 해도 이는 사회의 현실, 교육 체제의 현실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게 되고 맙니다.

Q 교육이 경제적 노동력을 길러내는 수단, 물질과 권력 획득의 수단, 사회적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한국 교육에 여러 가지 난제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A 시험 성적 올리기 교육과 출세를 위한 교육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한국이 겪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 교육도 역시나 같은 현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의 수단화와 의미 변질로 고통받지 않는 국가나 사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는 한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교육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교수님 말씀대로 삶이 교육의 중심에 서고 바람직한 인간 성장을 위해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혁신적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 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도 구성주의나 통합 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합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되고 있는 학교활동을 보면 실은 공통 교과 활동 혹은 관련 교과의 연결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 교육은 아닙니다. 물론, 구성주의에 입각한 교과 통합이 단순한 암기 교육보다야 낫습니다

만, 이는 다분히 지적 발달에 치우친 개념으로 정치 중립적입니다. 사람의 삶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적 인간, 존재론적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 자체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회적 환경이나 정치적 경제적 억압이나 불평등이 한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참 인간성 해방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Q 그럼 교수님이 보는 혁신적 통합이란 무엇인가요?

A 먼저, 통합은 자아가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아 교육을 초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애정을 가지며 현재 사회의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공평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사회 정의라는 문제가 교육 과정 구성의 중핵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급진적, 혁신적 통합 교육이란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그 구심점으로 하는 고차원적 통합을 말합니다. 기회 균등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 나만의 문화와 가치관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복수 문화 혹은 여러 문화 공존의 문제, 평등의 문제, 정치적, 경제적 체제 속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하는 집단의 문제와 같은 공공의 문제와 정의의 이념이 교육 활동의 핵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자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속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라 믿습니다.

Q 그 고차원적 통합, 혁신적 통합이라는 것이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만…….

A 좋은 삶이라는 것,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보다 나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정치성을 띤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교육이란 가치 지향적인 문제이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이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Q 앞서 교수님 말씀대로 혁신적 통합이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이라는 점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앞서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이 노동력 생산 수단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상승의 도구화로 전락한 오늘날 '정의'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중핵적 통합 교육 활동의 실현이 가능할까요?

A 저 스스로도 물질에 대한 탐닉과 이를 사유화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경쟁이 교육을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혁신적 통합 교육이 손쉽게 실현된다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급진적인 변화인 만큼 많은 저항과 거부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Q 그렇다면 출세에 눈먼 교육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성 발현이라는 어렵지만 교육 본질에 입각한 실천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현대 사회는 교육을 개인의 특권과 안위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이런 관점을 바꾸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 역시 교육이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야를 넓히는 것이고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즉, 교화가 바로 교육이니까요.

더 나아가 학생, 교사, 행정가, 정책 입안자 등 모두 '어떤 지식이 왜 가치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과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 윌리엄 슈버트 교수는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 보다 아름다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수는 '삶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이라고 답한다. 삶 자체가 배움의 과정이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는 사람들을 통해 배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의 교육 과정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감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하는 것이며, 특히 사람과 사회의 성장이라는 윤리적 임무를 떠맡은 교육인들에게 더 없이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한다. 더 나아가 그런 윤리적 책임감을 다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어떤 삶이 바람직하며,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아가야 한다고 슈버트 교수는 말한다. 교육

교육관련 세계의 연구

글 / **김은주**(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장, bonnyk@kedi.re.kr)

R/e/s/e/a/r/c/h findings

[학생들의 봉사 학습]

봉사학습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지역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3개 학교의 6학년에서 8학년 학생 1,15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봉사학습과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의 관계, 둘째, 봉사 학습과 중학생들의 학업과의 관계, 셋째, 적정한 봉사학습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넷째,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효과가 학생들의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봉사 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봉사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고, 그들의 부모에게 학교에 대해서도 보다 자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봉사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교가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봉사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급에서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줄어드는 반면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자기 효능감이 증진됨을 알 수 있었다.
- 봉사학습이 학업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봉사 시간은 3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봉사학습 효과는 6학년 여학생에게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과제명 The effects of service-learn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social responsibility and academic success

연 구 자 Peter C Scales et al.

연구발표시기 2000.8

출 처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00.20(3). 332-358

[교사의 자격]

부시 행정부의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법(No Child Left Behind Act)'과 관련하여 미교육부가 의회에 제출한 교사의 질(teacher quality)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소개 한다.

의회는 2005-2006년까지 각 학급에서 높은 자격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재능이 있는 교사에게 지도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이 우수해질 기회를 더 많이 부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급에서 우수한 교사에게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핵심 교과의 교사들에 대해 공인된 자격과 담당 교과에 대한 강력한 학문적 배경을 중심으로 교사들을 선발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내용

· 높은 자격을 갖춘 교사는 주 전체에서 인정하는 교원 인증서(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안적인 과정을 이수하여 획득한 자격증도 포함)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에서 실시하는 교원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주에서 학생지도를 위해 부여 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신규 임용되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요건

- 초등교사는 최소한 학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주에서 실시하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에 대한 지식과 읽기, 쓰기, 수학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영역에 대해 실지로 수업을 해서 보여야 한다.
- 중 · 고등학교 교사는 최소한 학사학위는 소지하고, 각각의 전공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을 실지로 수업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엄격한 주 수준에서의 전공영역별로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주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 현직 교사로서 높은 자격의 교사는 최소한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신규 임용교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테스트는 선택하거나 주에서 정한 통일된 평가 기준에 의해 모든 교과에 대한 실지 수업을 통해 평가한다.

연구 과제명 Meeting the Highly Qualified Teachers Challenge : The Secretary's Annual report on Teacher Quality
연구기관 U.S. Department of Education
연구발표시기 2002.6
출 처 www.ed.gov/offices/OPE/News/teacherprep/index.html

[남자어린이와 학교생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성별에 따라 학교에 진학한 직후와 진학 후 2년 뒤에 그들의 학급 내에서의 학습 행동과 인지된 성취도를 평가한 연구를 소개 한다. 연구 대상은 저소득층(N=85)과 중산층(N=63)의 평균 나이 5년 3개월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입학 시와 입학 2년 후를 추수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는 지 여부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로 5세에 보이는 뚜렷한 차이가 7세에도 작용하는지를 시험했다. 학습행동척도(Learning Behaviours Scale)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산만함, 이해력, 비협조성 등을 평가하고, 학업성취도와 교사들의 아동 각각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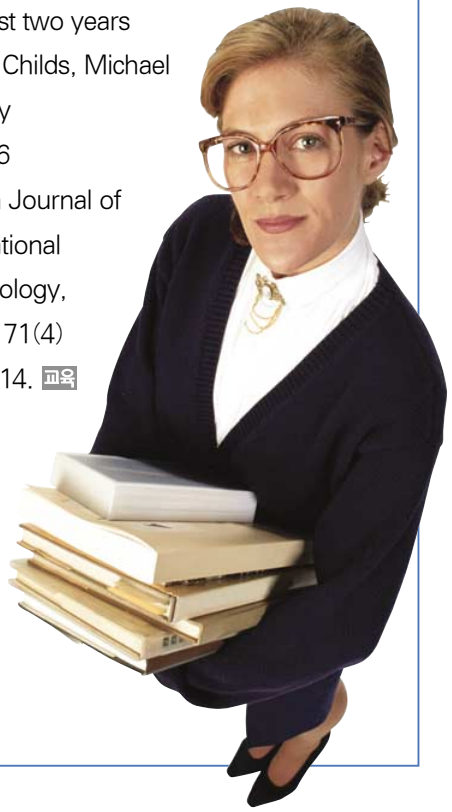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린이의 학교 학습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경제적 지위는 5세와 7세 어린이 모두에게 학습행동 하부척도율과 교사의 개인적 인식에서 매우 제한된 예시요소로 나타났으나, 5세의 어린이에게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도와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 저소득층의 남자어린이와 중산층의 남자어린이, 저소득층의 여자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학습면에서 집중도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의 남자어린이가 특히 산만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입학 2년 후의 조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남자어린이들에 있어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행동수준, 산만함, 교실 내에서의 정착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 초기의 부적응으로 인해 교사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제명 Boys starting school disadvantaged: Implications from teachers' ratings of behaviour and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연 구 자 Garry Childs, Michael McKay
연구발표시기 2001.6
출 처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1. 71(4) 303-314. 교육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동양적 사상의 뿌리를 찾고 싶을 때 •••

「카잔차키스의 천상의 두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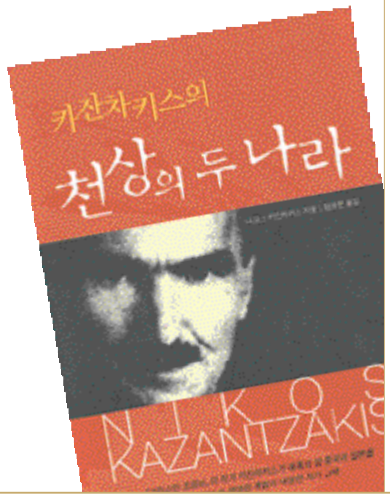
니코스 카잔차키스 지음 / 정영문 옮김 / 예담

『카잔차키스의 천상의 두 나라』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930년대 중반 중국과 일본 등 동양을 여행하고 쓴 책으로 이후 카잔차키스가 발표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동양적 사상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카잔차키스는 작가 특유의 예민한 감각을 발휘하여 신비로운 전통과 정신을 가진 동양의 과거와 현재를 예리하게 파헤치고 관찰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산업화와 제국주의로 무장한 서양의 입장에서 본 당시의 동양은 모순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비참하기까지 한,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지만 카잔차키스는 그 이면에서 매혹과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발견하고 장차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될 중국과 일본의 저력을 포착한다.

또 중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감탄과 찬사로 가득한 『카잔차키스의 천상의 두 나라』에서 종교, 음악, 미술, 연극, 건축 등에 대한 카잔차키스의 탁월한 안목과 생생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세속적인 열망이 넘치는 사원, 지저분하고 악취나는 뒷골목, 비인간적인 현실의 축소판인 홍등가에 서 있는 카잔차키스의 내밀하고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며 카잔차키스의 여정과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와 이집트, 인도를 건너 이제 중국과 일본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르네상스의 장이 될 것"이라는 그의 단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동양을 경험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을 되짚어 보고 싶을 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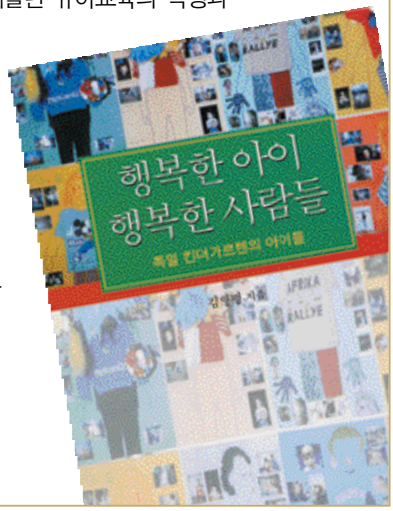
「행복한 아이 행복한 사람들」

김영명 지음 / 학지사

우리의 아이들은 즐기며 배우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조기교육의 열풍에 휩싸여 늘 앞선 학습을 하기에 바쁘다.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하지만, 너무나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한 아이 행복한 사람들』의 발단이 된 베를린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은, 이러한 우리의 교육 현실에, 놀이를 통해 배워 가는 그리고 성장해 가는 아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놀이와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한 킨더가르텐의 교육은 마치 어린 시절의 소꿉놀이처럼 놀이 자체를 통해 자신이 가져야 할 역할이라든지 생활의 지혜 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은 독일 킨더가르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아울러 베를린 킨더가르텐의 특징과 발달, 유아교사의 근무여건, 사회환경 등 교육활동을 둘러싼 제반 여건과 상황 등을 담아 보여주고 있다.

놀이와 현장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시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베를린 킨더가르텐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나 보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교육 현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지향점을 제시해 줄뿐이다. 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저자가 정리해 준 '한국 교육 현실에 적용 시 고려할 만한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교육성취도 비교', '베를린 유아교육의 특성과 교사의 근무조건, 사회환경' 등은 현장에 있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걸맞는 문화적 소양을 쌓고 싶을 때 •••

「시각예술과 디자인의 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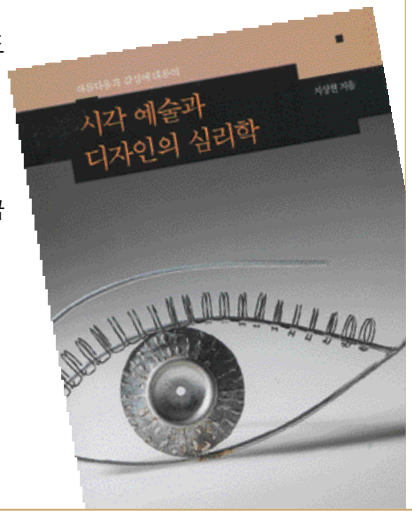
지상현 지음 / 민음사

한성대 미디어 디자인학부 교수인 저자는 홍익대 미술대와 이 대학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심리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보기드문 이력의 소지자이다. 이 같은 경력을 토대로 인간의 감성에 디자인 창작과 심리학 연구를 접목해 이것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풀어낸다. 시각 예술과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아름다운 대상이나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화가 김환기의 그림들이 투박한 질감이지만 향토미가 느껴지고, 미켈란젤로의 '노아의 홍수'는 인물들 사이의 거리와 크기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지각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새로운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디지털 시대에 자칫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는 기존의 미의 원리도 소개한다. 수학적 비례를 적용해 얼굴 대 신체 길이가 1대 8이라는 황금 비율로 인체를 제작한 그리스 조각이나 희고 갸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큰 귀를 귀상(貴相)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 또한 '코카콜라'처럼 특정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쟁사에서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며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 문화 · 경제 · 기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세계무대에서 한국 기업이 취약한 부분은 제품의 질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라며 "디자인이나 감성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나 개념을 개발해야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디자인의 시대'라고도 불리는 21세기에 이 책은 문화 산업과 마케팅 등에 관심을 갖고있는 독자들에게 안내서로 적극 추천할 만 하다.



마음'안'과 마음'밖'이 갈등할 때 •••

「앎과 삶 그리고 덕」

조무남 지음 / 교육과학사

『앎과 삶 그리고 덕』은 30년 동안을 '도덕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언어철학적 방법으로 연구해 온 저자가 도덕교육 방법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는 다른 방법까지도 모색하면서 자신의 도덕교육론 체계를 세워 나간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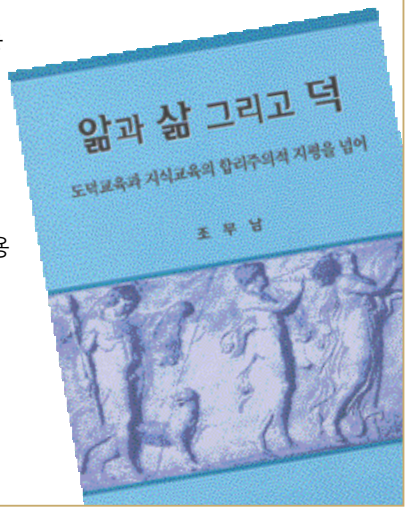
머리말에서 저자는 우선 "과학주의에 의해 상실된 교육의 의미와 이로 인해 왜곡된 교육학의 학문적 틀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종래의 분석철학자로서는 하기 어려운 '양심선언'에 가까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어 서론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덕은 지식이다"라는 명제가 도덕교육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다.

'윤리학, 의미론 그리고 도덕적 관념'이란 큰 제목의 제1부는 꼬장꼬장하게 언어를 분석하고 여러 윤리학설을 섭렵하며 취사선택을 해 가면서 이 책의 기초작업을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3장의 맨 마지막 문장 즉, 도덕적 관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신의 표현이기에 마음 '밖'에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개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제2부 '앎과 삶과 도덕교육'에서 저자는 연구의 모티브를 이렇게 드러낸다.

"도덕적 지식의 범위는, 오히려 철학적 인식론과 행동 분석의 한계를 넘어, 인간정신의 그윽한 어둠 속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이런 뜻에서, 모든 인간행동은 합리적 지식의 소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담겨 있는 지적 낭만주의를 나는 철저히 거부한다. 그리고 이런 뜻에서, 오직 이런 뜻에서만 새로이 규정하는 도덕적 지식은 '덕'이다."

분석철학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선언이다. 저자는 연구의 결과로 얻은 이 '신념'이 도덕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일반에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의 일상이 한없이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

「나는 늘 아프리카가 그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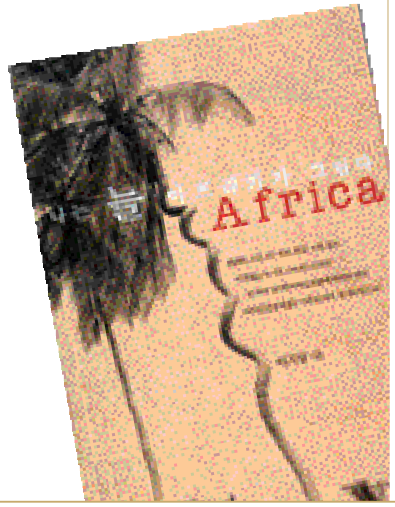
이지상 지음 / 디자인하우스

『나는 늘 아프리카가 그립다』는 저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전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 저자의 아프리카 여행담이다.

여행 전문가인 저자가 생생한 눈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체험한 생명의 땅 아프리카 여행의 벅찬 감동을 전한다. 반복되는 도시 생활에서 오는 기계적 지루함과 여러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을 맘껏 누비는 원초적 해방감과 존재감을 맛보게 하는 노마드적 휴머니즘의 정수이다.

책장을 넘기자마자 등장하는 본문 목록의 배경과 각각의 장(章)마다 들어가 있는 삽화는 작가가 케냐에서 만났다는 가난한 현지 화가의 그림처럼 정감 어리다. 작가의 서문과 프롤로그에서 밝혔듯 이 책에 쓰여진 글들은 아프리카에 관한 오랜 그리움과 진한 애정의 소산으로 이루어진 여행의 결과물들이다.

아프리카의 '숨결, 열기, 풍요, 그늘, 희망'이라는 다섯 Paragraph를 통해 작가는 자신이 느낀 아프리카에 관한 단상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글들을 통해 감지되는 것은 여행기에서 흔히 보여지는 피상적 경관의 묘사가 아닌, 그 속의 내밀한 속살들을 보듬어 안으며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엔 우리가 흔히 갖게 마련인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과 편견들이 전복될 수 있는 즐거운 기회들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지와 수많은 야생의 동물들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그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이고, 미개하고 야만적이며 아직도 원시적 생활을 고수하고 있을 것만 같은 관념의 땅의 현재적 삶에 대한 고찰이다.



인간이 왜 교육되어져야 하는지 궁금해 질 때 •••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 인간학」

루돌프 슈타이너 지음 / 김성숙 옮김 / 물병자리

『교육의 기초로서의 일반 인간학』은 발도프르학교를 창설한 철학자이자, 교육사상가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 중 핵심적인 것으로 참다운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논한 책이다. 인간의 '혼'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부터, 사고와 감정, 의지 등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왜 교육은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어야 하는가의 이유도 제시된다. 페스탈로찌, 프뢰벨의 뒤를 이어 유럽 교육 철학의 웅혼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슈타이너의 사상이 편안하게 펼쳐져 있다.

인간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교육이 페스탈로찌, 프뢰벨, 슈타이너로 이어진 교육사상의 핵심이었다면, 이 책은 바로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그 핵심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가르치고 교육되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성장과정 중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인식과 각 개인의 소질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가르침과 수업의 기본 바탕은 참된 인간학을 근거로 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하여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묻지 말고, 그 인간에게 어떤 소질이 있으며 무엇이 그 속에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사회에의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속에서 전인적 인간관에 기초한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은 정신적 · 물질적 빈궁에 빠져 있는 이 사회를 위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들 때 •••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말라」

박홍규, 프란시스코 페레 지음 / 이훈도 옮김 / 우물이있는집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영국 서머힐보다 한 세대나 앞서 있었던 페레의 자유학교. 이 책은 위대한 교육자이며 자유인이었던 페레의 생애와 사상을 살핀 책이다. 그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그의 자유로운 교육 사상으로 인해 사형당한 교육 순교자이다. 1부는 박홍규가 썼고, 2부는 페레가 쓴 글을 수록한 것이다

영국의 '서머힐' 보다 한 세대나 앞선 1901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자유학교' 를 세운 프란시스코 페레(1859~1909)는 세계사에서 유일한 교육 순교자다. 교육의 국가화에 반대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 그는 군사반란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누명을 쓰고 총살당했다. 한 세기쯤 지난 오늘, 한국인의 시각에서 쓴 페레의 평전은 '자유교육' 의 기본이념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고, 척박한 한국사회의 교육풍토를 돌아보게 한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 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이 교차한 정치적 격변기의 스페인. 권력에만 몰두해 고위직 쟁탈에만 혈안이 된 위선적 혁명가들과 공교육을 장악한 강고한 카톨릭 교회가 민중을 착취하고 있을 때 페레는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다 목숨을 잃었다. 이제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자유교육 실험은 권위주의가 뿌리깊은 교실에서 수험경쟁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질 낮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교사의 독재가 사회의 독재를 허용하는 기반" 이며, "학교의 비민주화는 국가 전제주의의 지름길" 이다. 저자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고 충고한다. 어떠한 명분도 '권위에 의한 억압' 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책무는 "아이들을 가르쳐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 이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 •••

「두개의 한국: 전직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바라본 한국 근대사 비록」

돈 오버도퍼 지음 / 이종길 옮김 / 길산

『두개의 한국 : 전직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바라본 한국 근대사 비록』은 한국에 정통한 미국 언론인이 쓴 한국 현대사 이야기이다.

이 책의 저자 돈 오버도퍼는 6 · 25 전쟁 때 미국 포병장교로 참전한 참전용사이자 워싱턴포스트를 포함, 성년기의 대부분인 40여 년을 언론인으로 활동해 왔다. 참전이라는 인연은 그의 기자생활동안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현재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그의 활동이 거둔 결실이다. 97년 나온 이 책은 최근까지도 판을 바꾸며 한국의 변화하는 상황을 담고 있는 진행형의 한국 보고서이다. 남북분단을 시작으로 전쟁, 유신 정권의 등장과 박정희 암살, 남한의 민주화와 서울올림픽, 북의 전쟁준비와 핵개발 논쟁, 김일성의 죽음, 구 소련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한 · 소 정상회담의 성사, 그리고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까지 그는 한반도 남북의 두 정권과 그 정권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저널리스트의 글답게 생생한 현장 사례를 담아 지루하지 않다.

그는 한국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규정한다. 변방의 국가이지만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처럼 세계의 무관심 속에 남겨지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 · 일 · 중 · 러 등 세계 4강의 안보와 이익이 교차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한반도의 '대단원' 이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연유를 밝히기 위한 기록이라 정의한다.

'독자의 소리'

강경철(대전 유성구)

『교육개발』에서 매번 1가지 주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다뤄준다. 자세히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이번 7 · 8월호는 새로우면서도 유용한 특별기획이었다. 미래한국교육의 정책적 논거라는 제목에 걸맞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갈등의 문제이면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내용들인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논리와 경제논리의 비교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다루어주었다. 평소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쉽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 호에도 이런 내용의 기획이 종종 있기를 기대해본다.

성미희(부산 해운대구)

『교육개발』 중 '세계의 교육'에 소개되는 해외의 교육관련 내용기사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이기에 다른 부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페이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인지 그곳의 사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교육사정을 알리는 차원이 아닌 그곳의 교육이슈에 대한 정책이나 연구들과 같은 대안들을 소개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참고자료가 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욱더 유익한 『교육개발』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진수(서울 동작구)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서는 『교육개발』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로, 그리고 종종 교육관련 연구자료 등을 찾고자 도서실에 방문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7 · 8월 호를 보니 한국교육개발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여러 교육계의 유명인 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의 옛 이야기를 소개했던데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에 있어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특별기획으로 다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이 앞장서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EDUCATIONAL DEVELOPMENT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이종재
홍보출판심의위원회
김흥주(위원장) 공은배 구자억
김정래 김정원 박재윤 백은순
신상명 이찬희 정택희 최상근
홍보출판팀장
구자억
홍보출판팀
채경은 정재기 이경희 이순희

디자인
경희정보인쇄(주) 디자인팀
아트디렉터
이제표
교정 · 교열
김지영
편집디자인
서경미
일러스트
안성구
사진
채경은
인쇄
경희정보인쇄(주)

home page : www.kedi.re.kr
e-mail : keditor@kedi.re.kr

ISSN 1228-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2년 8월 25일 발행/격월간
등록번호 문화바02718
등록변경/2001년 4월 11일
값 4,500원

K O R E A N E D U C A T I O N A L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KEDI 도서회원에 가입하시면

KEDI의 최신 연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0년간
국가 수준의 교육목적, 방향, 정책, 전략을 연구해 온
국내 최고의 교육분야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분야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87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EDI가 발간하는 최신 연구보고서를 받아보시는 순간,
귀하께서는 가장 앞서가는 교육자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
KEDI 도서회원으로 함께 하십시오!

· 회원 자격 및 특전

(1) 회원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짐
(2) 본원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교육개발』(연 6회),
『한국교육』(연 2회) 우송
(3) 당해연도 『연구보고서』10여종 우송 (익년도 3월중)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와 함께 회비 납부

· 연 회 비 : 1구좌당 120,000원

· 입금계좌 : 011916-0006202 (우체국)
070-01-0379-171 (국민은행)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문 의 처 : Tel : 02) 3460-0408, 0234
Fax : 02) 3460-0151

한국교육개발원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02 • 3460 • 0114 www.kedi.re.kr

연구보고서 !

이제 CD-Title로 만나세요.

2001년 연구보고서

-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연구 (II)
- ◆초 · 중학생의 지적 ·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연구 (II)
  - 초등학생 대상 -
- ◆유아교육 지표 개발
-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 ◆초 · 중등 사이버교육체제 개발
- ◆창의성 계발교육 실태분석 및 전략 구안
- ◆학교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학교컨설팅 사업 (II)
-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 -
- ◆OECD 교육지표 사업(INES)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 ◆영연방 국가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 영국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 ◆인적자원 조사 통계 체제 구축 방안
-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재구조화
- ◆평생학습체제 종합 발전 방안 (II)
-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 ◆국가 수준의 종단적 교육조사 설계

본 CD-ROM타이틀에 수록된 보고서는 2001년도 본원에서 수행된
기본연구과제중 본원의 홍보지침과 연구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임.

한국교육개발원은 2001년도
연구보고서를 CD-Title로 제작하였습니다.

■CD 구입문의 : (137-791)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전산정보팀
TEL : 02-3460-0407 (book@kedi.re.kr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교육개발 2002년 9 · 10월호 통권135호 2002년 8월 25일 발행 격월간 등록번호 문화바02718 등록변경 2001년 4월 11일 값4,500원